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1월호 통권 제13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2021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 점검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내용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1월호 통권 제13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Ⅰ. 경제동향 6
Ⅱ. 산업고용동향 32
Ⅲ. 해외경제동향 60

경제·산업현안 81

Ⅰ. 2021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 점검 82
Ⅱ.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내용 89
Ⅲ.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95
Ⅳ.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101

경제·산업이슈 109

Ⅰ.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1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ART 1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

Ⅰ. 경제동향 ····· 6
1. 생산 ····· 6
2. 소비 ····· 8
3. 투자 ····· 10
4. 대외거래 ····· 15
5. 소비자물가 ····· 18
6. 금융시장 ····· 21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29

Ⅱ. 산업고용동향 ····· 32
1. 제조업 동향 ····· 32
2. 서비스업 동향 ····· 42
3. 에너지 및 원자재 ····· 46
4. 부동산 ····· 50
5. 고용 ····· 52
6. 인구 ····· 58

Ⅲ. 해외경제동향 ····· 60
1. 미국 ····· 60
2. 중국 ····· 64
3. 유로지역 ····· 68
4. 일본 ····· 70
5. 러시아 ····· 73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 75
[주요 경제정책] ····· 78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9	2019		2020						
	연간	3Q	4Q	1Q	2Q	3Q	4Q	10월	11월	12월
전산업생산	0.6	0.7 (0.9)	1.9 (0.9)	1.6 (-1.2)	-3.4 (-3.5)	-0.5 (2.6)	-	-2.6 (-0.1)	-0.6 (0.7)	-
광공업생산	-0.1	0.3 (1.9)	2.2 (1.1)	5.1 (0.1)	-5.1 (-7.1)	1.0 (5.7)	-	-2.0 (-1.1)	0.5 (0.3)	-
서비스업생산	1.4	1.5 (0.6)	1.9 (0.7)	-1.1 (-3.0)	-3.4 (-1.5)	-1.7 (1.9)	-	-2.5 -(1.2)	-0.4 (0.7)	-
소매판매액	2.4	2.2 (0.3)	3.4 (1.9)	-2.9 (-6.4)	1.9 (6.5)	1.8 (-0.7)	-	-0.1 (-1.0)	-1.5 (-0.9)	-
설비투자지수	-6.2	-1.9 (1.0)	3.7 (4.3)	7.0 (-3.0)	6.3 (5.6)	7.8 (-0.2)	-	-0.9 (-3.2)	5.7 (3.6)	-
건설기성액	-6.9	-8.2 (-3.5)	-2.9 (1.0)	0.3 (4.1)	-4.1 (-4.6)	-2.1 (-4.2)	-	-8.7 (0.0)	-0.8 (2.1)	-
수출(통관)	-10.4	-12.3	-11.8	-1.8	-20.3	-3.4	4.2	-3.8	4.1	12.6
수입(통관)	-6.0	-4.1	-9.7	-1.8	-15.9	-8.9	-1.9	-5.6	-1.9	1.8
경상수지 (억달러)	600	192	181	133	58	241	-	116.6	89.7	-
실업률	3.8	3.3	3.1	4.2	4.4	3.6	3.7	3.7	3.4	4.1
취업자수 (천명)	301	366	422	288	-407	-314	-441	-421	-273	-628
소비자물가	0.4	0.0	0.3	1.2	-0.1	0.6	0.4	0.1	0.6	0.5
원/달러환율	1,166	1,194	1,176	1,195	1,220	1,188	1,116	1,142	1,115	1,095
국고채금리 (3년)	1.53	1.28	1.41	1.23	0.92	0.85	0.95	0.91	0.97	0.97

주: 1. ( )안과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감정원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이 서비스업에서 지속되고 고용상황이 악화

■ **수출이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설비투자도 확대**

- 2020년 12월 수출은 일평균수출액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큰 폭(12.6%) 증가
- 설비투자는 전기및전자기기 등 기계류 투자 위주로 증가하고,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이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기개선 흐름이 나타남

■ **그러나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와 이에 따른 방역조치의 강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취업자수 감소폭이 다시 확대됨**

- 대표적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10~11월 중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이후 상승세에서 12월 큰 폭으로 하락(9월 79.4→10월 91.6→11월 97.9→12월 89.8)
- 전체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연중 최대 감소폭을 기록(12월 62.8만명 감소)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 둔화 및 낮은 서비스물가 수준이 유지되며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생산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서비스 물가는 집세 물가 상승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추가시행 등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

- 농축수산물(9.7%), 서비스(0.4%), 공업제품(-0.9%)

■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를 기록하여 2019년(0.4%)에 이어 0%대 중반의 매우 낮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

12월 금융시장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을 배경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과 주가 상승이 지속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현상 속에 미국·영국의 백신 상용화 기대, 수출 호조로 전월보다 월평균 20원 하락한 1,095원을 시현(연평균 원/달러 환율: 2019년 1,166원, 2020년 1,180원)**

■ **주가(KOSPI)는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증가,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기조 유지, 백신 상용화 기대감 등으로 전월말(2,591) 대비 10.9% 상승한 2,873을 기록**

■ **국고채금리는 3년 만기물이 전월과 동일한 0.97%, 10년 만기물은 장기채 수급불안과 경기회복기대가 반영되며 전월보다 0.07%p 상승한 1.68%를 나타냄 (연평균 국고채금리(3년만기): 2019년 1.53%, 2020년 0.99%)**

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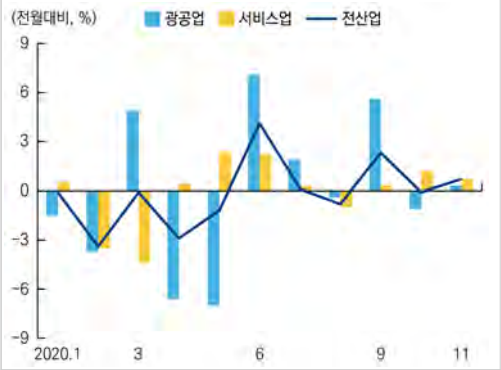
1. 생산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모두 늘어 전월대비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7.2%)와 전자부품(7.4%) 등에서 늘어 전월에 비해 0.3% 증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금융상품 거래 증가로 금융·보험(4.6%)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그림 1]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금융·보험업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11월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과 동일하며 제조업 재고율은 하락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과 동일한 73.8%를 기록했으며 전년동월(73.0%) 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냄(2010년 이후 제조업 평균가동률 평균은 75.6%)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9월)74.0→(10월)73.8→(11월)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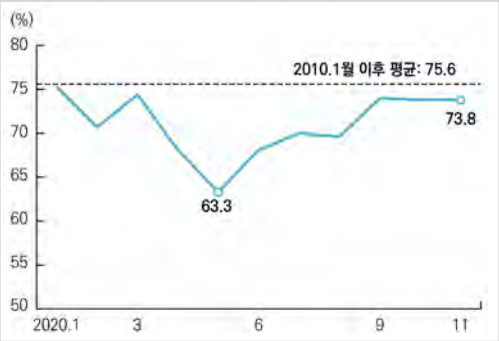
■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7.0%), 기타기계및장비(5.0%) 등에서 늘어 전월에 비해 0.3%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1차금속(-5.2%), 자동차및트레일러(-3.3%)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

-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출하가 늘고 재고가 줄어 전월(109.0%)에 비해 낮은 107.4%를 기록

- 재고/출하 비율(%): ('20.9월)108.6→(10월)109.0→(11월)107.4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지수)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그림 3]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4] 제조업 출하 및 재고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11월 중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월에 비해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을 중심으로 전월(98.3)에 비해 0.5p 상승한 98.8을 기록**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이 증가하여 전월(101.8)에 비해 0.7p 상승한 102.5를 기록**

[그림 5]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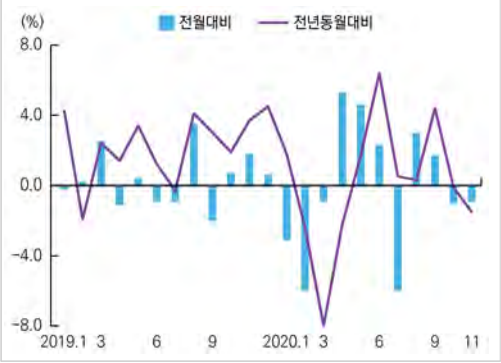
2. 소비

소매판매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

■ **11월 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대비 -0.9%를 기록하여 전월(-1.0%)에 이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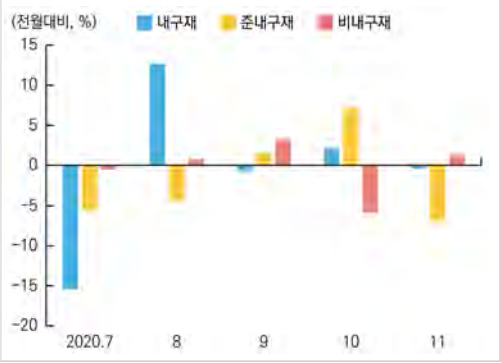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또한 -1.5%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감소

[그림 6]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11월 중 준내구재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 및 온화한 날씨 등으로 의복(-11.1%), 신발 및 가방 등의 판매(-3.6%)가 줄면서 전월대비 6.9% 감소**

- 준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9월)1.5→(10월)7.0→(11월)-6.9

■ **비내구재 판매는 서적·문구, 차량연료 등의 판매가 감소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가정내 음식료품 판매가 전월대비 5.2% 늘어난 데 기인하여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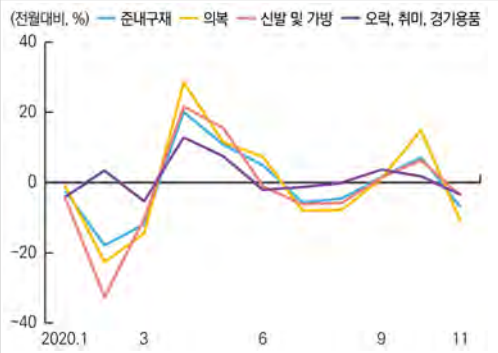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9월)3.2→(10월)-5.8→(11월)1.3

■ **내구재판매는 신차 출시, 업계 연말 마케팅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전월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승용차 판매(-1.2%)가 줄면서 전월대비 0.4% 감소**

- 내구재판매(전월대비, %): ('20.9월)-0.7→(10월)2.0→(11월)-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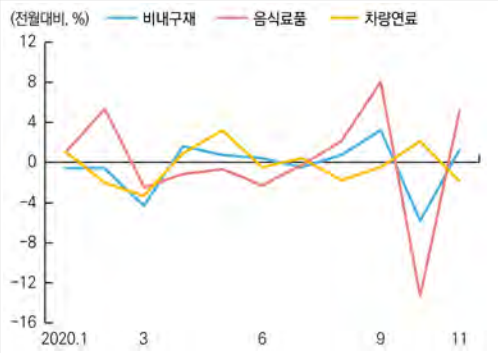
1) 정부는 11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

[그림 8] 준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9] 비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향으로 큰 폭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및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전월대비 8.1 포인트 하락한 89.8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CSI: ('20.9월)42→(10월)58→(11월)72→(12월)56
- 향후경기전망CSI: ('20.9월)66→(10월)83→(11월)91→(12월)81
- 생활형편전망CSI: ('20.9월)85→(10월)91→(11월)94→(12월)89

■ **코로나19가 확산된 2~3월, 8~9월, 11~12월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폭을 살펴보면 각각 -18.5p, -8.8p, -8.1p로 나타남**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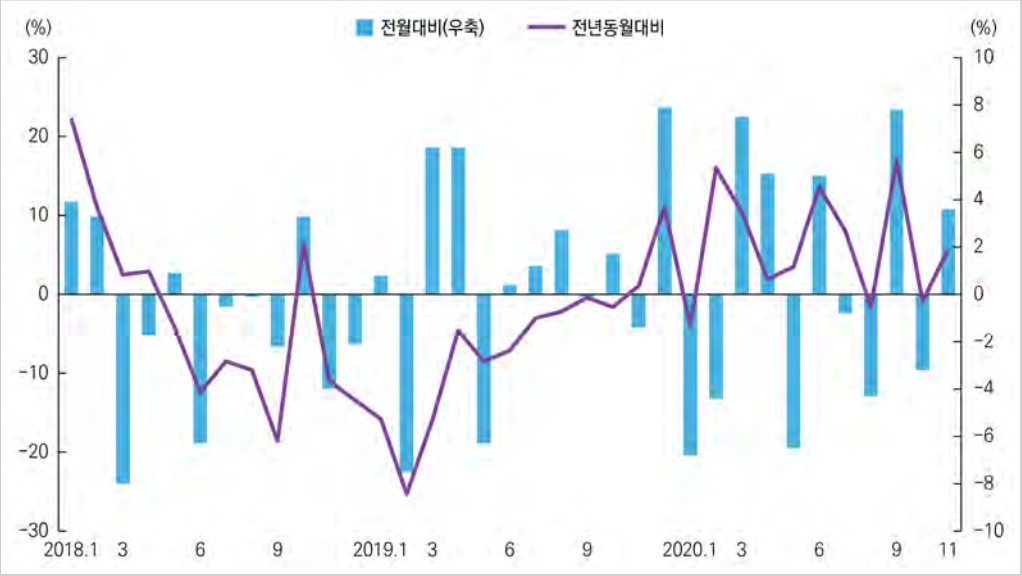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월대비 증가 전환

■ **11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6.3%)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운송장비(-3.7%)에서 전월(-14.9%)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월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3.6%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13.1%)에서 전월(3.4%)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증가 전환

[그림 11]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정밀기기(-4.4%)와 기타기기(-2.3%)에서 감소하였으나, 전기및전자기기(5.9%) 및 일반기계류(10.0%)에서 특수산업용기계(15.8%)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월대비 6.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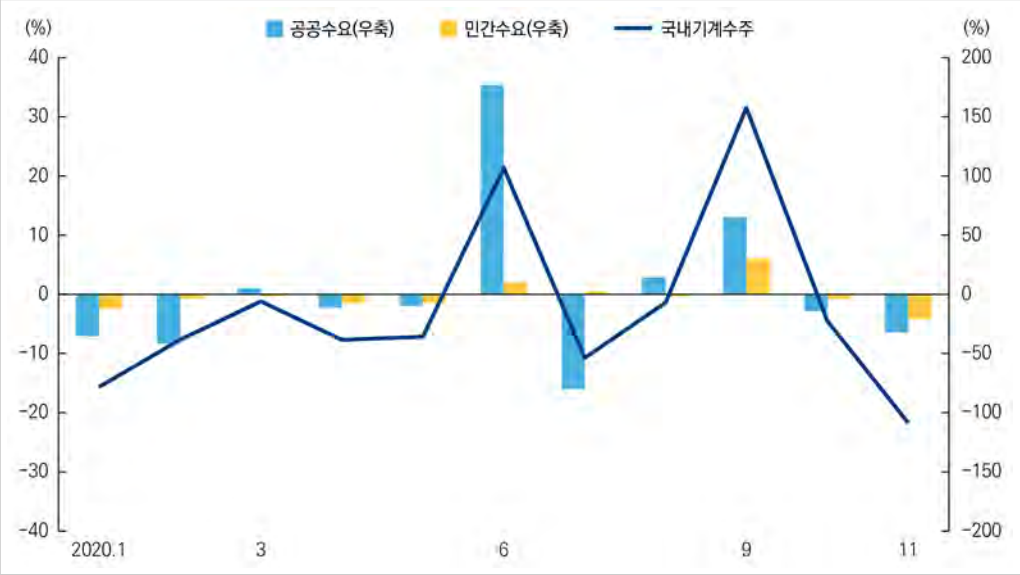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2.7%)에서 전월(-2.1%)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하였으나,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15.5%)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3.7% 감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기계류 수입액은 증가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32.1%)과 민간(-21.3%)부문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4.5%)에 이어 큰 폭인 21.8%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1.5%)의 감소에서 4.6% 증가 전환**

[그림 12]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수입액은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11월 중 기계류수입액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333.4%), 반도체제조용장비(100.3%) 등에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

■ **12월 중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속보치)은 15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반도체 부문이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

[그림 13] 기계류수입액 및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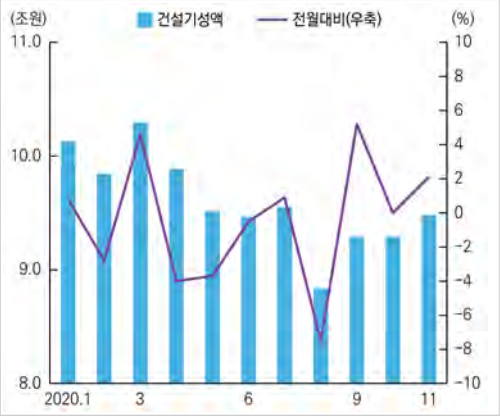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기성과 건설수주가 모두 증가

■ **11월 중 건설기성액(불변, 계절조정)은 토목(-4.0%)이 감소했으나, 건축(4.6%)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2.1% 증가(전년동기대비 0.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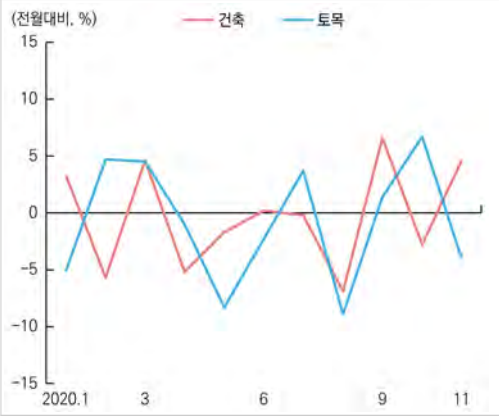
- 발주자별(경상, 계절조정)로는 공공부문(11.3%)과 민간부문(2.1%) 모두 증가

[그림 14] 건설기성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5] 부문별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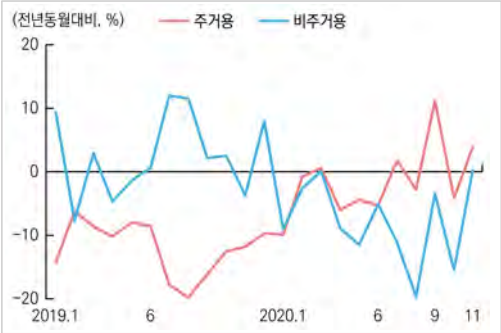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3.9%)과 비주거용(0.4%)이 모두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주거용건축은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

- 주거용부문은 전월(-4.1%)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비주거용부문은 8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주거용 건설기성액의 4개월 이동평균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2020년 하반기부터 조정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
- 토목부문은 전기기계(14.1%)가 늘었으나, 일반토목(-8.9%), 플랜트(-2.0%) 등에서 부진하며 3.0% 감소

[그림 16] 건축부문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7] 주거용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통계청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경상)과 건축허가면적(경상)은 1개월 만에 증가 전환

■ **11월 건설수주액은 건축(29.1%)과 토목(32.7%)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30.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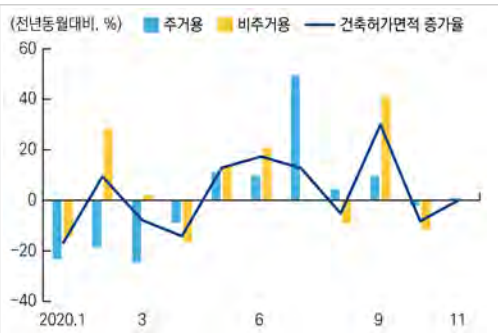
- 세부 공종별로 주거용 건축(47.6%)과 비주거용 건축(4.7%)이 늘었으며 토목부문(발전및통신 814.7%, 철도및궤도 1,617.7%)도 증가

■ **11월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0.8%)과 비주거용(0.1%)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그림 18] 공종별 건설수주액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9]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중 투자부문 관련 정책]

■ **정부에서는 '21년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20.12.17.)**

- ('21년 경제여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제약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금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고한 증가세를 지속,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한국판 뉴딜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
- ('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통해 신속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

■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국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공 계획**

- '21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의 가속상각을 최대 75%까지 허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75%까지,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까지 단축
- '21년 중 중소·중견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확대 적용
  -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
-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자금 23조 원 이상 투입
  - 혁신성장지원자금, 시설자금보증,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 5G 확산 가속화를 위한 5G 설비투자 지원
  - 5G 설비투자 취득비·공사비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2%p) 제공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투자에 대해 '20년과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 **건설투자 부문에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부문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한국판 뉴딜사업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

- 주거용 건축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
  - 서울, 경기, 인천 각각 36, 76, 15만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 비주거용 건축분야에서는 그린 뉴딜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및 국민편의시설 조성
  - 제조 디지털화·그린 에너지화를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7개 조성
  - 노후 공공시설을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어린이집, 체육시설, 공원 등 국민편의시설로 전환

- 토목분야에서는 SOC 예산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
  - 2021년 SOC 예산을 26.5조로 확대(2020년 SOC 예산 23.2조원)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 추진
  - 생활SOC 분야 투자 확대, 지역균형뉴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 진행,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4. 대외거래

가. 수출

대외 거래는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부문의 수출 호조와 수출단가 회복에 힘입어 총수출과 일평균수출액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개선세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하여 전월(4.1%)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

- 수출액은 541.1억 달러로 역대 12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준
- 수출단가는 OLED, 의료기기, SSD,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9.6% 상승한 Kg당 3.11달러를 기록하여 27개월만에 최고치 시현
-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액(21.4억달러)은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8%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저유가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무선통신기기 부품과 메모리 등 중간재 수입이 9개월 만에 증가 전환

■ 12월 무역수지는 69.4억달러 흑자를 시현

[그림 20]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1]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중국, 미국, EU, 아세안 등 4대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선진국의 내구재 소비 지속 등으로 EU와 미국의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대EU 수출은 이동제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헬스,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
- 대미국 수출은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으로 자동차와 차부품 부문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매지출 증가에 따른 반도체 부문의 양호한 수요 등으로 관련 수출이 늘면서 4개월 연속 증가
-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이 호조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증가
- 대중국 수출은 중국내 내수 지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바일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와 무선통신 등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 증가에 따른 일반기계 수출이 증가

[그림 22] 지역별 수출 증가율(2020년 12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3] 전세계 반도체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주: 2020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W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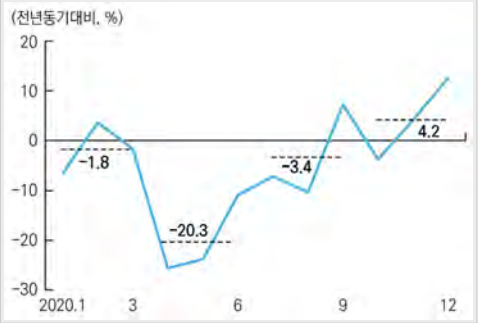
〈BOX1〉 2020년 연간 수출

■ **2020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총 수출액은 5,128.5억 달러로 전년대비 5.4% 감소
  -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상반기 중 11.3% 감소하였으나, 2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되며 하반기 중 0.4% 증가
  - 2020년 수출액은 2017년(5,737억 달러) 수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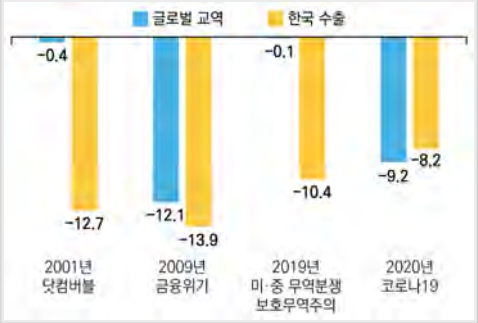
- 2020년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7.2% 감소한 4,672.3억 달러, 무역수지는 456.2억 달러를 기록
-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은 글로벌 교역 위축 시기에 세계교역량보다 더욱 큰 폭감소했으나, 2020년은 세계교역량 감소폭에 비해 적은 감소폭 시현
  - 2000년 이후 세계교역량이 감소한 2001년 닷컴버블, 2009년 금융위기,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된 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은 세계교역량 위축에 비해 크게 나타남
  - 그러나 2020년에는 반도체, 컴퓨터, 바이오헬스 등 주력 품목의 선전과 고부가가치 신성장품목의 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교역량에 비해 적은 감소폭을 시현

〈2020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교역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비교〉



주: 2020년은 1~10월 까지의 자료
자료: WTO,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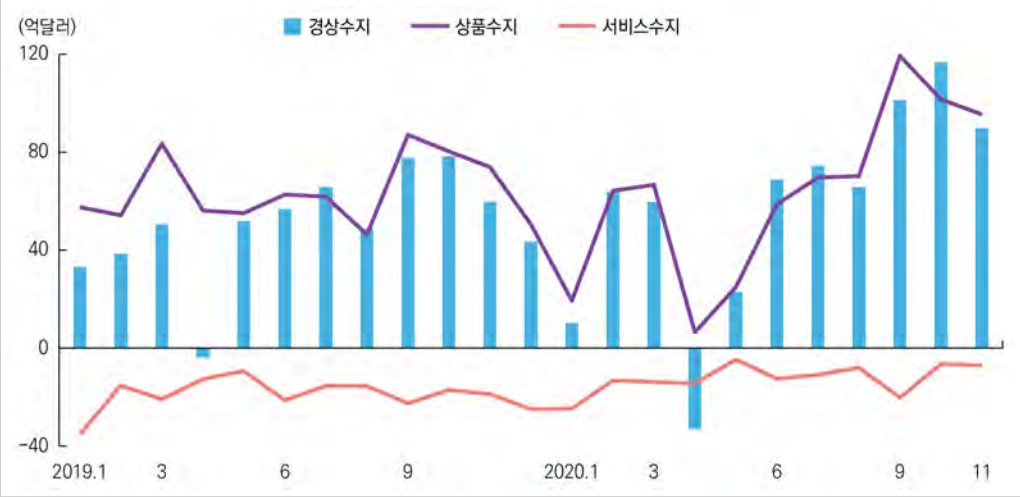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개선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

- **1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59.7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89.7억 달러를 기록**
- **상품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1.1% 증가하고 수입은 4.2%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73.9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95.4억 달러)이 확대**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의 흑자전환 및 여행수지의 적자폭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18.9억 달러)에 비해 적자폭(7.2억 달러)이 축소**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전년동월(9.7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든 4.2억 달러를 기록

[그림 24]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1~11월 중 상품수지 누적 흑자액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국자 감소로 여행수지가 포함된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은 작년보다 증가

■ '20.1~11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은 639.4억 달러로 전년동월(556.4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동 기간 상품수지 누적 흑자액은 696.1억 달러로 전년동월(718.3억 달러)보다 감소

■ 반면 여행수지 적자폭 감소로 인해 '20.1~11월 누적 서비스수지는 -137.4억 달러로 전년동월(-205.2억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전월세 등 집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의 상승세가 소폭 낮아지면서 전월보다 오름세가 둔화된 0.5% 상승

■ **1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5%를 기록하여 전월(0.6%) 보다 상승폭 둔화**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는 전년동월대비 0.5%를 기록

[그림 2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6]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겨울배추, 월동무, 겨울당근 등 엽근채소의 생산량 증가로 채소류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월(11.1%) 보다 낮은 9.7%를 기록**

- 농축수산물(전년동월대비, %): ('20.10월)13.3→(11월)11.1→(12월)9.7
- 12월 채소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여 10월(20.2%)과 11월(7.0%)에 비해 오름세 둔화
-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10월 1.05%p, 11월 0.894%p, 12월 0.75%p로 점차 하락

[표 1] 12월 엽근채소 출하량 증가율 전망

(단위: %)

	배추	무	당근	양배추
전년대비	25.7	28.8	29.2	20.6
평년대비	5.0	9.0	15.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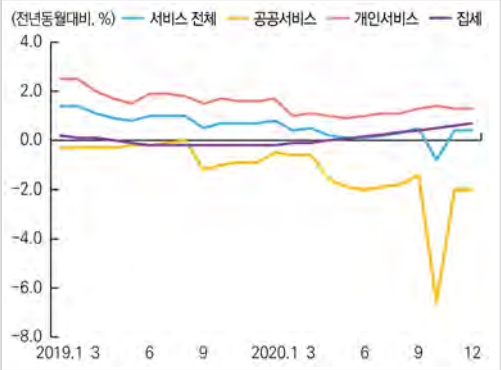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 **서비스물가는 전월세 등 집세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경기도의 무상교육 추가 시행 등으로 고등학교납입금[2)]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월과 같은 0.4% 상승**

- 4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고등학교납입금은 두자릿수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월 중 무상교육 추가시행으로 전년동월대비 -93.3%를 기록하여 전월(-74.4%)보다 하락폭 확대
- 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0.10월)-0.8→(11월)0.4→(12월)0.4
- 집세(전년동월대비, %): ('20.10월)0.5→(11월)0.6→(12월)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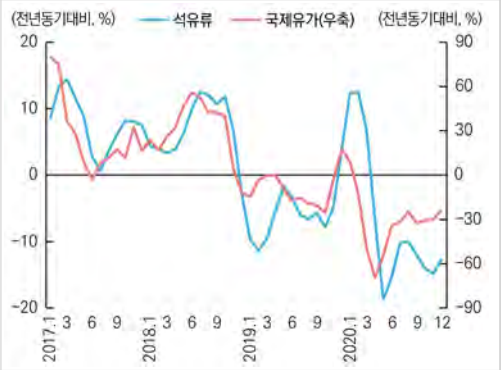
2) 경기도는 2020학년도 4분기(12월~2021년 2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

[그림 27] 부문별 서비스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8]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주: 국제유가는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종 바이러스 발생 등에 따라 석유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석유류 제품가격을 중심으로 4월부터 9개월 연속 내림세**

- 12월 국제유가는 3개유종 평균 배럴당 48.7달러를 기록하며 10월 이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23.1% 하락한 수준으로 공업제품 물가 하락에 기여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 ('20.10월)-1.0→(11월)-0.9→(12월)-0.9
- 석유류제품(전년동월대비, %): ('20.10월)-14.0→(11월)-14.8→(12월)-12.6
- 국제유가[3](전년동월대비, %): ('20.10월)-30.3→(11월)-30.0→(12월)-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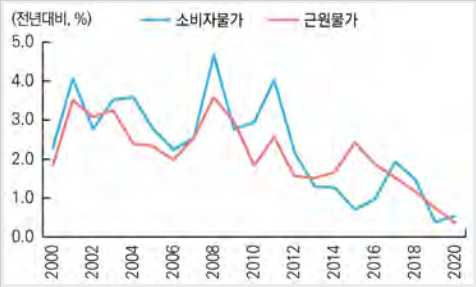
〈BOX2〉 2020년 소비자물가

■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5% 상승하여 지난해에 이어 0%대의 상승률 지속**

- 품목별로는 기상악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업제품 물가가 내림세를 지속하고 서비스 물가가 큰 폭으로 둔화
- 2020년 소비자물가가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 및 개인서비스 물가 둔화 등으로 서비스물가의 기여도가 전년(0.52%p)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0.14%p) 데 기인
  - 공공서비스물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
  - 개인서비스 물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등을 자제하면서 외식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숙박, 여행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의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둔화세 지속

3)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자료: Bloomberg)

〈연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주요 품목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자료: 통계청

6. 금융시장

가. 금리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미국 코로나19 백신 허가,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세, 풍부한 시장유동성으로 인해 보합을 나타냈으나 장기 국고채는 상승

■ **2020년 12월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월평균 0.97%을 기록**

-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긴급 승인, 미국 의회의 총 2.3조 달러(경기부양목적 0.9조달러, 연방정부예산안 1.4조 달러) 정부지출안 합의 등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가계대출억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확대, 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금리안정요인으로 작용

■ **반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0.07%p 상승한 1.68%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기채 시장의 수급불안과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하여 전월(4.1%)보다 증가세가 확대된데다 전년대비 3.5조원 증가(총 176.4조원)한 2021년 국고채 발행액, 2021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기대 등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장단기 국고채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확대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20.10월)0.91→(11월)0.97→(12월)0.97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20.10월)1.51→(11월)1.61→(12월)1.68
- 국고채 스프레드(10년 만기-3년 만기, %p):('20.10월)0.60→(11월)0.65→(12월)0.71

[그림 29]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0] 장단기 국고채스프레드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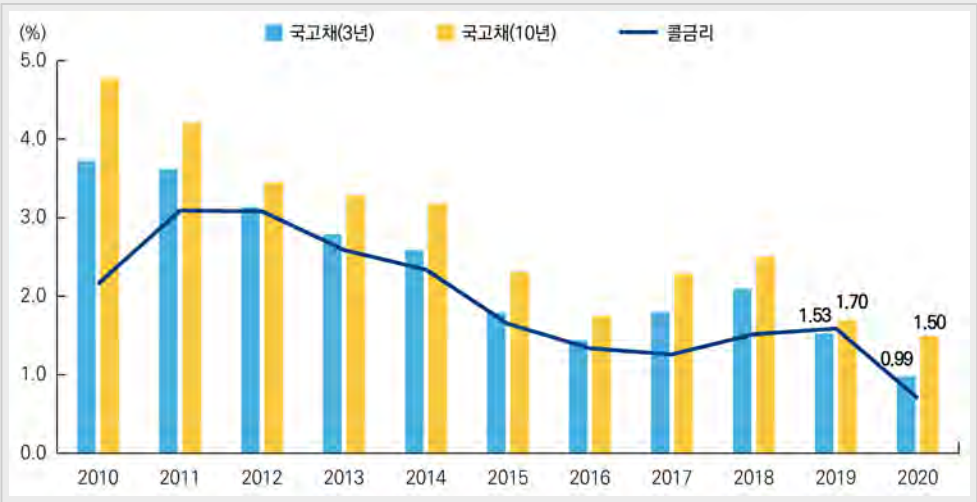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OX3〉 2020년 국고채금리

■ **'20년 평균 국고채금리는 3년 만기채의 경우는 전년 1.53%에서 0.99%, 10년 만기채는 1.70%에서 1.50%로 3년 만기채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20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월, 5월)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콜금리가 '19년 1.59%에서 '20년 0.70%로 하락한 것이 국고채금리 하락의 주요인
- 4회에 걸친 추경예산의 편성이 국채발행을 증가시키고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발행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상대적으로 10년 만기채의 하락 폭이 적었던 요인

〈콜금리, 3년 만기 및 10년 만기 국고채금리 추이(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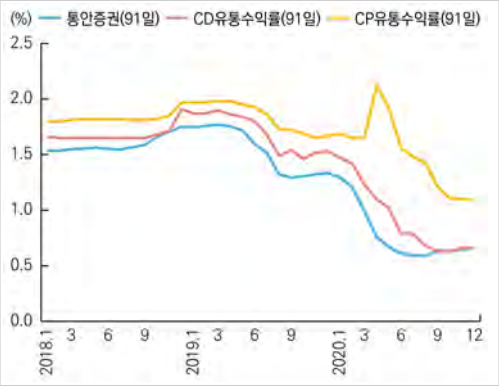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통안증권금리(91일)가 전월 월평균 0.65%에서 '20년 12월 0.66%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CD·CP금리(91일)는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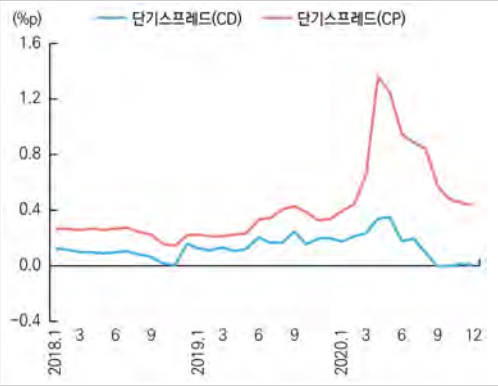
- 무위험 증권인 통안증권금리가 상승했으나 CD금리의 안정으로 스프레드가 미미한 수준
- 한국은행이 통안증권 발행으로 시장의 여유자금을 흡수하고,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도록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20.10월)0.63→(11월)0.65→(12월)0.66
- CD금리(91일물, 월평균, %):('20.10월)0.63→(11월)0.66→(12월)0.66
- CP금리(91일물, 월평균, %):('20.10월)1.11→(11월)1.10→(12월)1.09

[그림 31] 단기금리 추이(월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2] 단기 신용 스프레드 추이(월별)



주: 스프레드는 통안증권금리(91일)와 차
자료: 한국은행

회사채 금리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가운데, 11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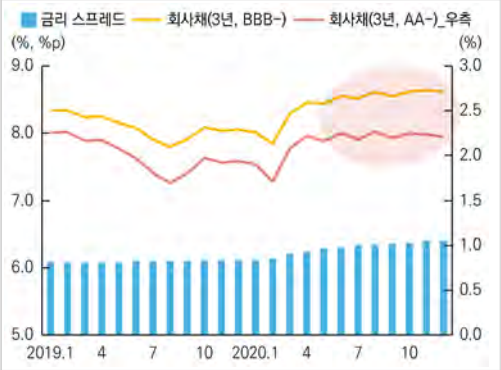
■ **2020년 12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하향 안정세 시현**

- 12월말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3bp 하락한 2.21% 나타냈으며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2bp 하락한 8.62%를 기록

■ **외국인 투자자는 2020년 1~12월 국내 채권 순매입을 지속**

- 외국인 투자자는 2020년 1~12월중 월 평균 6.1조원, 연간 73.1조원의 국내 채권을 순매입
- 2020년 12월 외국인 투자자는 전월대비 1.8조원 증가한 4.8조원의 국내 채권을 순매입

[그림 33] 회사채 금리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4] 외국인 채권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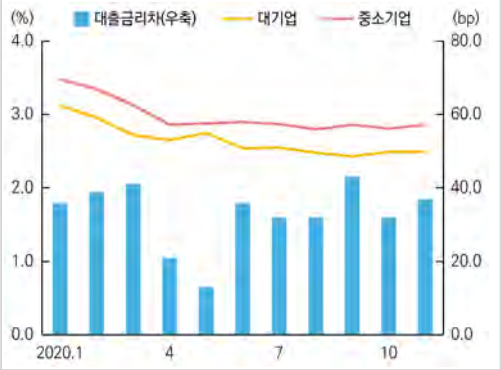
■ **2020년 11월 대기업 대출금리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차가 확대**

- 11월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월과 동일한 2.49%,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대비 5bp 상승한 2.86%를 기록
-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금리차가 전월 32bp에서 37bp로 확대

■ **한편 2020년 중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3% 미만의 대출금리 비중이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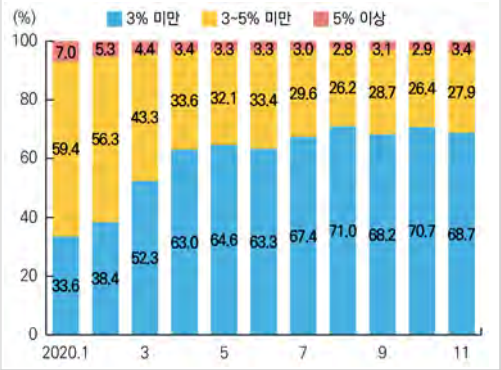
- 중소기업 대출 중 3%미만 대출금리 비중은 2020년 1월 33.6%에서 11월 68.7%로 상승
- 반면 3~5%미만 대출금리 비중은 동기간 59.4%에서 27.9%로, 5%이상 대출 비중은 7.0%에서 3.4%로 하락

[그림 35] 대기업·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



주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주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6] 금리수준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



주: 예금은행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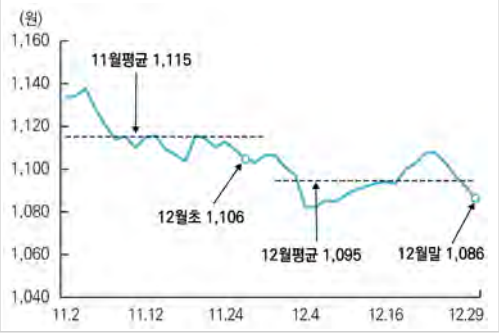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국·영국 기업의 백신 개발, 미국 의회의 경기부양책 합의가 위험자산선호를 강화시키며 하락

■ **'20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095원으로 전월(1,115원)에 비해 20원(1.8%) 하락**

-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개발이 발표되고, 2021년부터 접종이 개시될 것으로 알려진 것이 세계주식시장 활황, 2021년 세계경제 회복 기대 강화, 위험선호성향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
- 또한 미국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연방정부예산 합의로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
- 국내적으로도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도 하락요인으로 작용
- 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장기 국고채금리 상승세에 따라 국내증권을 순매도
- 월평균 원/달러 환율: ('20.10월)1,142→(11월)1,115→(12월) 1,095
- 경상수지(억달러): ('20.1~6월)192→(7~10월)358
- 외국인 국내증권 순투자: ('20.10월)1.6→(11월)5.2→(12월)-2.9

[그림 37] 원/달러 환율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8]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추이(월별)

자료: 금융감독원

■ **달러화 약세의 세계적 흐름이 원화가치 강세의 주요 배경**

- 팬데믹 이후 미국 연준은 완화적 통화공급(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을 도모
- '20년 국공채 매입 등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연준 자산이 3.2조달러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본원통화도 연중 3.4조 달러가 증가
- 이처럼 양적완화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기 1년간 연준자산증가량(약 1.2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되어 달러화 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특히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강세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유도

[그림 39] 미국 연준의 총자산 추이

자료: Fed

[그림 40] 달러인덱스 및 위안/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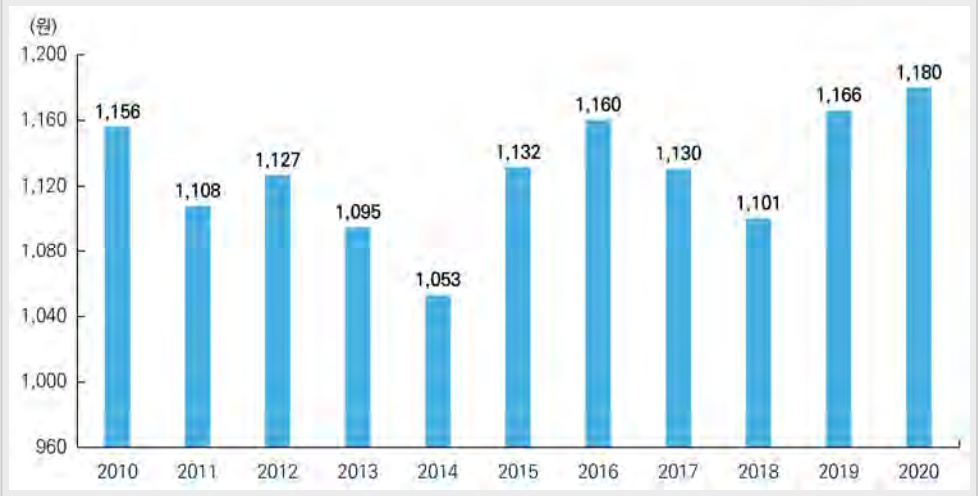
자료: Fed

〈BOX4〉 2020년 원/달러 환율

■ **'20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4원(1.2%) 상승한 1,180원 기록**

- '19년 미·중 간 무역분쟁에 이어 '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
  - 코로나19 확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경제는 '20년 중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
- 다만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국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에 성과를 보이고 '20년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19년에 비해 전년대비 환율 상승폭은 축소

〈원/달러 환율 추이(연평균)〉



자료: 한국은행

다. 주가

주가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백신 접종 시작,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감소,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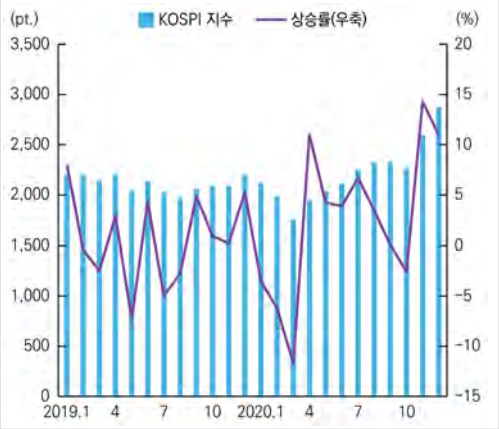
■ **12월 국내 주가는 개인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며 전월에 이어 월말기준 사상 최고치를 갱신**

- 12월 KOSPI지수는 전월말(2,591) 대비 10.9% 상승한 2,873을 기록
- 또한 12월말 기준 KOSPI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말 2,198을 676pt(30.8%) 상회

■ **한편 주식시장의 대기수요를 나타내는 고객예탁금[4]은 2020년 중 큰 폭의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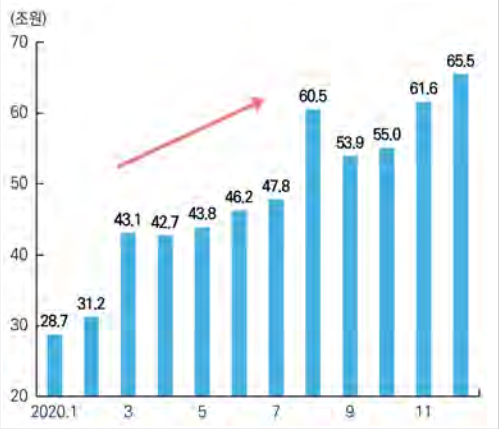
- 고객예탁금은 주가의 상승세와 함께 2020년 1월 28.7조원에서 12월 65.5조원으로 2.3배 증가
- 12월 고객예탁금은 전월대비 61.6조원 대비 3.9조원(6.3%) 증가

[그림 41]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42] 고객예탁금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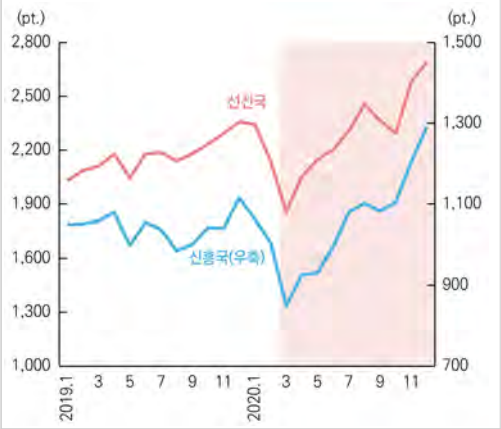
■ **글로벌 주식시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기조 유지,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가 상승세 지속**

- 12월말 기준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4.1%와 7.2% 상승

4) 고객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놓았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자금으로, 고객예탁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증시로 시중 자금이 유입됨을 의미

- 한편 12월말 기준 미국 주가는 전월 대비 3.3%, 독일과 일본은 각각 3.2%, 3.8% 상승

[그림 43]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4]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신용위험지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주요국의 양적완화 기조 유지 등으로 전반적 하락

■ **2020년 12월 한국의 신용위험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서 보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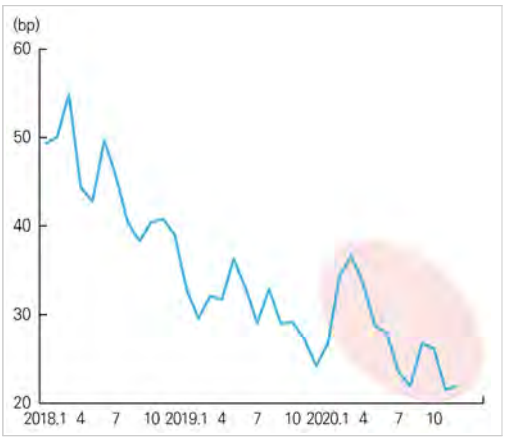
- 2020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5]은 전월대비 0.4bp 상승한 21.9bp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전년말 대비 2.3bp 낮은 수준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6]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하락**

- 2020년 12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24.7bp 하락한 338.4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9.8bp 하락한 221.7bp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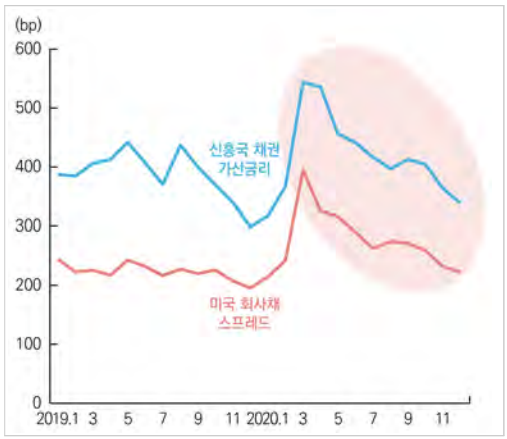
5)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6)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그림 45]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6]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임

■ **2020년 11월 총수입은 28.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9조원 감소**

■ **국세수입은 14.0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는 -1.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8조원 감소[7)]
- 법인세는 1.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3조원 감소
- 소득세는 10.9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세외수입은 1.6조원으로, 재산수입과 경상이전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감소**

■ **기금수입은 12.6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과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조원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은 6.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5조원 증가

7) 세정지원과 2020년 10월 수입액이 39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데 기인

[표 2]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19년				2020년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11월	1~11월누계	4차 추경	11월	1~11월누계	11월	1~11월누계
총수입	476.4	473.1	29.1	435.4	470.7	28.2	437.8	-0.9	2.4
국세수입	294.8	293.5	16.2	276.6	279.7	14.0	267.8	-2.1	-8.8
- 소득세	80.4	83.6	10.9	77.9	88.5	10.9	86.5	0.0	8.5
- 법인세	79.3	72.2	1.5	70.5	58.5	1.2	54.1	-0.3	-16.4
- 부가가치세	68.8	70.8	-1.1	68.3	64.6	-1.9	64.1	-0.8	-4.1
- 기타	66.3	66.9	4.9	59.9	68.1	3.8	63.1	-1.0	3.2
세외수입	26.9	25.3	1.8	22.0	29.1	1.6	23.3	-0.2	1.2
기금수입	154.7	154.0	11.1	136.7	161.9	12.6	146.7	1.5	10.0
-사회보장기여금[1]	69.7	69.6	6.1	63.6	73.4	6.6	68.1	0.5	4.5
세입세출외	-	0.4	0.0	0.0	-	0.0	0.0	0.0	0.0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코로나19에 대응한 4차 추경사업 및 보통교부세 집행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임

■ 2020년 11월 총지출은 32.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9조원 증가

- 예산은 20.4조원으로, 보통교부세(3.1조원)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0.5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2조원 증가
- 일반회계는 17.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1조원 증가
- 기금은 12.1조원으로, 사회보장성기금(0.9조원)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2.3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8조원 증가

※ 참고로 2020년 11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4만명(46.2%) 증가

[표 3]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19년				2020년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11월	1~11월누계	4차 추경	11월	1~11월누계	11월	1~11월누계
총지출	475.4	485.1	25.7	443.3	554.7	32.6	501.1	6.9	57.8
예산	332.6	329.0	15.2	306.2	377.5	20.4	347.9	5.2	41.6
일반회계	280.9	277.7	12.5	259.5	323.5	17.6	299.0	5.1	39.5
특별회계	51.7	51.3	2.7	46.7	54.0	2.8	48.8	0.1	2.1
기금	142.8	144.9	10.3	126.3	177.3	12.1	153.0	1.8	26.7
사회보장성기금[1]	47.6	48.7	3.9	45.0	61.2	4.8	54.6	0.9	9.6
세입세출외	-	11.2	0.1	10.7	-	0.0	0.2	-0.1	-10.6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산업고용동향

(제조업) 2020년 11월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일반기계, 조선, 가전 등의 약진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6.8%, 8.5% 증가**

- 일반기계와 조선 산업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8.3%, 7.5% 증가하였고,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던 무선통신기기 산업도 전년동월대비 4.8% 증가로 전환된 반면, 자동차 및 화학, 석유, 섬유 산업은 생산 감소

(서비스업) 11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위축으로 부진이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이동 자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여 2개월 연속으로 부진**

-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18.4%) 등은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2.0%), 숙박 및 음식점(-17.3%) 등은 감소

(에너지) 12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금속광물 지수는 최근 5년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농산물 및 식품 가격지수와 귀금속 지수도 상승세

■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각각 15.2%, 32.2%, 11.4% 상승하였고, 구리 가격이 27.9%, 농산물 및 식품가격 지수도 각각 2.1%, 2.6% 상승**

(부동산)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90%, 수도권 0.66%, 지방은 1.12%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고용) 12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

■ **12월 중 전체 취업자수(2,652.6만명)는 전년동월대비 62.8만 명(-1.0%) 감소하여 전월(27.3만 명, -2.3%)에 비해 감소폭이 큰 폭으로 확대**

- 제조업은 수출 개선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1.0만명 감소하여 추세적인 감소세가 지속
- 서비스업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0.3만명 감소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취업자 수 감소폭을 기록

(인구) 12월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2020년 10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인구 자연감소는 12개월 째 지속

■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0.04%) 감소하였고, 10월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1,934명, 26,509명**

Ⅱ. 산업고용동향

1. 제조업 동향

11월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일반기계, 조선, 가전 등의 약진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6.8%, 8.5% 증가**

- 일반기계와 조선 산업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8.3%, 7.5% 증가하였고,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던 무선통신기기 산업도 전년동월대비 4.8% 증가로 전환된 반면, 자동차 및 화학, 석유, 섬유 산업은 생산이 감소

■ **전월대비로는 제조업 생산이 0.3% 증가하였는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생산이 각각 7.2%, 13.1% 증가하면서 호조를 보였으나, 자동차와 화학 산업에서 전월대비 생산이 각각 8.8%, 8.4% 감소**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19			2020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4.6	112.3	111.2	113.5	110.0	112.0	0.3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6	-0.9	1.3	8.5	-2.0	0.7	
반도체	9.8	11.3	32.1	25.9	13.1	8.5	7.2
자동차	-2.4	-5.8	-11.3	15.8	-5.5	-1.6	-8.8
화학	-1.5	-1.7	-0.7	2.0	0.4	-5.6	-8.4
일반기계	0.3	-2.6	-3.2	9.5	-1.9	8.3	4.4
철강	-1.2	-4.0	-3.8	-0.4	-3.7	-1.4	0.2
조선	26.9	17.2	16.1	16.6	5.0	7.5	-2.5
석유	-0.4	-11.0	-4.0	-10.4	-3.9	-7.8	1.2
섬유	-0.9	-6.4	-6.6	-0.5	-10.4	-5.1	-2.1
무선통신기기	7.7	11.4	7.9	-13.3	-17.9	4.8	13.1
가전	6.7	-1.1	-10.4	26.6	12.7	16.8	-4.8
컴퓨터·주변장치	1.4	-16.2	-17.2	2.0	-2.8	-1.0	-2.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12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IT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기계, 조선, 섬유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

■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6%, 전월대비 13.7%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 IT 관련 산업인 반도체(30.0%), 무선통신기기(39.8%), 컴퓨터·주변장치(23.0%), 가전(23.5%)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조선 산업 수출이 105.9% 증가

[표 2] 제조업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19				2020					
	9월	10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12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14.6	-17.6	-17.4	-9.6	2.0	-7.1	-0.1	0.9	10.6	13.7
반도체	-31.6	-32.1	-30.9	-17.8	11.8	10.4	16.4	-1.0	30.0	10.1
자동차	3.2	-4.5	-4.1	1.5	18.0	0.6	3.5	0.9	2.2	-1.8
화학	-18.5	-22.6	-18.9	-6.0	-5.7	-14.1	-7.9	0.0	-1.6	19.6
일반기계	-1.7	-12.4	-1.8	3.9	0.4	-10.8	-7.1	9.4	2.8	11.4
철강	-9.4	-12.3	-8.9	5.7	1.4	-6.9	-4.6	1.2	-7.8	5.4
조선	29.7	25.1	-62.0	-57.9	-3.2	-21.8	32.6	-27.9	105.9	165.8
석유	-17.2	-26.8	-12.4	-5.4	-44.9	-50.3	-49.5	5.1	-36.5	20.8
섬유	-5.9	-6.9	-12.3	-3.6	11.3	-15.8	-6.3	8.9	3.0	9.3
무선통신기기	0.6	-6.8	-2.9	-0.5	-12.9	-11.9	20.2	7.4	39.8	2.1
가전	0.4	-6.6	-7.0	1.1	30.1	14.6	20.3	-8.3	23.5	6.0
컴퓨터·주변장치	-18.6	-14.4	-10.8	-3.2	17.6	5.2	15.5	4.2	23.0	9.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반도체 산업의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율은 8.5%로 지난달에 이어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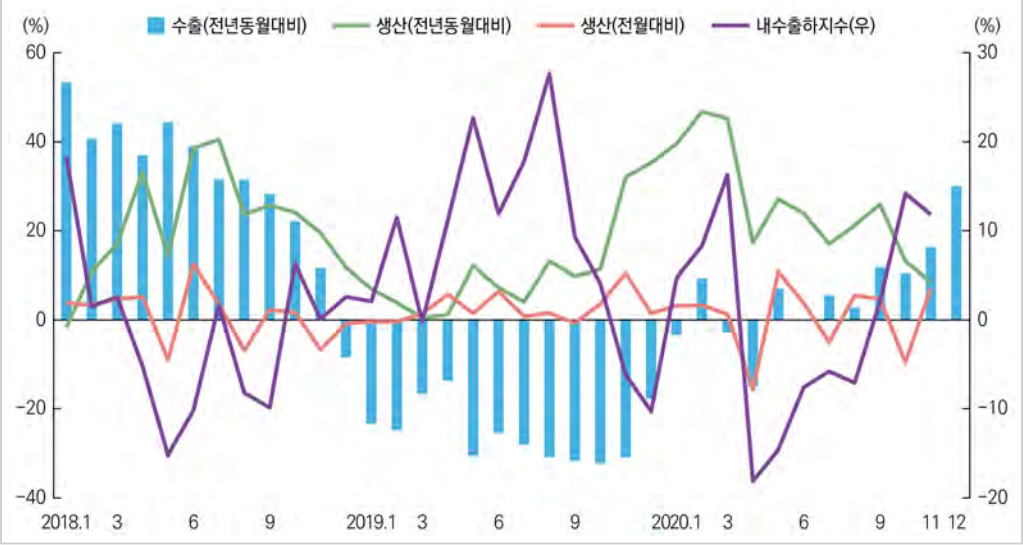
■ 2019년 이후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투자가 증가한 결과로 반도체 산업 생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으나, 10월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성장세 소폭 둔화

- 하지만 여전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확산으로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경쟁기업의 가동중단 등으로 D램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대비 생산 증가율은 상승
- 내수출하(계절조정): ('20.9월)262.2 → (10월)234.7 → (11월)253.6
- 수출출하(계절조정): ('20.9월)283.5 → (10월)249.5 → (11월)273.1

■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개선되고 유럽 수출 실적도 호조를 보이며 반도체 산업의 12월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은 30%를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11.8 → (10월)10.4 → (11월)16.4 → (12월)30.0
- 수출액 기준으로도 9월 95억 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94억 6,200만 달러를 달성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산업은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감소세는 약화

■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하였으나 내수는 마케팅 강화와 신차효과로 증가세이고, 수출은 미국 시장 완성차 판매 증가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15.8 → (10월)-5.5 → (11월)-1.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13.8 → (10월)0.3 → (11월)-8.8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19.6 → (10월)-0.7 → (11월)4.3

■ **12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으나, 부품 수출이 15.6% 증가하여 자동차 산업 전체의 수출은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18.0 → (10월)0.6 → (11월)3.5 → (12월)2.2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은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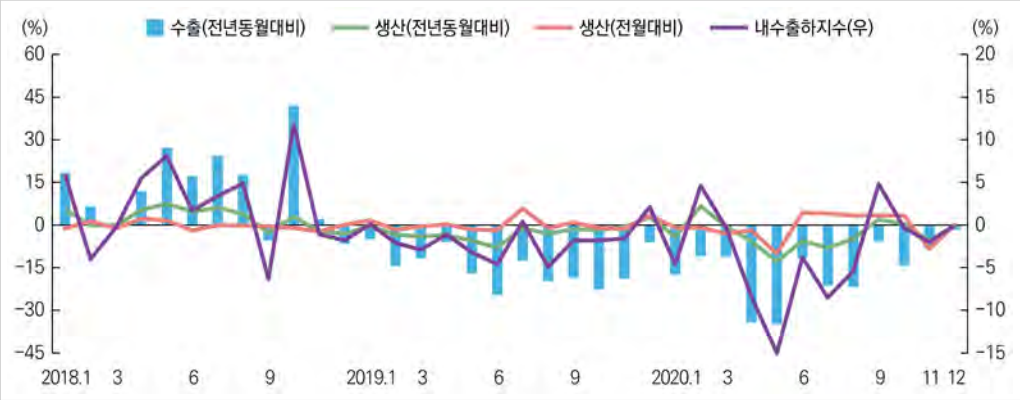
■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6%, 전월대비 8.4% 감소로 전환되었는데,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제조 공장 화재로 생산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것에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2.0 → (10월)0.4 → (11월)-5.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 ('20.9월)3.4 → (10월)3.3 → (11월)-8.4

■ **12월 수출은 광군제 등 중국의 연말 쇼핑 특수에 힘입어 올해 최고 수준인 35억 4,5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둔화**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5.7 → (10월)-14.1→ (11월)-7.9→ (12월)-1.6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12월 수출도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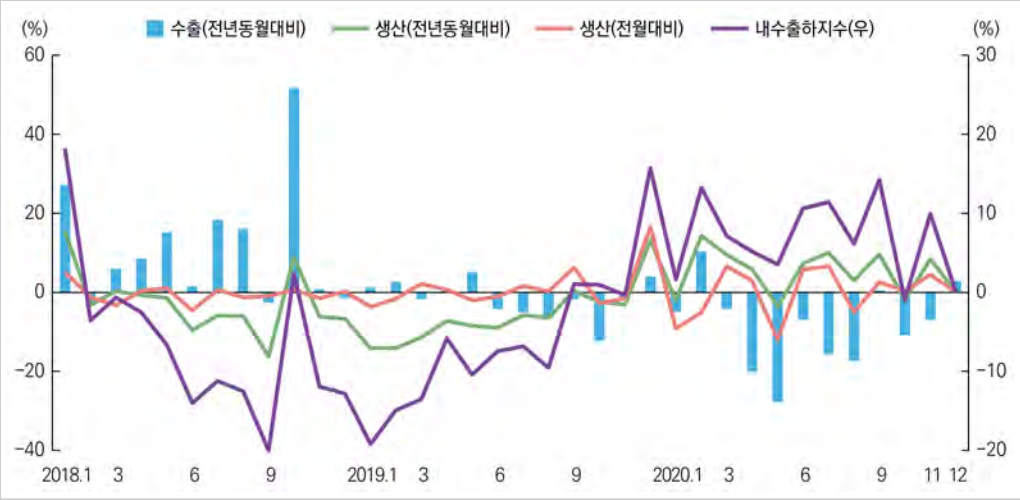
■ **11월 중 생산은 내수출하 증가와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하여, 10월 1.9%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9.5 → (10월) -1.9 → (11월) 8.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 2.5 → (10월) 0.2 → (11월) 4.4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4.2 → (10월) -1.0 → (11월) 9.9

■ **12월 중 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 투자 활성화로 인해 2019년 이후 최대 실적(47.5억 달러)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0.4 → (10월) -10.8 → (11월) -7.1 → (12월) 2.8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10월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12월 수출은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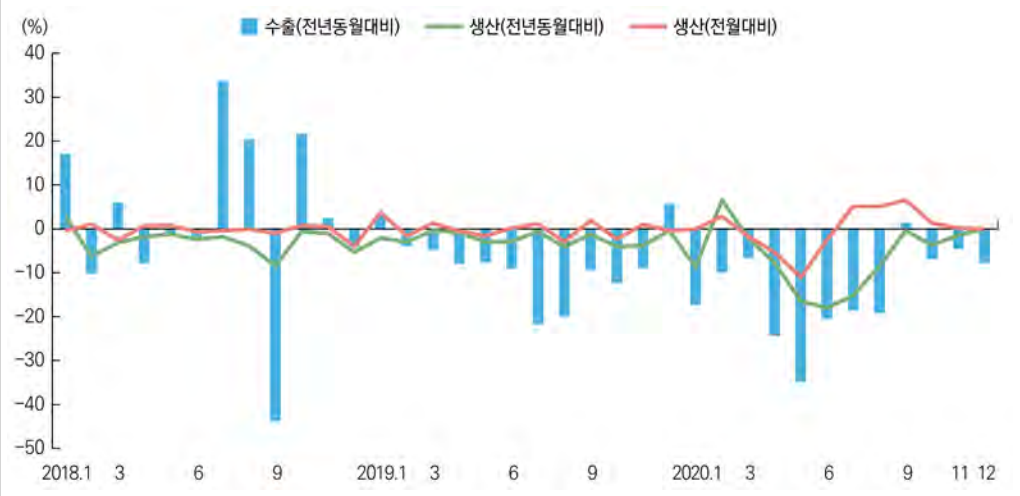
■ **11월 중 생산은 주요국에서 철강수요 산업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하였으나, 10월(-3.7%)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0.2%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0.4 → (10월) -3.7 → (11월) -1.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 6.5 → (10월) 1.3 → (11월) 0.2

■ **12월 중 수출은 최근 단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더딘 회복세로 인한 판재류 수요 감소와 에너지용 강관의 수요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4 → (10월) -6.9 → (11월) -4.6 → (12월) -7.8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선 산업은 11월 생산·출하가 증가하였고 12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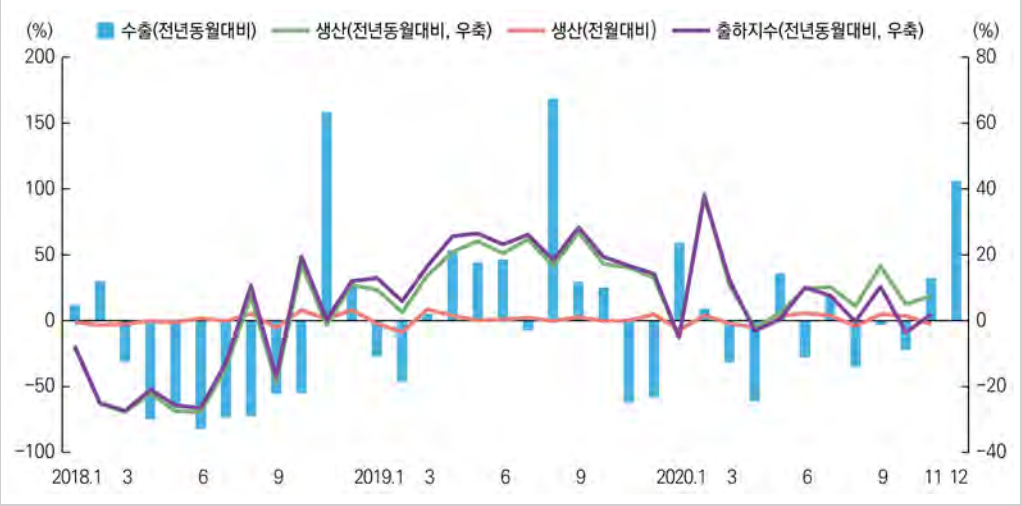
■ **11월 중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였고,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출하도 전년동월대비 2.0% 증가로 전환**

-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던 조선 산업의 생산은 2018년 하반기부터 LNG선 수주 등이 늘면서 증가세를 보이며 출하가 증가한 가운데, 수출은 주력 선종인 탱커(Tanker) 수출이 128.9%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32.7%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6.6 → (10월) 5.0 → (11월) 7.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 4.9 → (10월) 3.7 → (11월) -2.5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0.3 → (10월) -3.6→ (11월) 2.0

■ **12월 중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선주사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일부 물량에 대한 통관이 재개되면서 2개월 연속 증가**

-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105.9% 증가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석유 산업의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며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

■ **11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24개월 연속 지속**

-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고, 여객 운송 부문에서의 부진으로 벙커C유와 항공유 휘발유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
- 전월대비 생산은 등유와 벙커C유, 나프타, LPG 생산 증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1.2% 상승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9월)-10.4 → (10월)-3.9 → (11월)-7.8
- 생산(전월대비) 증감율(%): ('20.9월)-2.7 → (10월)-1.8 → (11월)1.2

■ **12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6.5% 감소하였으나, 유가 상승과 더불어 대중국 수출이 일부 회복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한 4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냄**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율(%): ('20.9월)-44.9→ (10월)-50.3 → (11월)-49.5→ (12월)-36.5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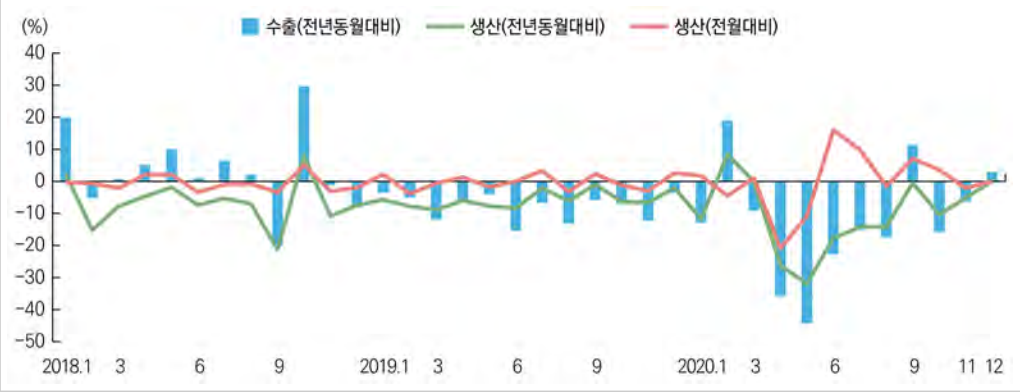
■ **11월 생산은 화학섬유제조업의 가동률이 증가하였으나, 섬유제조업의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5.1%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2.1%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0.5 → (10월) -10.4 → (11월) -5.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 7.1 → (10월) 3.6 → (11월) -2.1

■ **12월 수출은 마스크·필터 등 방역 관련 품목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아세안, 중국, 미국 등에서 연말 성수기에 의류·패션잡화에 대한 지연 소비 실현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1.3 → (10월) -15.8 → (11월) -6.3 → (12월) 3.0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은 연말특수로 수요가 늘면서 11월 생산과 12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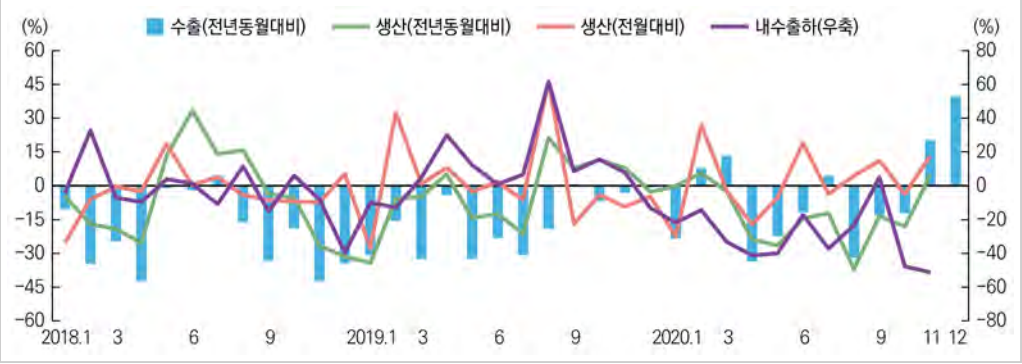
■ **11월 중 생산이 해외 시장수요가 활성화되어 4.8%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내수출하는 51.2%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3.3 → (10월) -17.9 → (11월) 4.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 11.0 → (10월) -3.6 → (11월) 13.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4.9 → (10월) -47.6 → (11월) -51.2

■ **12월 중 수출은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9.8%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증가**

- 대중 수출은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이 감소함에 따른 반사효과로 156.2%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2.9 → (10월) -11.9 → (11월) 20.2 → (12월) 39.8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전 산업은 국내외 수요 증가로 11월 중 생산이 늘고, 12월 수출도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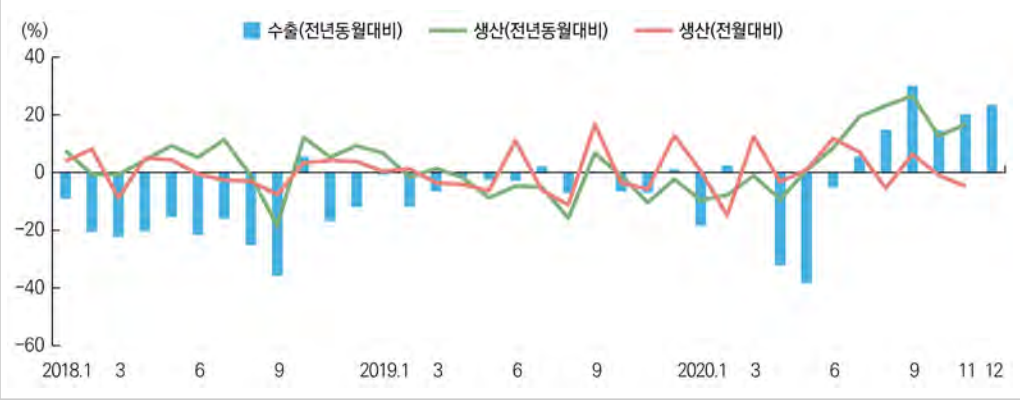
■ **생산이 국내외 수요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한 가운데, 판매량 증가에 대비한 생산 증가로 재고도 전년동월대비 40.6%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에 대한 소비심리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이 16.8%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26.6 → (10월) 12.7 → (11월)16.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 6.4 → (10월) -1.0 → (11월) -4.8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43.8 → (10월) 30.6 → (11월) 40.6

■ **12월 수출은 연말 성수기 쇼핑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등 연말 쇼핑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가전제품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30.1 → ('20.10월) 14.6→ (11월) 20.3 → (12월) 23.5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의 11월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연중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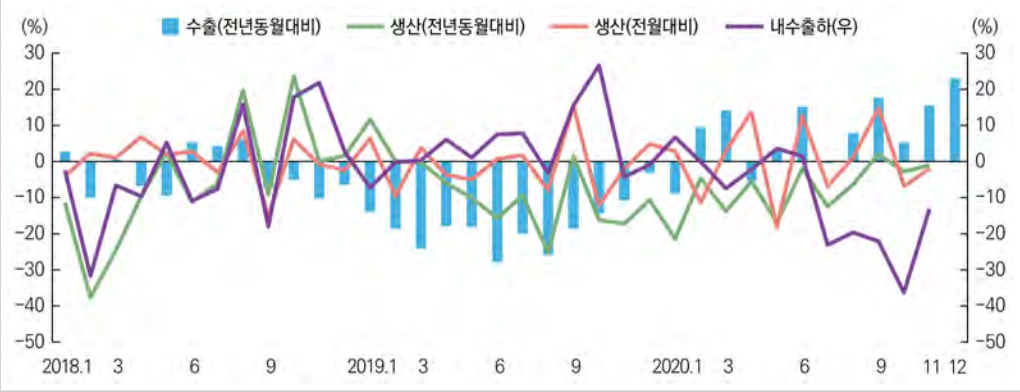
■ **11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전월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크게 하락하여 수요 측면에서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2.0 → (10월)-2.8 → (11월)-1.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14.8 → (10월)-6.8 → (11월)-2.0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6.5 → (10월)-2.6 → (11월)-11.5
- 재고(전월대비) 증감률(%): ('20.9월)1.6 → (10월)16.2 → (11월)-19.1

■ **12월 중 수출액은 32억 1,900만 달러로, 연중 최고치였던 11월(29억 9,200만 달러)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 17.6 → ('20.10월) 5.2→ (11월) 15.5→ (12월) 23.0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동향

11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위축으로 부진이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이동 자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여 2개월 연속으로 부진**

- 업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18.4%) 등은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2.0%), 숙박 및 음식점(-17.3%) 등은 감소

■ **전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4.6%), 부동산 및 임대(3.3%) 등이 서비스업 생산 증가(0.7%)를 이끌며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숙박 및 음식점(-2.7%), 도매 및 소매(-0.3%) 등은 부진**

[표 3]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19			2020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6.8	109.1	110.3	106.9	106.4	108.8	0.7
서비스업	0.7	2.4	2.6	0.1	-2.5	-1.4	
도매 및 소매	-1.8	-0.3	0.1	3.1	-1.8	-2.0	-0.3
금융 및 보험	-1.3	4.3	3.3	19.8	14.1	18.4	4.6
교육	-0.4	-1.0	-0.9	-5.1	-4.2	-3.0	1.0
보건 및 사회복지	7.0	9.9	8.4	-0.5	0.4	-0.8	-0.8
숙박 및 음식점	0.0	0.2	0.9	-21.2	-15.3	-17.3	-2.7
운수	-0.8	-1.8	0.7	-12.9	-14.9	-11.1	1.5
출판·영상·방송	6.3	5.3	4.3	1.0	-1.4	0.2	0.1
전문, 과학 및 기술	1.7	0.6	1.3	3.1	-1.5	-0.4	-0.6
사업시설관리지원	3.0	4.1	6.0	-9.2	-11.5	-11.1	1.1
협회·수리·기타개인	-1.9	0.5	-0.4	-2.9	-8.2	-10.6	-2.3
부동산 및 임대	-1.2	7.4	10.3	2.4	-2.5	0.0	3.3
예술·스포츠·여가	-0.7	5.9	2.9	-34.6	-30.0	-29.8	2.6
하수, 폐기물 처리	-0.3	0.7	7.6	10.9	2.7	2.0	-4.8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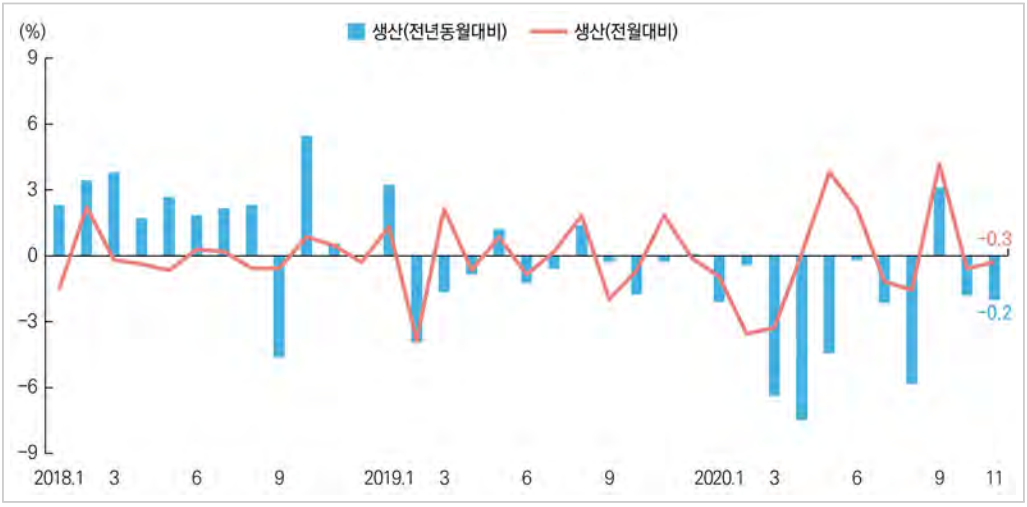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도매 및 소매업의 생산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부진을 기록

■ **11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도매업 부문이 소폭(0.1%) 증가하였으나, 소매업 부문이 7.5%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0.3% 감소**

- 소매업 부문은 음·식료품 소매업이 전년동월대비 13.5% 줄어들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이 전년동월대비 20.2% 줄어드는 등 7.5% 감소
- 자동차 판매업 부문은 신차모델 판매 효과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도 6.1% 감소

[그림 12]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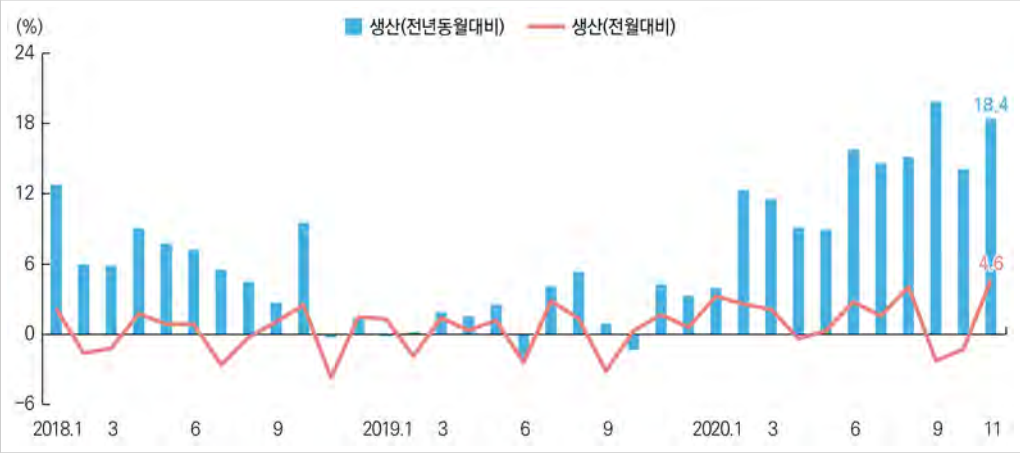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 및 보험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금융지원서비스 부문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11월 중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업과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8.1%, 11.9%, 67.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8.4% 증가**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대비로도 19.8% 증가

[그림 13]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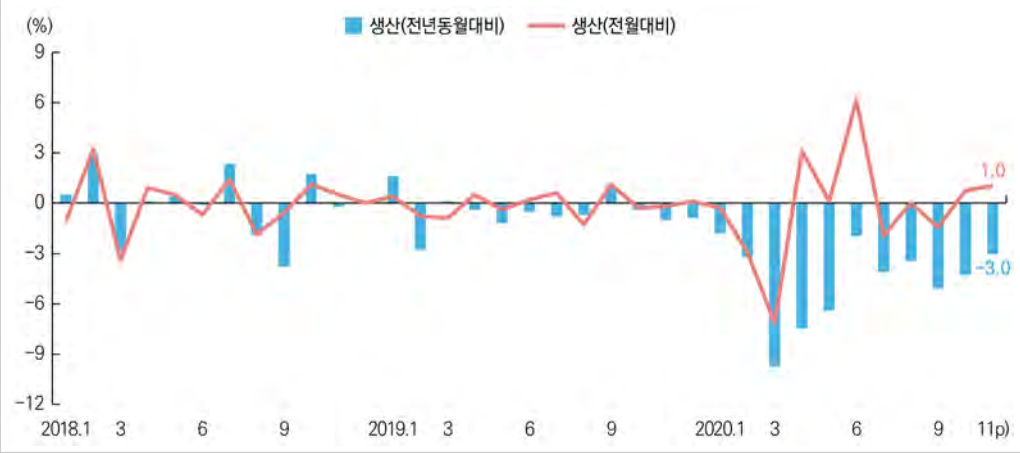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10월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11월 중 교육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효과(11.24. 거리두기 상향 조정)가 아직 반영되지 않아 전월대비로는 1.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9월) -5.1 → (10월) -4.2→ (11월) -3.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0.9월) -1.5 → (10월) 0.7 → (11월) 1.0

[그림 14] 교육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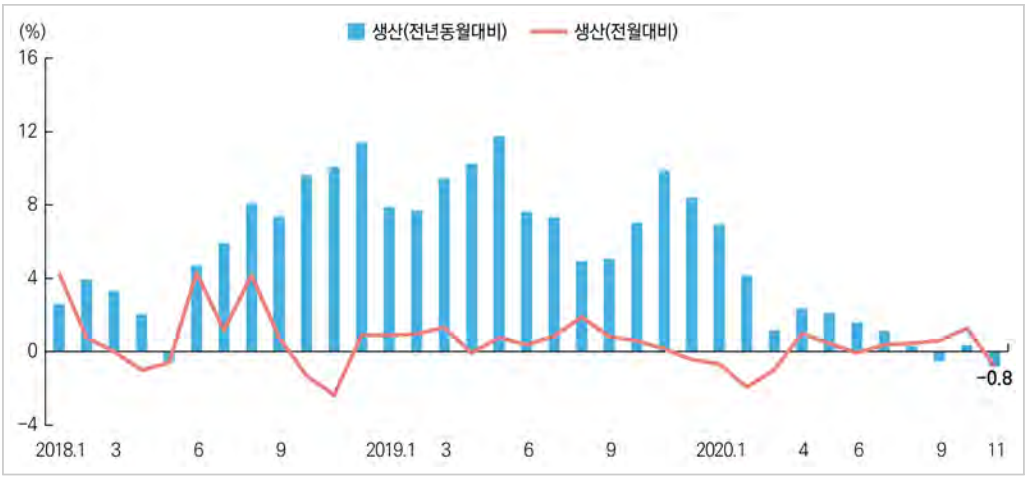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11월 중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산은 의원 및 비거주 복지시설의 운영 단축 등의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0.8% 감소**

- 보건업에서 병원 부문은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한 반면 의원 부문에서 생산이 3.9% 감소
-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거주복지시설 부문에서 생산이 7.1% 증가하였으나 비거주복지시설 부문의 부진 지속
- 비거주복지시설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9월)-4.4 → (10월) -4.2→ (11월) -4.5

[그림 15] 보건 및 사회복지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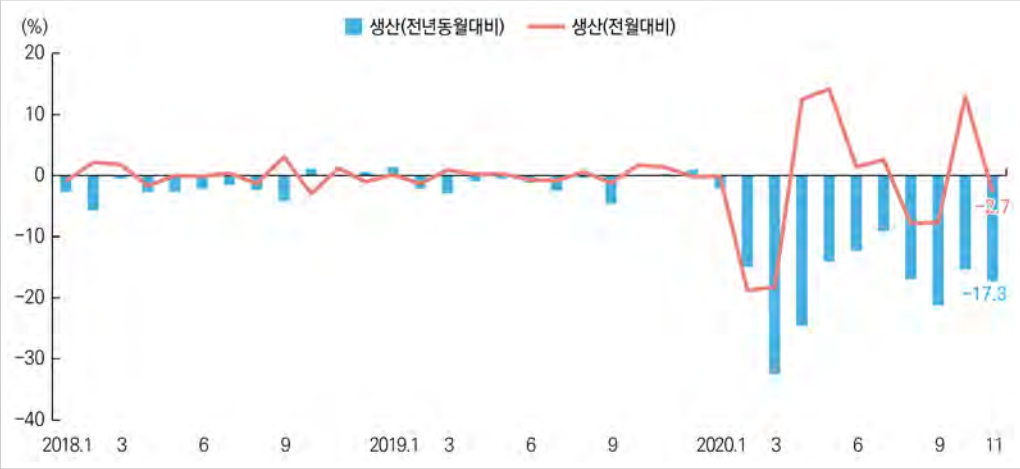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월대비로도 감소

■ **11월 중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 생산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24.7%, 16.1% 하락하였으며,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리수 감소세 지속**

- 숙박업 중에는 외국인 수요가 많은 호텔업의 생산 감소율이 29.2%로 가장 심하며, 국내 여행수요 부진에 따른 휴양콘도 운영업도 21.0% 감소
- 음식점 및 주점업 중 주점업의 생산 감소율이 28.9%로 가장 높으며 한국 음식점업 21.1%, 기관구내식당업 21.1%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감소

[그림 16]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12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두 자리 수 상승세를 기록

■ **12월 원유 가격은 배럴당 48.7달러로 전월대비 15.2% 상승하여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

- 국내외 에너지 전문기관은 2021년 석유수요는 증가하겠지만, OPEC+의 감산량 축소와 누적된 재고부담으로 국제유가는 2020년 연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에너지경제연구원 48.4달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49달러)
- 2021년 세계 석유수요는 9,589만 배럴/일로 전망되어 2020년 수요(8,999만 배럴)보다는 반등하지만 2019년 수요(9,976만 배럴)에는 다소 못미치는 수준으로 예상(OPEC 월간보고서, 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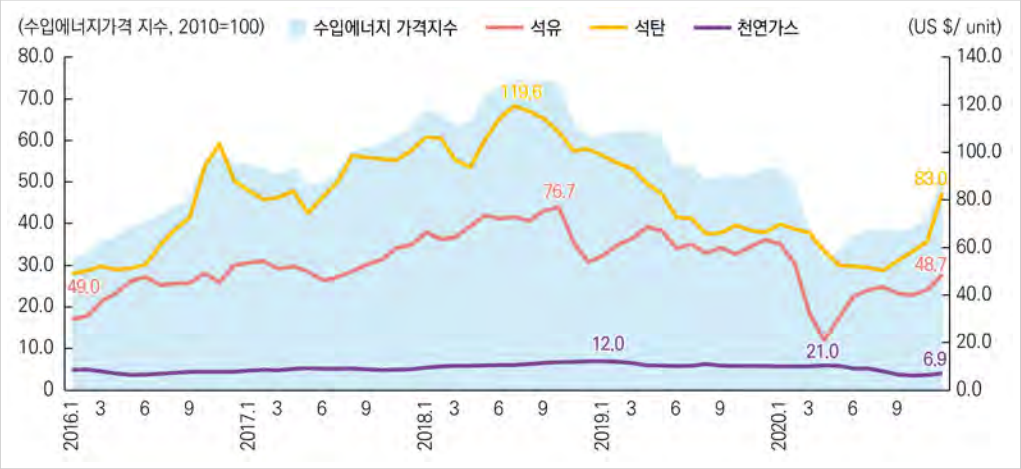
■ **12월 석탄 가격은 톤당 83.0달러로 전월대비 32.2%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로도 25.5% 상승**

- 12월 석탄 가격 상승은 발전용 석탄 수요가 예상보다 일시 급증한 영향으로 추정

■ **12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6.9달러로 전월대비 11.4% 상승**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질량 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7]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입에너지가격지수 추이



주: 1.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고려하여 석유가격 45.5%, 석탄 33.3%, 천연가스 21.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2.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우측)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2월에는 금속광물지수와 농산물 및 식품 가격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귀금속 지수도 전월대비 세 달 연속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 12월 농산물 및 식품 가격지수는 농산물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각각 2.1%와 2.6%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11.0%, 13.8% 상승

- 미국선물시장에서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2014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남미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작황부진의 영향으로 추정
- 12월에도 국내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2월까지 비축미 18톤을 우선 공급하고, 2분기 내 19만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

■ 12월 금속광물 지수는 99.7로서 8개월 연속 상승하여 최근 5년 최고치를 갱신

- 2월 구리가격은 톤당 7,772달러로 전월대비 5.3%, 전년동월대비 27.9% 상승하여 안전자산인 금보다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
- 구리 가격 강세는 전세계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회복과 일반 자동차보다 구리 사용량이 많은 전기차의 생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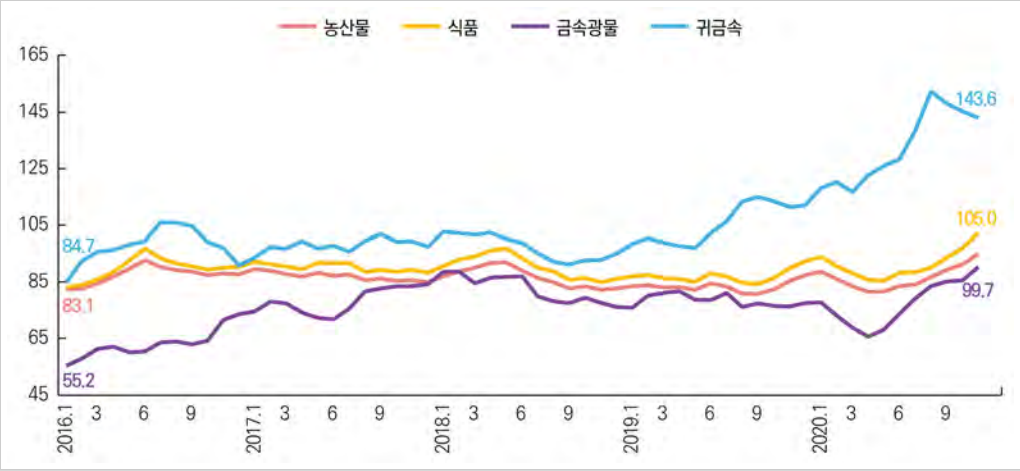
■ 12월 귀금속 지수는 143.6으로 전월대비 0.4% 소폭 상승 하였는데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한 반면 백금은 전월대비 12.8% 상승

- 2020년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전년대비 127.1% 상승하였으며, 8월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5.6% 하락하여 12월에는 트로이온스당 1,858달러 기록

- 2020년 은 가격은 전년대비 126.6% 상승하여 주요 원자재 중 금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안전자산과 산업용 원자재 양면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

※ 트로이온스(Troy oz)는 금속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로 1트로이온스는 31.103476g

[그림 18]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주: 가격지수는 각 품목의 2010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
자료: 세계은행

나. 국내 에너지 수급 동향

2020년 3/4분기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과 수송부분의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9%감소

■ **산업부문은 최종에너지의 65.9%를 소비하며, 수송부문이 17.8%, 가정·상업부문이 13.9%, 공공부문이 2.5%의 에너지를 소비**

■ **2020년 3/4분기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가정·산업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수송부문과 산업부문의 감소가 각각 10%와 3.2%로 컸음**

- 전년동기대비 감소분은 218만TOE으로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은 각각 115만TOE와 105만TOE의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생산활동 감소를 반영함

※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여기에 해당

[표 4]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백만TOE, %)

	2017	2018	2019		2020p			
				3/4분기	1~9월	3/4분기	전년동기비	비중
최종에너지	230	232.7	231.8	55.3	165.9	53.2	-3.9	
산업	141.9	142.9	143.3	36.2	104.0	35.0	-3.2	65.9
수송	42.8	43	43	10.5	28.5	9.5	-10.0	17.8
가정·상업	39.9	41.3	40.1	7.3	29.3	7.4	0.5	13.9
공공	5.5	5.6	5.4	1.3	4.0	1.3	-0.6	2.5

주: 2020년 자료는 추정치(p)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2020년 11월 전력판매량은 비생산부문의 수요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는 전 부문이 고르게 증가

■ **2020년 11월까지 누적 전력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지만, 11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5.3% 상승하여 전력수요 회복세가 나타남**

- 산업부문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했으나 전월대비로는 4.2% 증가했으며, 서비스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7.2% 증가

[표 5] 부문별 전력판매량

(단위: GWh, %)

	2017	2018	2019		2020p			
			1~11월	11월	1~11월	10월	11월	전월대비
계	507,746	526,149	475,767	41,112	464,243	39,065	41,147	5.3
전년동기대비	2.2	3.6	-1.0	-0.2	-2.4	-3.8	0.1	
가정부문	66,517	70,687	64,631	5,520	67,880	5,599	5,822	4.0
공공부문	23,605	24,569	22,128	1,866	21,281	1,689	1,909	13.1
서비스부문	140,952	147,189	132,871	10,955	130,100	10,257	10,996	7.2
산업부문	276,672	283,704	256,137	22,771	244,982	21,520	22,420	4.2

주: 2020년 자료는 추정치(p)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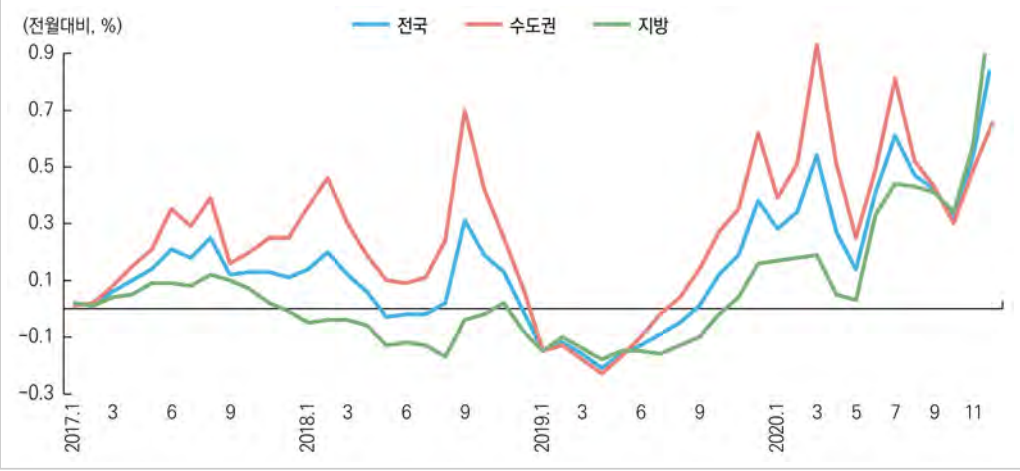
4. 부동산

2020년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90%, 수도권 0.66%, 지방은 1.12%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 수도권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입주물량 감소와 인천·경기 지역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역세권 위주의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확대
- 지방은 울산 2.54%, 부산 2.12%, 대구 1.59%, 대전 1.41%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19]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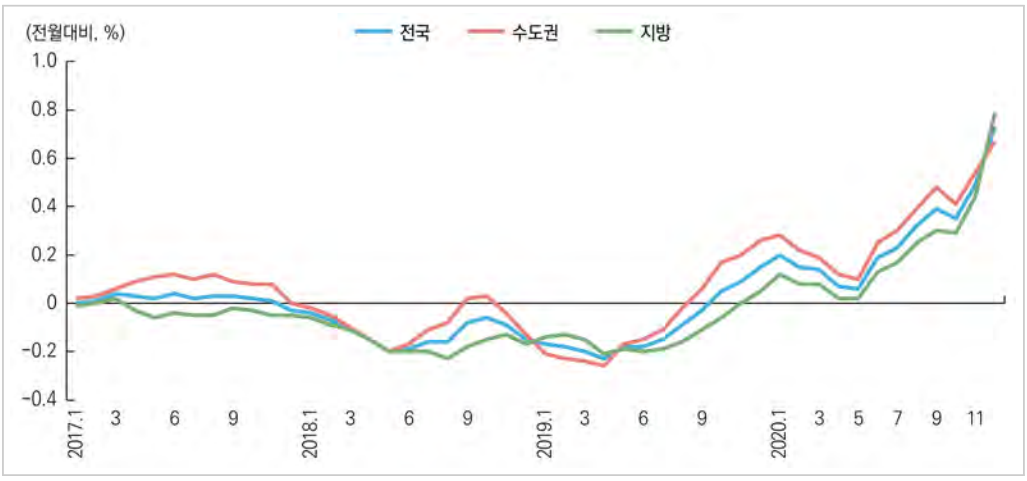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0.73%로 전월(0.49%)에 비해 상승폭 확대**

- 수도권은 저금리, 청약 대기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 및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 확대
- 지방은 세종 5.55%, 울산 2.24%, 대전 1.32%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20]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0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

■ **주택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의 거래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지방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25.9% 증가한 11만 6,758건**

- 수도권(4.1만건)은 전월대비 1.8% 감소, 전년동월대비 15.3% 감소
- 지방(7.6만건)은 전월대비 48.7% 증가, 전년동월대비 72.4% 증가

[그림 21]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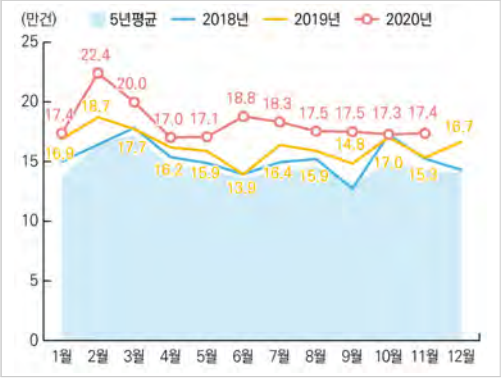
[그림 22] 연도별 11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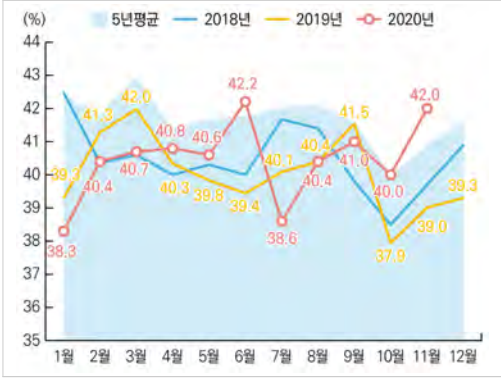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은 17만 3,578건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0%로 전월대비 2.0%p 증가, 전년동월대비3.0%p 증가

[그림 23]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24]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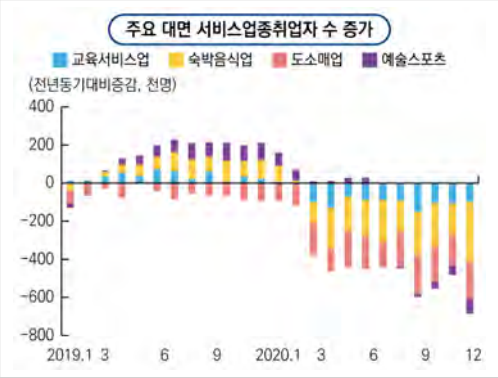
5. 고용

노동시장은 12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

■ **12월 중 전체 취업자수(2,652.6만명)는 전년동월대비 62.8만 명(-2.3%) 감소하여 전월(27.3만 명, -1.0%)에 비해 감소폭이 큰 폭으로 확대**

- 전체 취업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숙박음식업(-31.3만), 도소매업(-19.7만), 교육서비스업(-9.9만),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7.7만) 등의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취업자수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
- 주요 대면서비스업종 취업자수 증감(전년대비, 만명): (10월)-55.5→(11월)-48.2→(12월)-68.6

[그림 25] 전체 취업자 수 및 대면서비스 업종의 월별 고용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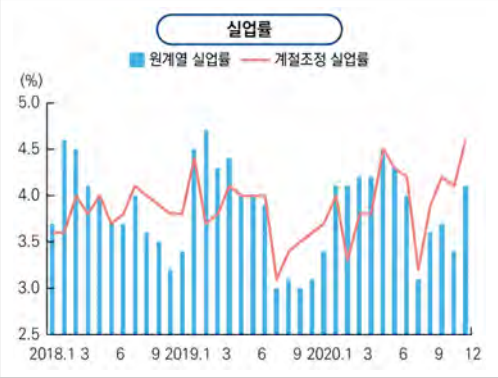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하여 전월(60.7%, -1.0%p)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계절조정 고용률은 59.6%로 전월대비 0.6%p 하락**

- 계절조정 고용률은 지난 2월 이후 60%를 하회하기 시작하였고, 12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3%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하며 15세이상 고용률보다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8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실업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

- 계절조정 실업률은 4.6%로 전월대비 0.5%p 상승
- 실업자는 113.5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4만명(20.6%) 증가하여 전월(96.7만명, 전년동월대비 10.1만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4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의 증가폭이 유지되는 모습

[그림 26]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별 고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추세적인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서비스업은 코로나19 3차 확산(2020년 11월 말 발생)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3만 명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증가폭은 축소**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2.3→(8월)-0.6→(9월)5.6→(10월)3.6→(11월)7.7→(12월)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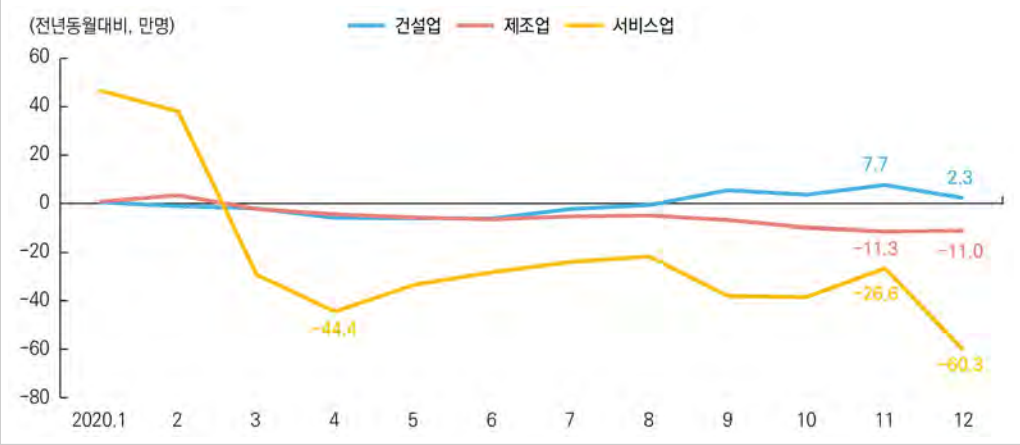
■ **제조업은 수출 개선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추세적인 감소세가 지속**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5.3→(8월)-5.0→(9월)-6.8→(10월)-9.8→(11월)-11.3→(12월)-11.0

■ **서비스업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대폭 확대되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수치를 기록**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24.0→(8월)-21.4→(9월)-38.0→(10월)-38.3→(11월)-27.0→(12월)-60.3
-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큰 충격을 받았음
- 비대면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업시설관리업과 공공행정업 등에서 고용상황이 위축되며 증가폭은 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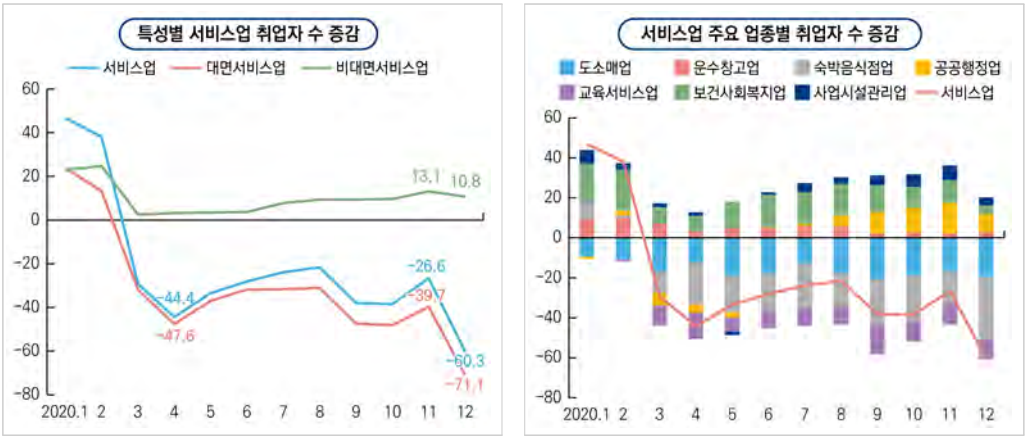
[그림 27]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8]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고용상황이 악화되었고, 청년층과 50대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청년 고용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청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청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19.5→(8월)-17.2→(9월)-21.8→(10월)-25.0→(11월)-24.3→(12월)-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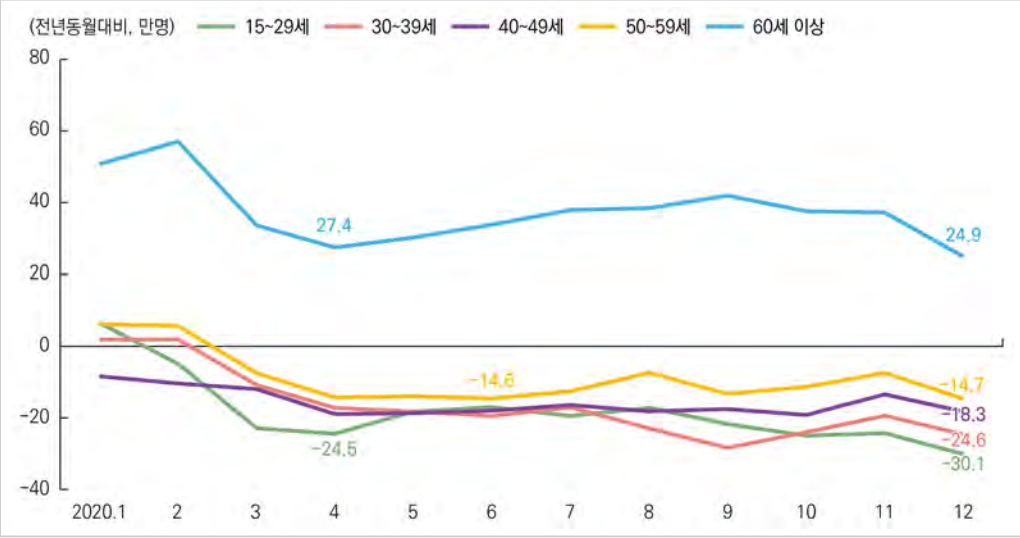
■ **'20.12월 30~50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약 57.6만 명 감소를 기록**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46.0→(8월)-48.6→(9월)-59.3→(10월)-54.6→(11월)-40.3→(12월)-57.6
- 특히, 5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4.7만 명 감소하여 코로나19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수치를 기록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축소되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37.8→(8월)38.4→(9월)41.9→(10월)37.5→(11월)37.3→(12월)24.9

[그림 29]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3차 확산은 임시일용직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12월 상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었으나, 축소의 정도를 볼 때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34.7→(8월)28.2→(9월)9.6→(10월)1.4→(11월)3.8→(12월)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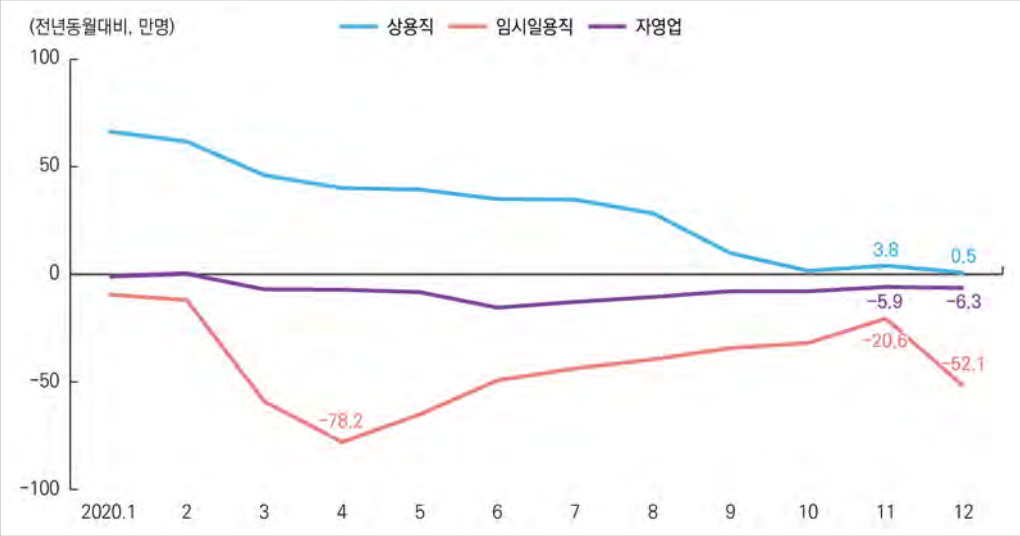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4월에 저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었으나, 3차 확산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43.9→(8월)-39.6→(9월)-34.5→(10월)-32.0→(11월)-20.6→(12월)-52.1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2배 이상 확대되어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임시일용직 고용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

■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3만 명을 기록하여 감소폭이 소폭 확대**

-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0.7월)-12.8→(8월)-10.7→(9월)-7.8→(10월)-7.8→(11월)-5.9→(12월)-6.3

[그림 3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연간 고용동향]

■ **2020년 노동시장은 노동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구조적 제약요인에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여건이 악화**

- 노동인구 고령화로 15세이상 인구 증가율은 2016년 이후 1.0%를 하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가 늘며 2019년 63.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45.5만명 늘며 62.5%로 0.8%p 하락
  -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공식적 실업자 수가 전년대비 4.5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임
- 노동력의 양적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실업률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8% 하락하며 60.1%를 기록
  - 2000년대 들어 지난 2009년(-1.0%p)에 이어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8만명(-0.8%) 감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최근 5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요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
  - 2020년 3~12월 중 주요 대면서비스업종 취업자수 증감(전년대비, 만명):도소매업 -17.2, 숙박음식업 -20.1, 교육서비스 -10.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1.1

주요 고용지표 및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의 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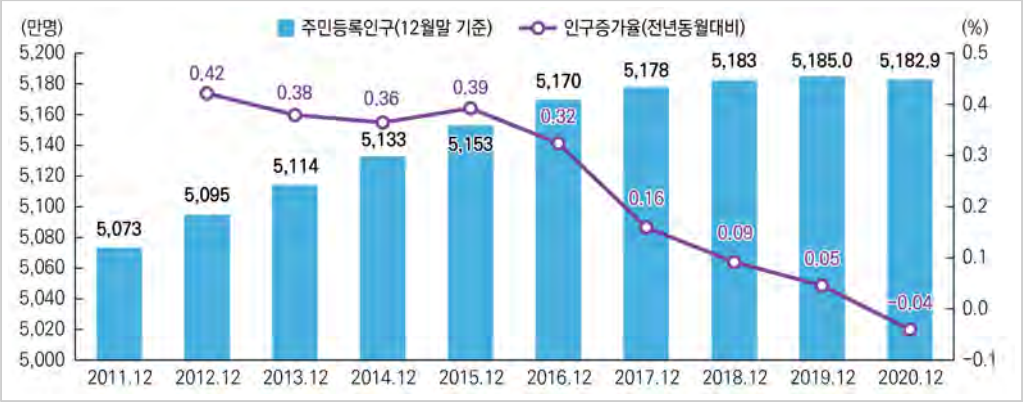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6. 인구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0.04%) 감소

■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2년 0.42%, 2015년 0.39%, 2018년 0.09%, 2020년 -0.04%로 둔화

[그림 31]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1.12~2020.12)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년 10월 출생아 수는 관련통계(월간) 작성 이래 최저치, 사망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11월 이후 12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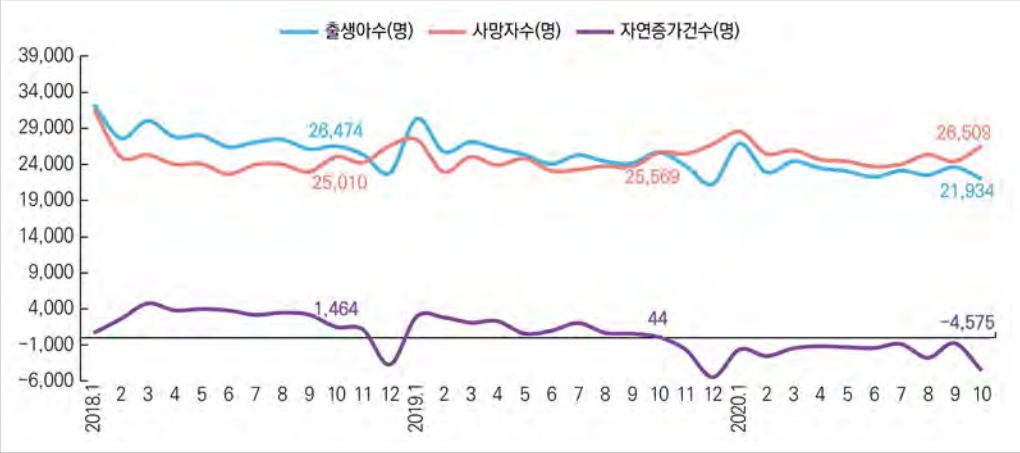
■ 10월 출생아 수는 21,934명으로 1981년 관련통계(월간) 작성 이후 최저치

- 전년동월대비로는 3,679명(-14.4%) 감소하여 감소폭은 2001년 10월(-17.7%) 이후 가장 컸음
- 출생아 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혼인건수의 감소이며, 혼인건수는 2020년 1월~10월간 17만 3,19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

■ 10월 사망자 수는 26,509명으로 관련통계(월간) 작성 이후 최고치

■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2개월 째 지속

[그림 32]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



자료: 통계청(2020),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I. 해외경제동향

1. 미국

미국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고용여건 회복세 둔화 등으로 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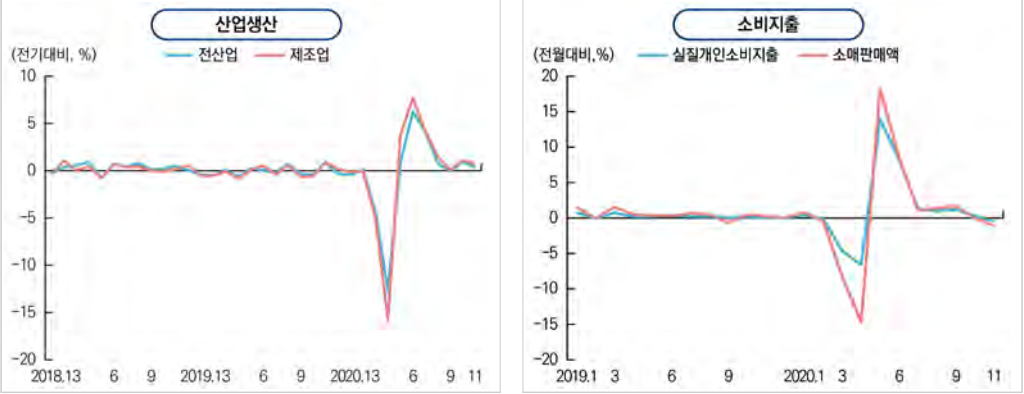
■ **산업생산은 11월 중 전월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12월 중 ISM 제조업구매자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큰 폭으로 상승**

- 전산업생산(전월비, %): ('20. 9월)-0.1→(10월)0.9→(11월)0.4
- 제조업생산(전월비, %): ('20. 9월)0.1→(10월)1.1→(11월)0.8
- 그러나 선행지표인 12월 중 ISM 제조업구매자지수는 60.7로 전월(57.5)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1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소비관련 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졌던 증가세에서 감소 전환되었고,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며 부진**

- 실질개인소비지출은 11월 중 전월대비 -0.4%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었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1.1%로 전월(-0.1%)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12월 중 88.6로 전월(92.9)보다 4.3포인트 하락

[그림 1]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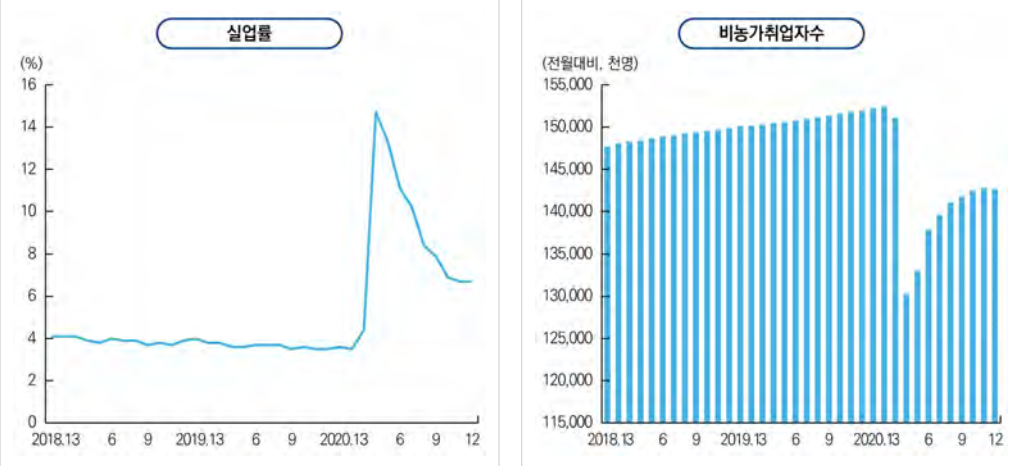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노동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12월 중 실업률이 전월 수준에서 정체되고 비농가취업자수는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 12월 중 실업률은 6.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4.0만명 감소하여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되며 부진
- 1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억 4,262.4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월(1억 5,246.3만명)에 비해 6.5%(9,839만명) 감소한 상황
- 실업률(%): ('20.10월)6.9→(11월)6.7→(12월)6.7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0.10월)65.4→(11월)33.6→(12월)-14.0

[그림 2] 미국 주요 고용변수 추이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주택시장은 주택착공호수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기록적인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

- 주택착공호수는 11월 중 전월대비 1.2%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회복되는 모습
- 주택가격(S&P/Case-Shiller지수기준)은 10월 중 전월대비 1.6%(전년동월대비 7.9%) 상승하여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이후 상승폭도 가파르게 확대되는 양상

*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관련 자료가 이용 가능한 지난 197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주택담보대출금리(30년만기 고정금리, 월말 기준, %): (2020. 3월)3.50→(6월)3.13 →(9월)2.90→(12월)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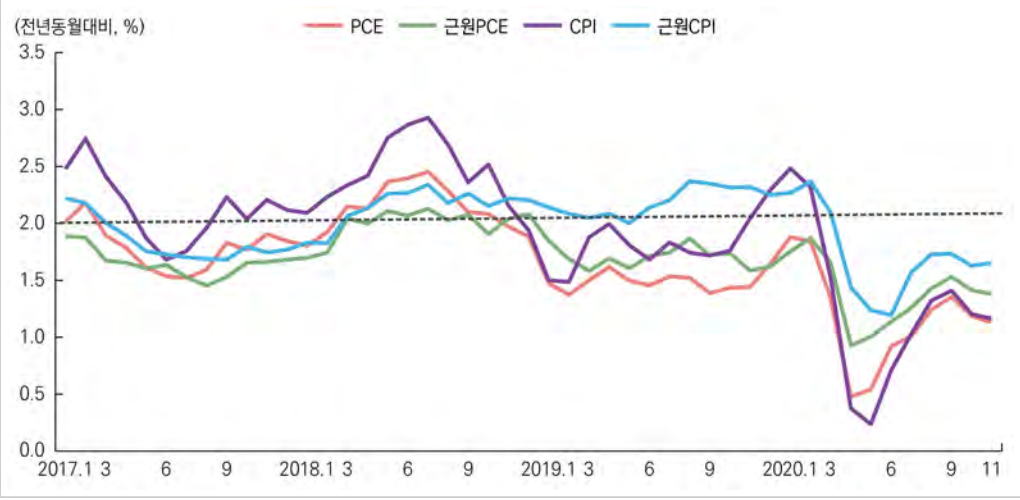
[그림 3] 미국 주택착공호수 및 주택가격 추이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물가는 11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PCE물가상승률이 모두 전월에 이어 상승 흐름이 주춤한 양상을 보임

- 11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PCE물가상승률은 1.1%로 전월에 비해 0.1%p 하락하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지속되던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
- 근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로 전월(1.6%)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근원PCE 물가 상승률은 1.4%로 전월 수준을 유지

[그림 4]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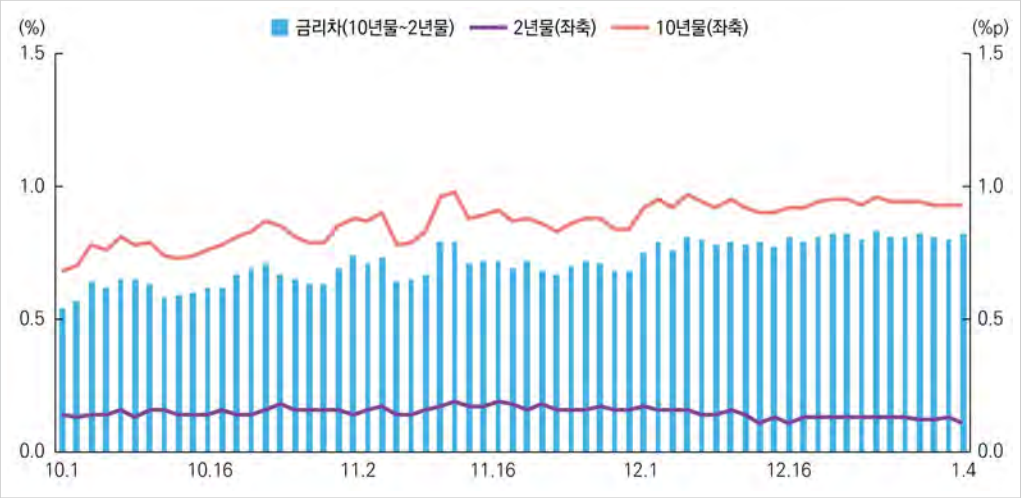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시장금리는 12월 중 10년물 국채금리가 추가 경기부양책과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로 상승한 가운데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제로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소폭 하락**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12월 들어 월초에는 추가 경기부양책과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월말까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며 일평균 0.93%를 기록하여 전월(0.87%)대비 0.06%p 상승
-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제로금리 기조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전월(0.17%)대비 0.03%p 하락한 0.14%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10년물과의 금리차는 0.79%p로 전월보다 0.09%p 확대
- 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 ('20.10월)0.64→(11월)0.70→(12월)0.79
- 미연준은 12월 15~16일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1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매월 최소한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할 계획

[그림 5]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의 일별 추이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미 연준의 12월 수정 경제전망]

■ **미연준은 2020년 1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2021년 실질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이전(9월)보다 상향 조정하였고, 실업률은 하향 조정**

- 실질GDP성장률은 2020년 -2.4%에서 2021년 4.2%로 회복된 후 2022년 3.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2021년 전망치를 지난 9월에 비해 0.2%p 상향 조정

- 실업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5.0%로 하락하고 2022년에는 장기 전망치에 근접하여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9월에 비해 2021년과 2022년 전망치를 각각 0.5%p, 0.4%p 하향 조정
- PCE물가상승률은 2020년 1.2%까지 하락하고, 2021년 1.8%로 상승하여 완만한 속도로 2.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
  - 9월에 비해 2021년과 2022년 전망치를 각각 0.1%p 상향 조정

〈미 연준의 12월 수정 경제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장기
실질GDP성장률	-2.4	4.2	3.2	1.8
(9월전망)	-3.7	4.0	3.0	1.9
실업률	6.7	5.0	4.2	4.1
(9월전망)	7.6	5.5	4.6	4.1
PCE물가상승률[2]	1.2	1.8	1.9	2.0
(9월전망)	1.2	1.7	1.8	2.0
근원 PCE물가상승률	1.4	1.8	1.9	-
(9월전망)	1.5	1.7	1.8	-

주: 회의참석자 예측치의 중간값(median) 기준임

■ **정책금리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2023년 말까지 0.1% 수준(제로금리)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중 적정 정책금리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참석자 전원(총17명)이 현재와 동일한 제로금리 수준을 제시
- 장기 균형금리는 2.5%로 지난 9월 전망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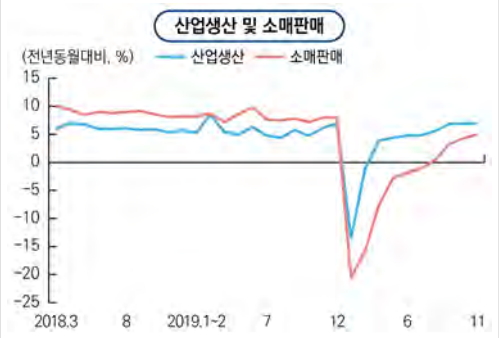
2. 중국

중국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의 실물지표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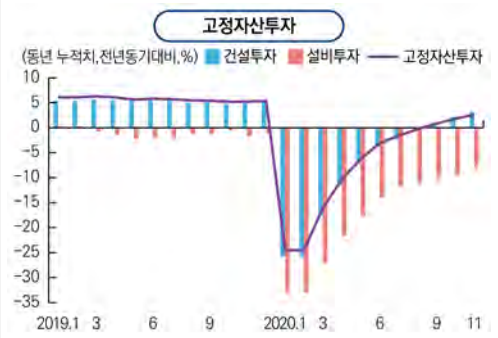
■ **11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하여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소매판매(5.0%) 또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11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6%(동년 누적치)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건설투자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8.0% 감소하여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

[그림 6] 중국 실물지표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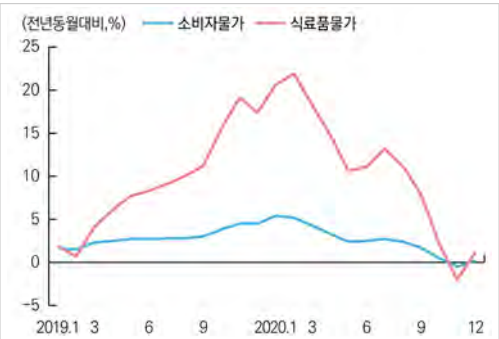
자료: CEIC

2020년 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종합 PMI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지난해 11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일시적인 감소(-0.5%)를 기록하였으나, 한 달 만에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전환

■ 12월 종합 PMI는 제조업(51.9)과 서비스업(55.7) 모두 전월보다 하락하며 55.1을 나타냄

[그림 7]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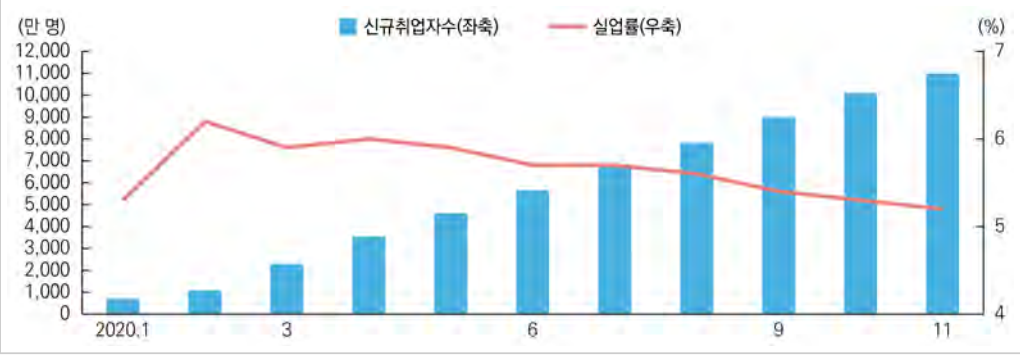
[그림 8]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중국의 실업률(도시지역)은 2020년 4월부터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연중 최저치인 5.2%를 기록

■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신규취업자수(도시지역)는 1,09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하였으나 2020년 2월(-37.9%) 이후 감소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

[그림 9] 중국 실업률 및 신규취업자수



자료: CEIC

2020년 11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02.8% 증가한 754억 달러로 월간 기준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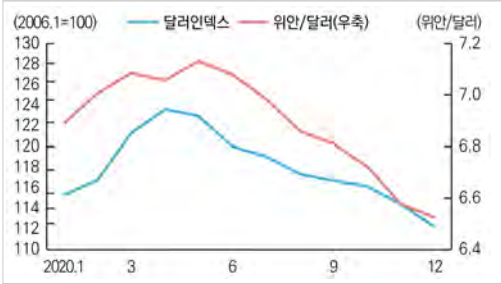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1% 증가하며 33개월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 12월 위안/달러 환율은 6.52위안(월말기준) 수준까지 하락(위안화 강세)

[그림 10]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11] 위안/달러 환율과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PBC, FED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 **2020년 12월(16~18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비공개로 개최**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에서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정책회의로 중국의 경제 및 금융 분야의 국가적 의제를 논의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목표는 차기연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최종 공표됨

■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 등을 강조하면서 2021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

- (재정정책 방향)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재정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가 핵심 정책 사안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과학기술 혁신 촉진,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소득 분배 조절,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위험 완화 등의 세부과제 제시
- (통화정책 방향)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을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에 맞추면서 거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회복 및 리스크 관리를 지원
  - 은행 자본금 확충 채널 다각화, 채권시장 법제 정비, 과학기술·영세기업·녹색성장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금리 및 환율 시장의 개혁 심화,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 유지 등의 세부과제 제시
- (8대 핵심과제) 2021년 주요 경제정책은 8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
  -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 산업망·공급망의 독자적 관리 능력 강화
  - 내수 확대
  -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
  - 식량안보 확보(종자와 경지 문제 해결)
  -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 대도시 주거안정
  - 탄소중립

3.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조치로 실물경기가 부진하나, 백신 출시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10월 중 산업생산은 중간재(2.1%), 에너지(1.8%), 자본재(2.6%), 내구재(1.5%) 등 모든 부문의 생산이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

- 산업생산(전월대비, %): ('20.8월)0.5→(9월)0.1→(10월)2.1
- 국가별로는 독일(3.4%), 프랑스(1.7%), 이탈리아(1.3%)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증가

■ **11월 중 소매판매는 봉쇄조치 등으로 메일 및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의복 및 신발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6.1%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0.9월)-1.5→(10월)1.4→(11월)-6.1
- 12월 중 부문별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음식료품(-1.7), 섬유·의류 및 신발(-8.9), 전자기기 및 가구(-0.3), 컴퓨터 및 서적(-2.3), 의약품(-0.1), 메일 및 인터넷판매(1.8)

[그림 12]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omberg, Eurostat

[그림 13]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omberg, Eurostat

■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20년 7월 정점을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나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

- 10월 중 유로지역 실업률은 8.3%로 7월(8.7%) 정점에서 4개월 연속 하락세
- 10월 중 청년실업률은 18.4%로 9월(17.9%) 이후 2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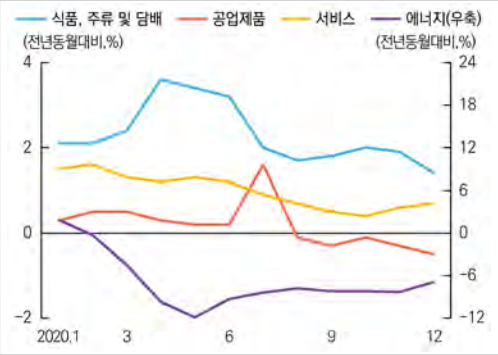
■ **12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공산품물가도 하락하는 등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상승률은 0.2%를 나타냄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omberg, Eurostat

[그림 15]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omberg, Eurostat

■ **12월 중 유로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모두 상승하며 종합 PMI는 전월에 비해 4.6p 높은 49.8을 기록**

- 특히 백신 출시로 기업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제조업 PMI는 31개월만에 최고치인 55.5를 기록
- 12월 들어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봉쇄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서비스업 PMI도 전월보다 5.6p 상승한 47.3을 기록
- 봉쇄조치가 완화된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각 전월대비 8.9p. 7.0p 상승하였으나, 유로 주요국 중 독일(51.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의 PMI는 여전히 기준선(50)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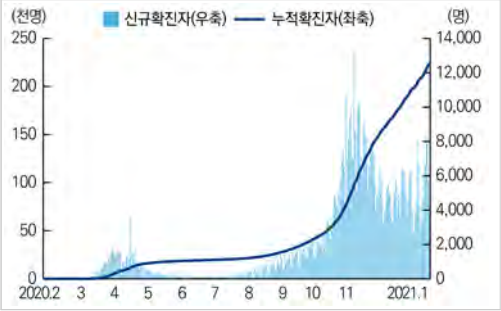
[그림 16]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omberg, Markit

[그림 17]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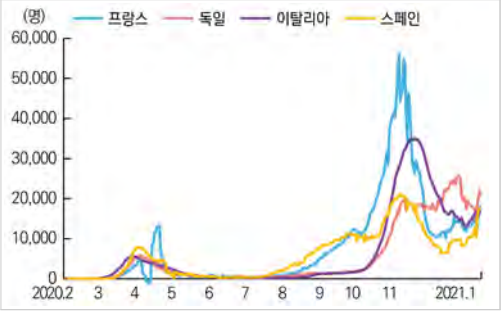
자료: Blooomberg, Markit

[그림 18] 유로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자료: GCDL

[그림 19] 유로지역 주요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추이



주: 7일 이동평균
자료: GCDL

4. 일본

일본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지속

■ **2020년 11월 중 소매판매액은 상품(-3.8%), 연료(-6.5%) 등 대부분 항목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2.0% 감소**

- 한편, 11월 중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식료품(1.4%)은 늘었으나 가구·가사용품(-13.4%), 의복및신발(-11.3%)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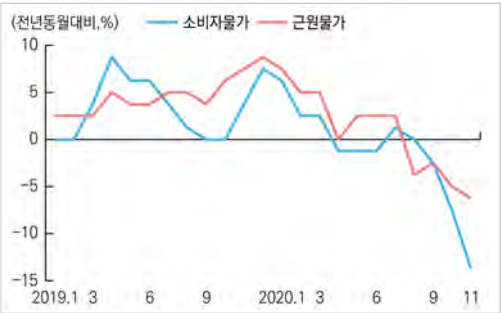
■ **11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신선야채(-2.4%), 전기요금(-7.3%)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9% 하락**

- 지난 2016년 9월(-0.5%) 이후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그림 20] 일본 가계실질소비지출과 소매판매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1]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 **11월 중 비농업취업자 수는 건설업(-8만명), 제조업(-19만명)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44만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2.9%로 전월에 비해 하락**

-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0.9월)-55→(10월)-80→(11월)-44
- 실업률(%): ('20.9월)3.0→(10월)3.1→(11월)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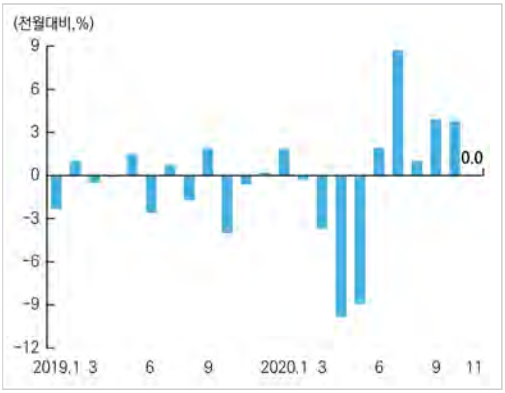
■ **11월 중 광공업 생산은 생산용기계공업(6.5%), 수송기계공업(8.3%)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공업(-4.7%), 무기·유기화학공업(-1.7%) 등에서 줄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냄(전월대비 0.0% 변동)**

- 출하가 0.9% 줄고 재고가 1.1% 줄어 재고율지수는 1.8% 감소

[그림 22]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그림 23] 일본 광공업 생산증감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 **11월 중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2%, 11.1% 감소하여 교역규모 축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경상수지는 흑자가 지속되는 모습**

- 수출 품목 중 반도체등전자부품(-4.0%), 자동차(-3.0%), 전산기기(-17.9%) 등에서 감소하였고, 수입 품목 중 식료품(-12.7%), 광물성원료(-40.2%) 등에서 감소
-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수출감소폭보다 수입감소폭이 큰 것에 따름)가 지속되는 것에 기인
- 무역수지(억엔): ('20.9월)6,878→(10월)8,717→(11월)3,661
- 경상수지(억엔): ('20.9월)66,901→(10월)21,447→(11월)18,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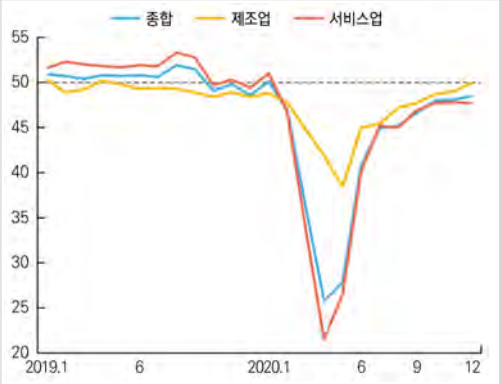
■ **12월 중 PMI(구매관리자지수)는 48.5로, 일본 내 코로나19 3차 재확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베이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며 특히 제조업PMI는 기준선인 50.0을 기록**

- 서비스업 PMI는 47.7을 기록

[그림 24]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재무성

[그림 25]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일본의 '제2차 긴급사태'('21.1.7.)발령과 3차 경제대책('20.12.8.) 발표]

■ **일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1월 7일 '제2차 긴급사태'를 발령**

- 일본의 최근 일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천명(1.8일 7,882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
- 일본 방역당국은 수도권(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에 '제2차 긴급사태'를 발령
  - 음식점은 20시 이후 영업 제한, 상업시설(백화점, 유흥시설 등)은 20시까지 영업 단축
  - 20시 이후 외출 자제, 기업 근로자는 약 70% 재택근무 권고
  - 학교는 정상등교
  - 특별입국 협정국을 제외한 신규입국을 전면 제한
- 지난 4월 발령되었던 '제1차 긴급사태'에 비해 완화된 제한 조치 실행
  - '제1차 긴급사태' 대상지역은 전국이었고, 상업시설은 휴업을 권고하였으며 학교도 원칙적으로는 휴교령을 내렸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조치
-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사태 발령을 통해 감염확산을 억제하여 2021년 2분기 이내 백신 접종과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

■ **일본은 지난 12월 '3차 경제대책'을 통해 총 규모 73.6조엔(GDP의 13.1%)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및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2020.12.8.)**

- 총 규모 73.6조엔 중 재정지출 규모는 40조엔(GDP의 7.1%)로 스가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

-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디지털화·탈탄소화 등 경제구조 개혁에 집중
  - 병상 확보와 보건의료체계 확충, 음식점 등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지급(6조엔)
  - 정부·민간의 디지털화, 탈탄소화(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정책 등) 이행 등 경제구조 개혁에 51조 7천억엔 지출
  - 지진, 자연재해 등 재해방지를 위한 기반 확충에 5조 9천억엔 지출
- 1~3차 경제대책의 총 규모는 GDP의 56%에 달하는 307.8조억엔(약 3,209조원)

5. 러시아

러시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주요 경제 지표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산업 생산을 중심으로 회복

■ 러시아의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산업 생산증가율의 감소폭은 축소

-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초 루블화 약세 및 경제활동 제한조치(3.28.~5.11.)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기 시작하여 10월 이후 목표치인 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11월 산업생산증가율은 7월 이후 경제활동 완화조치로 인한 생산활동 개선 및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6% 하락을 나타내며 감소폭이 축소

[그림 26] 러시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Datastream

[그림 27] 러시아 생산증가율

자료: Datastream

■ **러시아의 수출·입은 원유의 가격하락 및 생산 감소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경제활동 재개로 그 감소폭이 축소**

- 2020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은 -16.9%로 5월(-35.2%) 대비 감소폭이 축소
- 2020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수입 증가율은 -2.3%로 4월(-20.3%) 대비 감소폭이 축소

■ **러시아는 소비 촉진 및 경기회복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했으나, 루블화 통화가치 약세와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담으로 7월 이후 동결**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7월 24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4.25% 수준으로 정한 뒤 동결
- 2020년 상반기, 4차례 인하: ('20.2월)6.00%→(4월)5.50%→(6월)4.50%→(7월) 4.25%
- 2020년 1월 루블화 가치는 달러 기준 61.9루블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10월 77.6루블까지 급등

[그림 28] 러시아 수출·입 증가율

자료: Datastream

[그림 29] 러시아 기준금리 및 환율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

■ **2021년 1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확산세가 심화되는 추세**

- 1월 17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9,504만 5,634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55만 231명
  - 북미·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세계 공통적으로 확산세가 심화
  - 대륙별 지역구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유럽 〉 북미 〉 아시아 〉 남미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지역 순
  -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북미 〉 유럽 〉 아시아 〉 남미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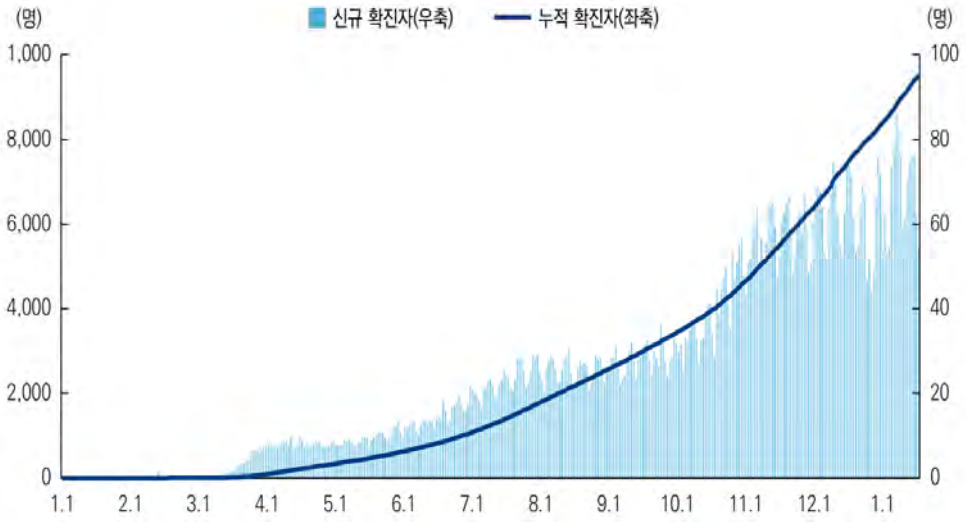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1.17.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일일)	95,045,634 (550,231)	27,654,011 (176,678)	27,379,395 (200,174)	22,083,784 (75,180)	14,633,595 (70,576)	3,262,232 (27,064)	31,896 (19)
사망 (일일)	2,030,831 (8,706)	628,171 (3,409)	577,575 (2,459)	356,898 (973)	388,320 (1,267)	78,907 (598)	945 (0)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1.17.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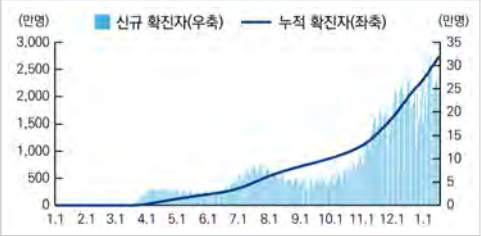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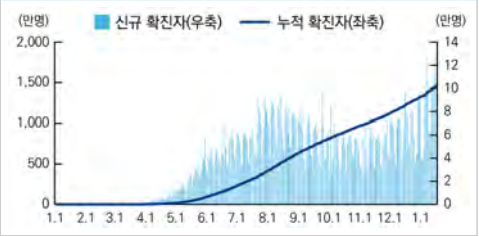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북미·남미·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유지되는 양상**

- **(북미)**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는 작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금년 1월 현재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되는 모습
- **(남미)** 작년 10월 중 코로나19 확산이 일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금년 1월에도 증가 추세가 유지
- **(유럽)**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여 각국이 봉쇄령을 실시한 영향으로 '20년 11월 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생이 일부 둔화되었으나, 영국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
- **(아시아)**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 등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
-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년 10월 이후의 재확산 추세가 금년 1월 현재까지 유지되는 모습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20년 7~8월의 2차 확산이 진정된 이후 금년 1월에도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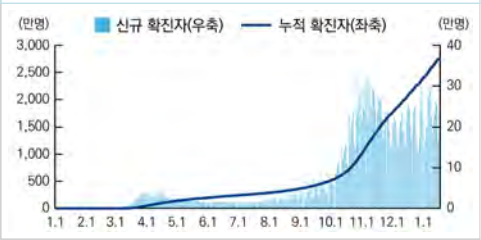
〈북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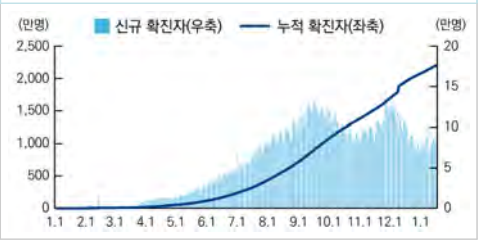
〈남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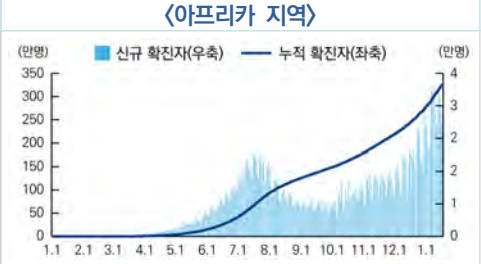
〈유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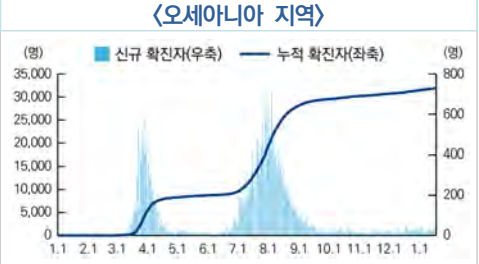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 WH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현황(1.17. 기준)]

연번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100만명당 확진자 (명)
–	전세계	95,045,634	550,231	2,030,831	2.1	12,193
1	미국	23,936,773	177,918	397,600	1.7	72,316
2	인도	10,571,773	13,788	152,419	1.4	7,661
3	브라질	8,488,099	33,040	209,847	2.5	39,933
4	러시아	3,530,379	23,178	64,601	1.8	24,192
5	영국	3,405,740	38,670	89,429	2.6	50,169
6	프랑스	2,969,091	37,405	70,422	2.4	45,487
7	터키	2,387,101	6,436	23,997	1.0	28,304
8	이탈리아	2,381,277	12,544	82,177	3.5	39,385
9	스페인	2,252,164	(미집계)	53,314	2.4	48,170
10	독일	2,050,129	11,484	46,901	2.3	24,469
11	콜롬비아	1,908,413	17,379	48,631	2.5	37,506
12	아르헨티나	1,799,243	7,264	45,407	2.5	39,810
13	멕시코	1,641,428	11,170	140,704	8.6	12,731
14	폴란드	1,435,582	5,970	33,355	2.3	37,932
15	남아프리카공화국	1,337,926	12,267	37,105	2.8	22,559
16	이란	1,330,411	6,016	56,803	4.3	15,840
17	우크라이나	1,198,512	6,398	21,767	1.8	27,405
18	페루	1,060,567	4,544	38,770	3.7	32,166
19	네덜란드	925,355	5,643	13,107	1.4	54,004
20	인도네시아	907,929	11,287	25,987	2.9	3,319
21	체코	889,159	5,253	14,338	1.6	83,029
22	캐나다	713,181	6,284	18,024	2.5	18,896
23	루마니아	693,644	2,156	17,221	2.5	36,057
24	벨기에	678,839	1,630	20,435	3.0	58,573
25	칠레	669,832	4,339	17,477	2.6	35,040
26	이라크	608,232	645	12,944	2.1	15,122
27	이스라엘	551,689	8,190	4,005	0.7	63,738
28	포르투갈	549,801	10,385	8,861	1.6	53,919
29	방글라데시	527,632	569	7,906	1.5	3,204
30	스웨덴	523,486	(미집계)	10,323	2.0	51,834
31	파키스탄	521,211	1,920	10,997	2.1	2,360
32	필리핀	500,577	1,886	9,895	2.0	4,568
33	스위스	495,228	(미집계)	8,682	1.8	57,221
34	모로코	459,671	806	7,942	1.7	12,454
35	오스트리아	393,778	1,267	7,082	1.8	43,722
36	세르비아	372,533	1,317	3,750	1.0	54,747
37	사우디아라비아	364,929	176	6,323	1.7	10,482
38	헝가리	351,828	1,241	11,341	3.2	36,420
39	일본	330,715	5,773	4,305	1.3	2,615
40	요르단	314,514	957	4,145	1.3	30,825
86	대한민국	72,729	389	1,264	1.7	1,419

주: 연번은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요 경제정책]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15(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함**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2만명으로 2019년(5,184만명) 대비 2만명 감소하여 사상 처음으로 내국인 인구가 감소함
  - 특히 2020년 출생(등록)자 수는 30만명이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275,815명)를 기록하였고, 사망(말소)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임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
  - 다만, 외국인 거주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됨
-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하에서, ①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제시
  - ①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200만원 지원, 3+3육아휴직제 시행* 등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②노인 건강검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③고교 학점제 도입,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및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④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인구통계상 연령기준(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 65세 이상) 재검토 추진

■ **정부는 12.17(목)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함**

- 정부는 2020년을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 해라고 평가하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및 고용 충격 지속 가능성을 언급함
  - 경제위기 이후 고용 회복 속도는 통상적으로 경기에 약 6개월~1년 정도 후행
- 따라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이행과 도약」을 목표로 ①코로나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②경제 활력 제고, ③민생개선, ④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⑤안정·지속 성장 위한 미래대비, ⑥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제시
  - ①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목표 63% 설정, 494.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 ②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증가시 해당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110조원 확대
- ③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등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및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3조원+α규모의 맞춤형 지원
- ④5G 확산 가속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 2021년 중 디지털 뉴딜에 총 12.7조원 투자
- ⑤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 13.2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 투자,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 실행
- ⑥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고교 무상교육 전면적 실시, 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 또한, 2021년 경제전망으로 경제성장률 3.2%, 취업자 수 15만명 증가, 물가상승률 1.1% 등을 제시

■ **정부는 12.23(수)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함**

• 2020년 고용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근로자 76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2조 1천억원을 지급하였고, 실업자 160만명을 대상으로 구직급여 10조 9천억원을 지급함

•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기존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입장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 보호필요성: 노동시장 취약성,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 등
관리가능성: 소득정보, 종사실태 확인 가능성 등
사회적 영향력: 특수고용 규모 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로드맵]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Ⅰ. 2021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 점검 ····· 82

Ⅱ.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내용 ····· 89

Ⅲ.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 95

Ⅳ.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 101

Ⅰ. 2021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 점검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김윤희** 경제분석관(6788-4670)

1. 2021년 국내·외 경제 여건

IMF, OECD 및 World Bank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복원대책과 소비회복에 힘입어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0~5.2%로 전망

■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2021년 평균적으로 3.3~3.9%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5.0~6.0% 성장 전망**

- 이는 효과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전제로 하며,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거나 백신 공급이 실패하면 성장률은 하락할 수 있음
- 한국이 포함된 선진국[1]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경기부양 및 소비회복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국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예상

[표 1] 해외 주요 국제기구 2021년 경제전망 비교

(단위: %)

국제기구	IMF (2020.10.)	OECD (2020.12.)	World Bank (2021.1.)
세계 경제성장률	5.2	4.2	4.0
선진국 경제성장률	3.9	3.3	3.3
신흥국 경제성장률	6.0	5.1	5.0
한국 경제성장률	2.9	2.8	-

주: 전년대비 증가, World Bank는 경제성장률 계산 시 시장환율 기준, IMF와 OECD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자료: IMF, OECD, World Bank

■ **IMF는 2021년에도 팬데믹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상·하방 요인의 존재를 전망[2]**

- 상방 요인으로는 신속한 경제정상화,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제 개발 및 백신 보급이 있음
- 하방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불안 확대, 금융여건 악화,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있음

1) OECD는 37개 회원국을 선진국으로, World Bank는 OECD 37개 회원국에서 터키, 멕시코, 리투아니아 등 5개국이 제외된 32개국을 고소득 선진국으로, IMF는 World Bank 고소득 32개 국가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포함된 39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13.

■ **World Bank는 2020년 4분기 이후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및 글로벌 봉쇄 심화로 당초 전망대비 세계경제 전망을 0.2%p하향 조정[3)]**

- 2021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가 중요하며, 신규 확진 증가와 백신공급 실패 등 하방리스크 증가 시 세계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
- 팬데믹 이전보다 세계 GDP는 2021년에는 5.3%, 2022년에는 4.4% 감소한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영구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

■ **OECD는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 보급 등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2021년 말까지 상당기간은 국지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4)]**

-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은 검사·추적·격리 및 개인방역 조치가 잘 구축되고 시행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북유럽 지역에서 적었음

[표 204] 2021년 경제전망에 대한 상·하방요인

	상방요인	하방요인
IMF	경제정상화,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향상, 치료제 개발 등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불안 확대, 금융여건 악화,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OECD	백신·치료제 보급, 추가부양책, 재정정책 및 부동산·인프라투자, 소비회복, 산업구조 개혁,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역량강화 등	봉쇄조치 재개, 기업부채 증가, 불평등도 증가, 관광객 감소, 정책여력 감소 등
World Bank	대규모 재정투입, 해외수요 증가, 백신공급,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	확진자 증가, 자본유출·환율절하 심화, 실업·식량불안, 금융불안, 서비스업 침체, 1인당 소득감소율 증가, 국가부채율 증가 등

자료: IMF, OECD,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2021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 백신 보급 및 대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인해 내수·수출이 동반상승하여 완만한 경제회복세가 예상되나, 유동성 확대로 인한 물가상승과 자산가격 변동성 증가 리스크 존재

■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역성장(-1.1%)에서 벗어나 2021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경제성장세 반등을 견인할 전망[5)]**

- 고용 및 내수 회복 등으로 인해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주가 상승, 저축증가 및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개선될 전망

3)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 2021. 1. 5.
4)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1.
5)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 2020.12.17.

- 주택공급 및 생활 SOC투자 확대,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공장 증설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가 확대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과 지원으로 R&D투자 증가 예상
- 수출입은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글로벌 교역이 증가하며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증가할 전망

■ **다만,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자산가격 변동성 증가, 민간신용의 증가[6] 등은 금융 건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7]**

- 2020년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로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은 상승했으나 실물부분 회복 지연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 2020년에는 실물 부문에 대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어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0.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물가하방압력[8]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9]

2.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경제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10]

■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과 활력을 제고시키며 민생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경제 운용 시행
- 내수 확대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며 투자 및 수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생존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촉진

■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비하여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구조로 전환 추구**

- IC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경제를 추구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
-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시대 이행을 위해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책 마련
-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코로나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며, 포용국가로 전환 추구

6) 2020년 3/4분기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중은 211.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12.24.
7)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 2020.12.17.
8) 2020년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 소멸, 이동통신요금 지원(20.4/4분기)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2020년말 종료)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
9) 한국은행, 경제전망, 2020.11.26.
10)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2020.12.17.

[그림 1] 2021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추구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로 전환
① 적극적 경제 운용	④ 혁신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② 내수·투자·수출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⑤ 안정·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③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⑥ 포용성·공정성 강화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경제를 운용하고, 내수회복과 병행하여 투자·수출 개선을 도모하며, 민생개선을 주요 선제적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

■ **백신 선구매 등 백신 접종 사전준비를 본격화하고, 의료체계 대응력을 강화**

- 위험 예측을 통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감염병 관련 보험[11]을 개발하며, 방역물자 비축 등 완충능력 제고

■ **내수회복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산업 등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며, 투자회복세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 국내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추가로 선정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로 전환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빠른 투자회복을 위해 110조원 규모(2020년 대비 10조원 증액)의 공공·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
-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FTA·양자경협 등 국제협력 기반의 수출지원 확대와 개발금융 활성화

■ **민생개선을 위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1년 중 총 5.4조원을 투자하여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로드맵 마련
-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고, 4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
- 코로나시대 격차해소를 위해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 전반에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11)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 등을 보상하는 기업 휴지보험, 계약철회 보상보험 등

3.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점검

2021년에는 일정 수준의 경제회복과 글로벌 교역 개선이 예상되나, 감염병 사태의 종식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므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와 더불어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될 필요

■ **내수 분야는 총수요 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을 견지함과 동시에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감염병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

■ **수출 분야는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

- 2021년에 글로벌 제조업 PMI는 기준선인 50을 넘을 전망이며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도 3.2~10.2% 증가 예상
- OECD는 향후 2년간 글로벌 경제는 백신 보급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12)]
- 다만, 감염병 사태 종식의 지연 및 과잉유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위기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협력체제의 활성화가 중요[13)]

2021년에는 이러한 내수·투자·수출 개선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면서 감염병 사태 등으로 드러난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충과 글로벌 분업체제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강구될 필요**

- 특히 국내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할 필요[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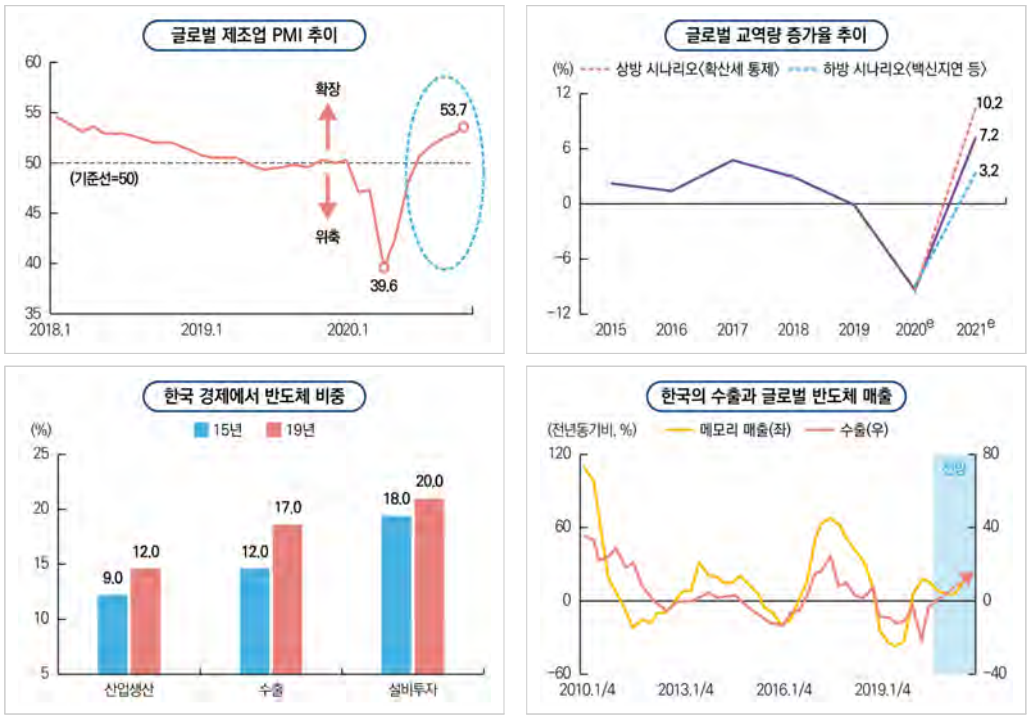
■ **또한 이차전지 및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과 서비스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중요**

■ **이외에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의 내생적 제고역량을 강화할 필요**

---

12)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1.
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13.
14)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과 수출의 상관계수는 2010~2015년에는 0.60에서 2016~2019년에는 0.95로 상승하여 한국의 수출과 글로벌 반도체 매출의 동조화가 심화,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 2020.12.17.

[그림 2] 글로벌 경기 및 한국 수출 추이



자료: WTO, JP Morgan, 무역협회, WSTS,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격차, 고용격차, 산업격차 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도 중요

■ **OECD는 취약계층 집중(targeted) 지원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IMF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원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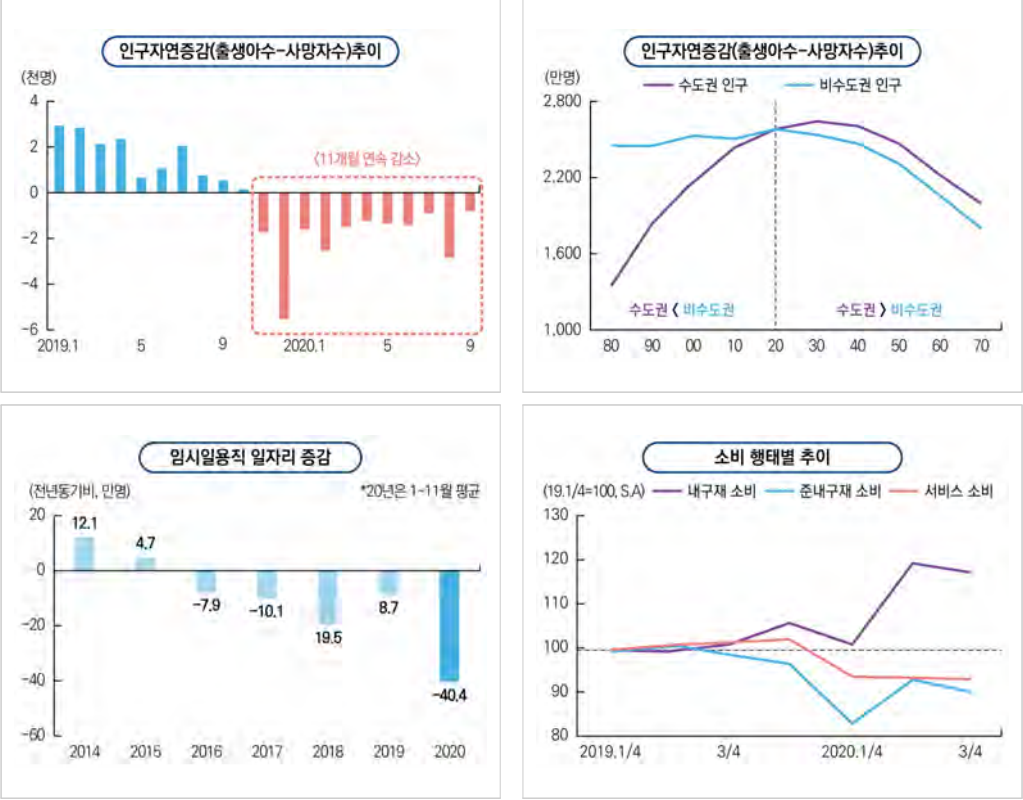
-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소득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여성·청년 고용률도 낮음[15]
- OECD는 공공부문의 부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 비용이 낮은 만큼, 교육·보건 등 영역에 대한 투자와 불평등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16]
- IMF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17] 및 재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며 경제활동이 재개될 때 피해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공공투자,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권고[18]

15)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2020. 8.11.
16)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1.
17) 선별적·한시적 조세감면, 직장폐쇄 시 임금보조, 실업급여 자격 기준 완화 등

■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구감소를 비롯한 지역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소비형태 변화로 인한 산업격차도 증가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인구가 자연감소 추세이며,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40.4% 감소했으며, 준내구재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감소
-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현재 경제여건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용성·공정성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요구됨

[그림 3] 최근 인구·지역·고용·소비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18)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13.

Ⅱ.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내용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6788-4657)

1. 미래관계 협상 타결 과정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환기간을 설정하여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

■ **2020년 1월 EU 탈퇴협정 법안이 영국의회를 통과하고 유럽의회가 이를 비준하면서 영국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

■ **영국이 EU를 탈퇴한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말을 종료시한으로 한 브렉시트 전환기간(Brexit transition period) 동안 영국과 EU는 미래관계(future relationship)[1] 협상을 진행**

-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안보와 외교정책 등에 대해 9차례의 미래관계 협상, 4차례의 공동위원회 등 논의를 진행

그러나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어업권, 지배구조(governance) 등 대표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증대되었음

■ **(공정경쟁) EU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보조금, 노동, 환경, 경쟁, 조세 등을 EU 규정에 맞추기를 요구하였으나[2], 영국은 독자적인 법률과 규칙을 적용하고자 함[3]**

■ **(어업권) 영국은 조업권과 무역협상간 연계가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별도 협정을 요구하였으나[4], EU는 현행 상호 접근권 및 안정적 어획쿼터 유지를 요구**

■ **(지배구조) 일방이 합의를 어길 경우 EU는 유럽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구속력을 행사하기를 요구하는 반면 영국은 구속력 확대를 반대[5]**

■ **(내부시장법) 전환기간 종료 후 EU법률을 대체하는 영국의 국내법으로 발의되었으나, EU시장에 잔류하는 북아일랜드가 EU의 관세체계를 따라야 하는 EU 탈퇴법안과 상충되는 조항 등으로 논란[6]**

---

1) 영국이 EU 탈퇴 후 역외국으로서 EU와 새롭게 맺게 될 관계
2) EU 측은 영국이 독자적인 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방지 하고자 함
3) 영국은 독립국가로서 경제적·정치적 주권 보장을 위한 협정 추구
4) 영국은 별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EU의 영국 수역내 조업쿼터를 매년 어종별, 구획별 협상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EU-노르웨이 방식)
5) 특히 EU는 영국정부가 9월 14일 EU탈퇴법안과 상충되는 내부시장법을 가결하자 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

■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전환기간 종료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과 EU간 교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아 양측의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증대되었음

그러나,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24일 미래관계 협상에 합의하며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해소

■ 영국과 EU는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24일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타결을 발표하여 미래관계 협상에 대하여 상호합의

- 폰 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12월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상간 논의의지를 밝히며 7~8차례 협상
- 12월 8월 영국이 한발 물러서 내부시장법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통관 및 검역절차 등에 합의하는 등 영국의 내부시장법 유보로 EU와의 합의 발판을 마련

■ 이번 타결로 양측이 협상에 합의하지 못해 영국이 2021년 1월 1일 합의안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해소

2.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 주요내용

EU와 영국은 핵심쟁점인 공정경쟁, 어업권, 지배구조 등에서 상호 양보하며 타협안을 도출

■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을 준수한(appropriate rules of origin) 모든 제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zero tariffs and zero quotas) 적용

- 그러나 영국이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이탈하는 만큼 모든 교역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절차는 진행

■ (어업권) 향후 5.5년간 EU는 영국 수역에 접근 가능(현행보다 25% 감축)하며 전환 기간 종료 후 매년 어업협상을 통해 지속 여부 및 어획량 등을 협의

6) 2019년 9월 타결된 EU 탈퇴법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실질적으로 EU관세동맹에 머물게 되어 영국 본토와 거래시 관세가 부과되고 통관절차가 적용되나, 내부시장법에서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지역이 내부시장으로 운영되어 영국은 북아일랜드를 통한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해짐

- EU와 영국간 수역에서 100여 종 이상의 어류에 대한 공동관리(joint management)에 합의

■ **(공정경쟁) 환경, 노동권, 조세, 국가 보조금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공통의 원칙에 합의**

- 규제완화 및 보조금지급 등으로 공정경쟁이 훼손될 경우 양측 법원 및 감독기구에 심사권이 부여되며 보조금 회수 등 집행이 가능
- EU는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를 위해 향후 환경, 사회, 노동 부문의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영국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

■ **(지배구조)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의 이행 및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상호조정기구(Partnership council)를 구성하고 합의 위반시 독립적 중재기구(arbitration tribunal)를 통해 이를 시정**

[표 1] EU회원국과 비교한 EU-영국간 혜택

	영국-EU	EU 회원국		영국-EU	EU 회원국
인적이동			서비스이동		
국경검문 폐지	✗	✓	금융패스포트	✗	✓
애완동물 여권	✗	✓	전문자격증 인정	✗	✓
무비자체류(90일초과)	✗	✓	항공 운송		
취업 및 학업	○	✓	단일 항공지역	✗	✓
무료 로밍요금	✗	✓	EU-영국-제3국간 운송	○	✓
상품이동			육상 운송		
마찰없는(frictionless) 무역	✗	✓	단일 운송지역	✗	✓
무관세, 무쿼터	✓	✓	에너지		
통관수속 면제	○	✓	단일 에너지 시장	✗	✓
위생 및 검역조치 면제	✗	✓	EU 프로그램 참여		
어업협약	○	✓	Eramus, NextGeneration	✗	✓
EU국제협약 혜택 제공	✗	✓	Horizon Europe	○	✓

주: ✓는 혜택 적용, ✗는 혜택 미적용, ○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가능한 경우
자료: European Commission

그러나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의 경우 추가 논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적이동 및 교통운송 등에서도 제약을 받을 전망

■ **서비스부문의 상호 동등성(equivalence) 평가에 대한 논의가 유보되어 영국의 EU 회원국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을 가능성**

- 그동안 영국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패스포트[7] 권한을 보유하여 승인이나 규제 없이 EU 회원국에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음
-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 금융기관이 EU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EU로부터 영국의 금융서비스 규제가 EU와 동등하다는 동등성 평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EU는 2022년까지 파생상품 청산소를 제외하고는 추가 승인을 유보하는 방침을 밝혀 영국의 EU시장 금융서비스 제공에 불안요소로 작용

■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 출장, 여행, 학업 등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 심사 및 여권 검사가 부활**

-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항공조종사 등 전문자격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중단

■ **항공 및 육상 운송에서 기존과 같이 승객과 화물 운송이 가능하나, EU의 항공 및 육상서비스는 EU 단일시장에 참여할 수 없음**

- EU와 영국간에 승객과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으나, EU-영국-제3국을 오가는 화물운송의 경우 EU회원국과 영국이 상호간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

3.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국과 EU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제거되었으나, 영국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상품이동의 무관세·무쿼터가 적용되기는 하나 EU와의 교역시 통관 및 검역절차가 시행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

- 2019년 기준 대EU 상품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46%, 53%를 차지[8]하고 있어 영국 교역품의 절반 정도가 비관세 규제를 받게 될 전망

7) EU 역내의 금융거래에 있어 '패스포트 권한'이란 한 EU 회원국 내에 설립된 기업이 다른 EU 회원국 내에 자유롭게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브렉시트와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지위, 유럽연구35(1), 강유덕)

8) "Pink Book 2020", 영국통계청(ONS)

- 2020년 11월 NIES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은 영국이 EU에 속해있는 경우에 비해 영국과 EU간 교역량이 2030년 까지 46%(협상 타결시, 노딜의 경우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는 협상 타결의 경우 장기적으로 4% 낮아질 전망(노딜의 경우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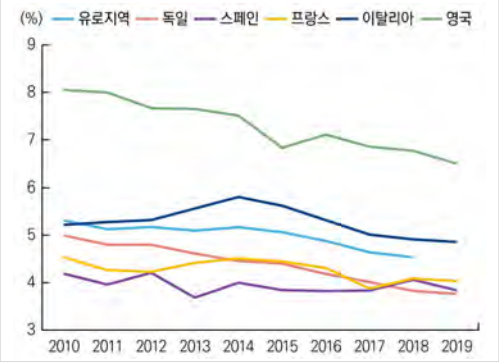
■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동등성 인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금융서비스 부문의 영국 이탈이 불가피하며 인적·물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

- Ernst & Young의 Financial Services Brexit Tracker[9] 에 따르면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최소 7,500여개(2020년 10월 기준)의 일자리가 EU지역으로 이전
- 2021년 1월 7일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브렉시트 투표 이후 5,000~7,000여개의 금융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하였다고 밝힘
- 브렉시트 이후 첫 거래일인 2020년 1월 4일 중 런던 증권시장 거래자금 중 60억 유로가 여타 EU 국가들로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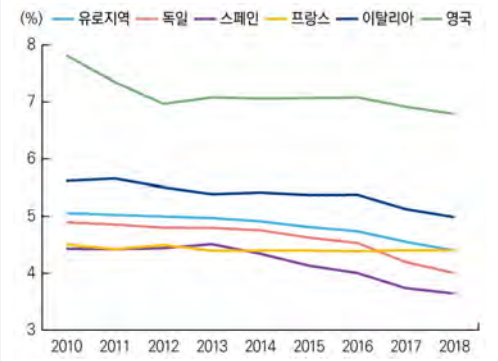
■ **영국경제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EU와의 높은 금융서비스교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금융부문 위축은 영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금융서비스 부문은 2019년 기준 영국 GDP의 6.5%, 전체 고용의 3.1%(런던의 경우 6.4%), 전체 조세수입의 10.5를 차지[10]
- 금융서비스 수출 및 수입에서 EU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7%, 35.9%[11]

[그림 1] 총 부가가치 대비 금융산업 비중



[그림 2] 총 임금 대비 금융산업 비중



자료: Eurostat

9)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222개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조사
10) Bloomberg, 영국통계청(ONS), City of London Corporation
11) 영국통계청(ONS)

4.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으며, 한영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라 통상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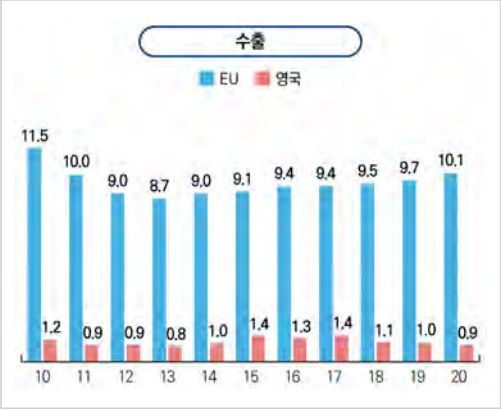
■ **2020년 1~11월 기준 영국과의 교역규모는 79억 5,7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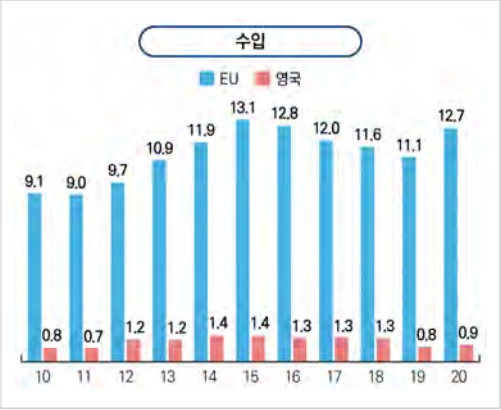
■ **브렉시트로 한·EU FTA에서 영국이 제외되더라도 2019년 8월 체결된 한·영 FTA가 2021년 1월부터 즉시 발효되어 교역조건과 특혜관세 유지**

-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면서 EU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무관세 적용

■ **현재 런던 소재 국내 금융회사는 총 21개(이 중 현지법인이 8개)[12]이며, 지점 형태로 진출하여 한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금융패스포트를 활용한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부문의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

[그림 1] 한국의 대EU 및 대영국 수출입 비중 추이 (전년대비, %)





주: 2020년은 1~11월 자료
자료: 무역협회

12) 주프랑크푸르트 총 영사관

III.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상미** 분석관(6788-4752)

1. 현황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원으로 2019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8,256만원으로 2019년 대비 4.4% 증가

■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6,287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그림 1] 2020년 가구 평균 자산·부채·순자산

(단위: 만원)

주: 가구의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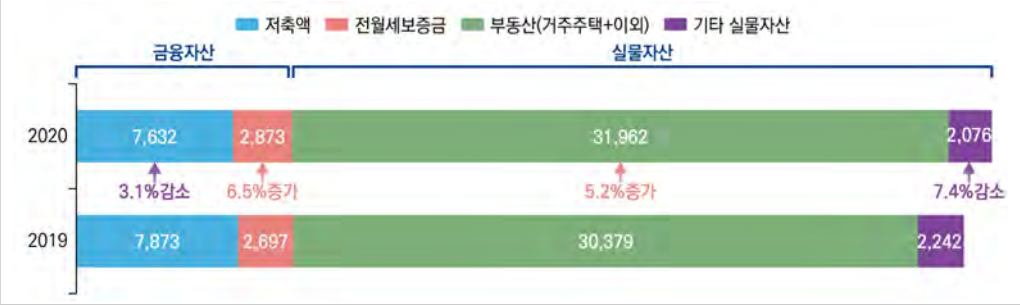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월세 보증금 및 부동산 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9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이 3억 1,962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8%를 차지**

■ **자산 유형별로 2019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저축액 및 기타실물자산(자동차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월세 보증금(6.5%), 부동산(5.2%)이 많이 증가**

[그림 2]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단위: 만원)



주: 가구의 자산금액은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대비 가구주 연령대별 보유자산 증감율을 비교해본 결과 30대가 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30대가 8.7%, 40대가 3.7%, 50대가 3.2% 증가하였는데, 30대가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주택 구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1]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연령대	2019년	2020년	증감율
29세 이하	10,994	10,720	-2.5
30대	32,638	35,467	8.7
40대	46,967	48,686	3.7
50대	49,345	50,903	3.2
60세 이상	42,026	42,701	1.6
전체	43,191	44,543	3.1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의 평균 부채는 신용대출, 신용카드 및 기타대출의 높은 증가세로 인해 2019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56만원이며, 이중 담보대출이 4,743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57.4%를 차지**

■ **부채 유형별로 2019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및 기타대출(13.5%)과 신용대출(10.5%)이 가장 많이 증가**

[그림 3] 부채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단위: 만원)

주: 가구의 부채금액은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대비 가구주 연령대별 보유부채 증감율을 비교해본 결과 30대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부채는 30대가 13.1%, 29세 이하가 8.8%, 50대가 6.4%, 40대가 6.0% 순으로 증가**

- 30대는 2019년 대비 자산과 부채보유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 부채를 활용한 주택 구입 증가로 인한 것일 가능성[1)]

[표 2]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액

(단위: 만원,%)

연령대	2019년	2020년	증감율
29세 이하	3,197	3,479	8.8
30대	8,915	10,082	13.1
40대	10,689	11,327	6.0
50대	9,321	9,915	6.4
60세 이상	5,222	5,279	1.1
전체	7,910	8,256	4.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신용조회회사인 NICE로부터 제공받은 100만명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3/4분기말 409.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7.0%)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는 청년층의 전월세 및 주택매입 수요 증가, 주식투자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금융안정보고서 2020년 12월호)

가계 자산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데 비해, 가계 부채는 4.4% 증가하여 부채가 자산 증가속도를 상회함으로써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 **가계재무건전성은 부채를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2020년 3월말 기준 전체 가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8.5%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9.3%로 전년대비 6.2%p가 상승함

2. 부채 보유 가구의 특징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납부기일이 경과한 경우'와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으로써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납부기일이 경과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2019년 9.4%에서 2020년 10.7%로 1.3%p 증가함**

■ **납부기일을 경과한 이유로 소득감소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융통 차질이 23.6%,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 상승이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감소로 인해 납부기일 경과한 가구의 비중은 2019년 27.4%에서 2020년 33.1%로 5.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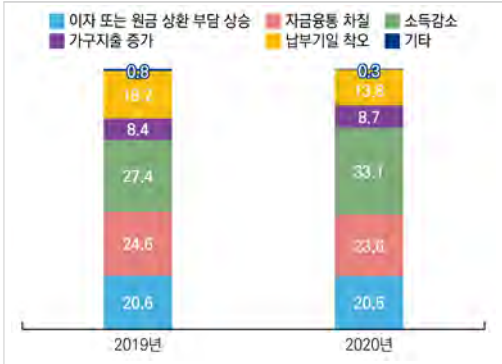
[그림 4] 납부기일 경과 여부

(단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5] 납부기일 경과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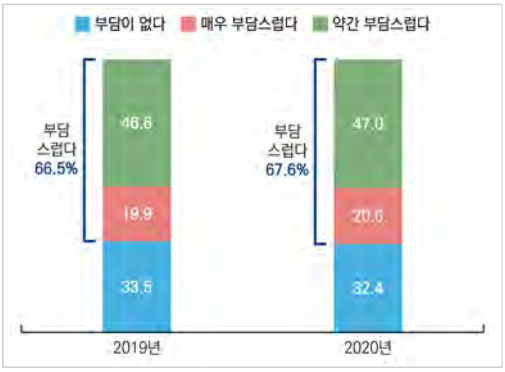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와 '기한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전년보다 증가하여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19년 66.5%에서 2020년 67.6%로 1.1%p 증가
-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2019년 6.2%에서 2020년 6.7%로 0.5%p 증가한 반면,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19년 75.7%에서 2020년 73.4%로 2.4%p 감소하여 가구의 부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임

[그림 6] 원리금상환이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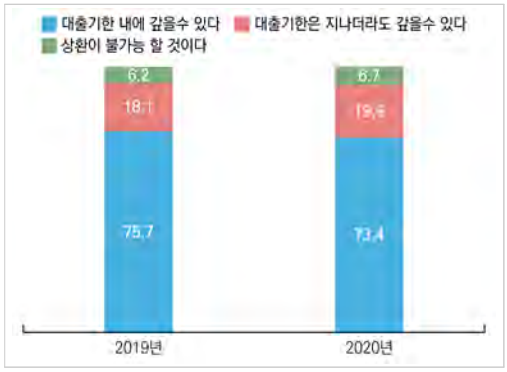
(단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7] 보유부채 상환가능성

(단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3월말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부채증가율(4.4%)이 자산증가율(3.1%)을 상회하고 있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악화됨

■ **특히 가구주의 연령대가 30대인 가구의 부채증가율은 13.1%로 자산증가율 8.7%을 크게 상회함**

- 저금리 상황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 증가세에 따른 부채를 활용한 주택구매가 크게 늘었던 것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 등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존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는 2020년 3월말의 수치로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가계재무상황은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음

■ **2020년 9월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68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여 2019년 12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임**

- 가계부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9년 4분기 4.1%, 2020년 1분기 4.6%, 2분기 5.2%, 3분기 7.0%임

〈BOX1〉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요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생활수준 정도,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금융·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012년부터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조사함
  -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지출 등과 같이 민감한 조사항목에 대한 가구의 응답거부나 과소·과대 응답 등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국세청·보건복지부·각 연금공단 등)를 활용하여 보완함.
  - 2020년 조사는 3월 31일~4월 14일에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으며, 자산과 부채는 3월 31일자 기준, 소득 및 지출은 1년간의 자료를 조사하여 12월 17일에 발표

■ **조사된 자료는 가계의 소득분배지표, 기준 중위소득 결정 등에 활용**

- 소득분배 공식지표는 과거 가계동향조사 자료였으나 2018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
-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도 기존에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였으나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됨.
  -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함.

Ⅳ. 바이오의약품 산업[1]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김미애** 경제분석관(6788-4676)

1.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서,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2]

■ **바이오의약품 부문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3]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효과[4]가 크기 때문임**

-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수명의 연장 노력과 함께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3.3%의 성장률로 확대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시장과 유전체 시장 또한 연평균 16.5%와 10.6%의 고성장을 지속[5]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9년 29%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30%(2,870억 달러)로 추정됨

■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 시장규모가 5,050억 달러, 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1)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산업의 한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하는데 본 고에서는 바이오기술(Biotech)와 결합된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한정하여 산업현황을 분석하였다.
2) 의약품은 제조방식에 따라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율(국내)은 2018년 61.0%로 제조업 평균 35.9%의 1.7배 수준이다.(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및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 참조)
4) 국내 의약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6.25로, 제조업 평균 4.81을 크게 상회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19 제약산업 DATABOOK」, 2019.12)
5)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2020)

[그림 1]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전망

주: *표는 전망치

자료: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

2. 바이오의약품 산업 글로벌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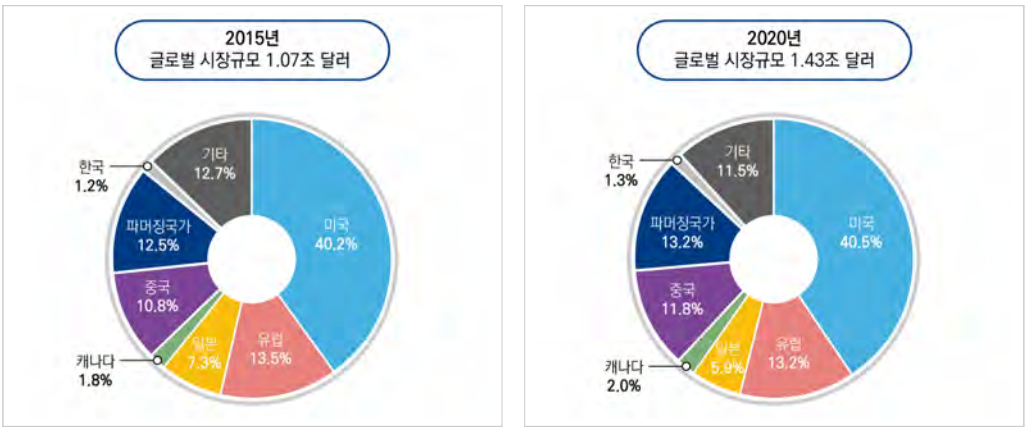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시장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중국을 포함한 4개 시장이 전체의 75%를 차지

- 미국은 대규모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1946년~1964년생)의 은퇴를 시작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대비 약가가 높고,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

- 유럽 국가 중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는 시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고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글로벌제약사의 유럽진출에 있어 디딤돌 역할을 함

- 일본, 중국에서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유전자 치료 또는 항암, 희귀질환 치료에 쓰이는 고부가가치의 바이오의약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

[그림 2]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국가별 비중



주: '파머징국가'는 기존의 제약업계가 주목했던 선진국 시장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브릭스 국가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지칭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바이오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향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시밀러[6] 부문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신약 부문은 2018~2023년 동안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특허와 관련 기업들 간의 활발한 M&A가 동기간동안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부문도 2017년 97억 달러에서 2023년 48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6.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바이오신약의 특허 만료로 인해 성장이 촉진되는 특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것임

3.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투자 및 M&A 현황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R&D와 M&A에 집중 투자

6) 의약품은 크게 신약과 복제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바이오신약은 전통적 화합물 합성 방식이 아닌 DNA 재조합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의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신약을 의미하며,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신약을 복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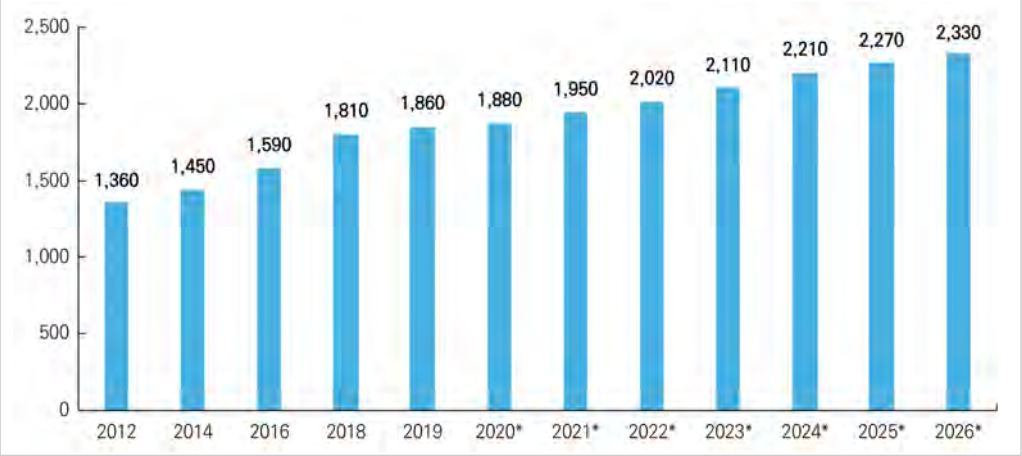
■ **글로벌 TOP 10 제약기업의 R&D 투자 지출액은 2012년 1,360억 달러에서 2019년 1,860억 달러로 크게 증가[7)]**

- 향후 바이오의약품 분야 R&D 지출 예상액은 연평균 3.2%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6년 2,3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바이오의약품 매출의 16~23%에 해당하는 규모

■ **글로벌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기업들도 제약기업 M&A와 관련 R&D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8)]는 점에서 향후 성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R&D 투자 지출액

(단위: 억 달러)



주: *표는 전망치
자료: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2020)

기업차원의 R&D 투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력 신산업으로 주목하여 R&D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

■ **R&D투자 및 관련 기업 인센티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내 기업 성장 촉진 도모**

■ **민관학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연구에서 제품생산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

-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NIH)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9)]을 확대하고, R&D 인재 확보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에 연간 2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배정

7)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0, Outlook to 2026"(2020)
8) 삼정KPMG, "M&A로 본 제약·바이오 산업", *Samjung Insight* Vol.65(2019)
9) 대학의 R&D활동에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20%의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30%의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 일본도 정부기관 주도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립보건원을 벤치마킹한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여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10)]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략적 M&A가 주목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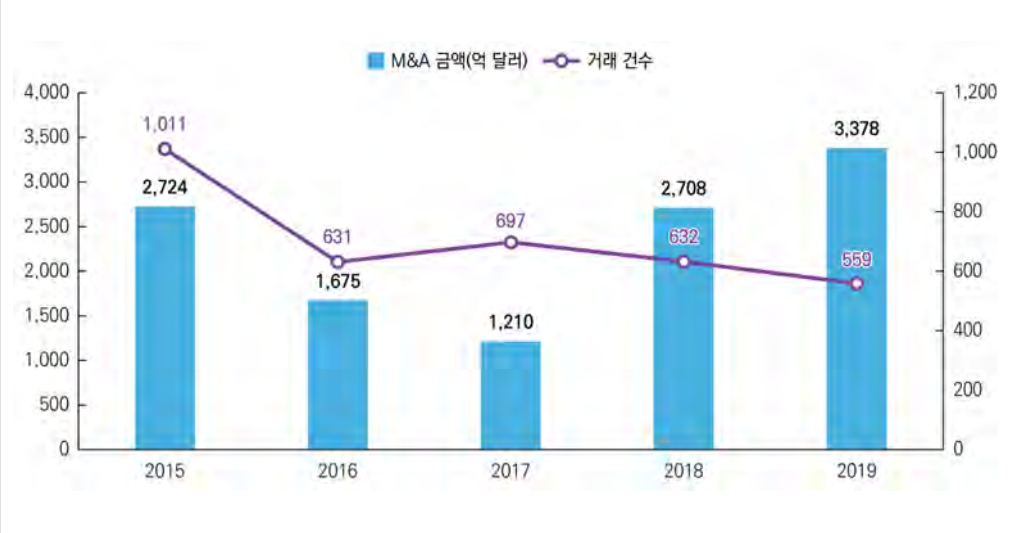
■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신약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매출대비 R&D 투자 비중을 계속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 임상이나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대규모 자본이 부족한 스타스업이나 벤처를 인수하는 전략으로 기술확보**

- 2019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M&A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

■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신약 제조라인 구축을 위한 M&A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타 산업의 기업 또한 대규모 자본을 이용하여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는 바이오헬스 및 의약품 시장에서 후보물질 발굴이나 초기임상 단계의 기술과 아이디어의 거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시장의 빠른 변화와 성장이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임

[그림 4]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M&A 추이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 글로벌 제약 M&A 동향 및 주요 사례"에서 재인용

10) 일본 내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들이 R&D 자금조달과 인재확보,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한다.

4.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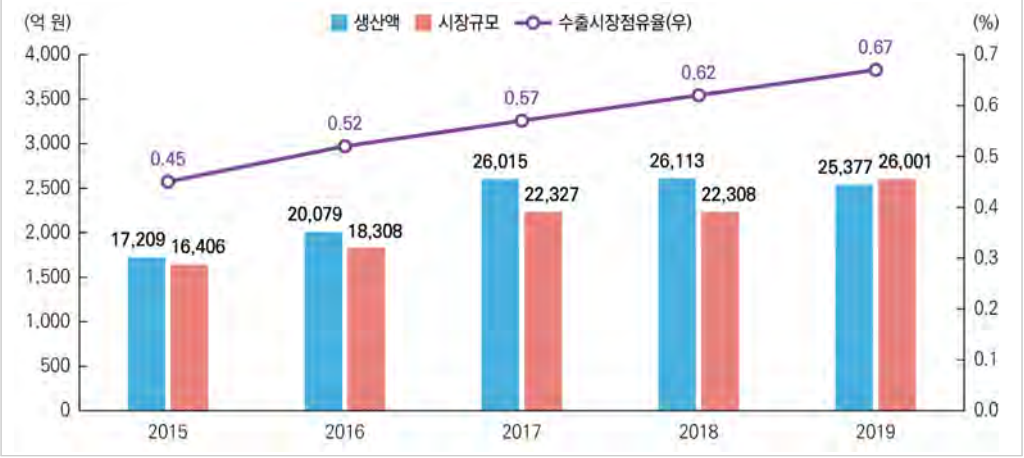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최근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양적·질적 수출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11)]

■ **2015년~2019년 동안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생산액과 시장규모는 각각 연평균성장률 6%, 8%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

- 수출액도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5.7%의 매우 가파른 성장세

■ **무역특화지수[12)]가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수입특화 상태이고, 기술무역수지[13)]도 적자 심화**

[그림 5]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생산, 시장규모 및 수출시장점유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0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에서 재인용

국내 의약품 부문의 글로벌 수출시장점유율은 최근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2019년 기준 0.67%로 매우 낮음

■ **글로벌의약품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제약사들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수출시장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기업의 인지도는 낮은 편**

11)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2020.12.) 참조
12)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상품의 총수출액-총수입액)÷(총수출액+총수입액)'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3) 해당 산업의 기술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서 기술수출액에서 기술도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의약품 중에서도 신생 분야인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 및 판매승인까지 국가별로 고도의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장진입 장벽이 매우 높음

-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제적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 또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었으나,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정부의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표적항암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연구개발 지원, 민간 벤처투자자 공동 '연계형 연구개발 제도' 도입 예정

■ 바이오분야 핵심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과,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개발(R&D) 규정 표준안 수립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5. 시사점

직접적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수요전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전략의 다양화 필요

■ 향후 3대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희귀의약품의 높은 부가가치, 항암제와 관련된 종양학의 발전과 유전자치료의 확대 가능성을 이해하고 R&D와 M&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글로벌제약사들의 M&A동향을 분석해 보면,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의약품 생산에 핵심이 되는 기술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망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

■ 후발주자인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에서도 스타트업 또는 초기 벤처 단계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신약개발에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벤처투자의 회수(exit) 전략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

국가별로 규제가 엄격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대규모의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필요

■ **선진국 시장은 신약 개발, 제조 및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고도의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장진입 장벽이 높음[14)]**

- 기존제품에 대한 규제조치에 대비하고, 환경오염문제 등을 이유로 강화되는 규제[15)]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
- 이와 더불어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각국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등 '글로벌 현지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

■ **정부차원에서는 미국의 NIH, 일본의 AMED 사례를 참조하여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

- R&D 투자와 첨단 기술의 선점, 신약의 임상과 허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법규제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14) 예를 들어, 미국 제약 시장 진출에 있어 FDA 허가는 필수적인데 FDA의 신약 허가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시간 및 비용 효율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5) 이탈리아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화학합성 고분자에 대한 판매규제 및 세금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PART 3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Ⅰ.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110

I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조은영** 경제분석관(6788-4680)

최근 금리인하가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경제여건과 파급경로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필요

- 금융당국은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9년 6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에서 0.5%로 1.25%p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 금리변동은 금리·자산가격·신용·환율 등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나 경제여건에 따라 파급경로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본 분석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대상으로 금리변동이 직간접적 파급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금리변동이 금리경로와 주택가격을 매개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부터는 주가를 매개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침

-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전기 콜금리가 1%p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민간소비는 0.32%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기 콜금리와 실질주택가격의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가 상승이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간 저금리의 지속과 자본시장 개방도의 증가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주가 1%의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0.016%에서 0.044%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된 반면 금리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및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금융당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대출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 금리변동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만한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임

1. 금리 추이와 파급경로

금융당국은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9년 6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9년 6월 1.75%에서 1.50%로, 11월 1.25%로, 2020년 3월 0.75%로, 5월 0.5%로 인하**

■ **이와 더불어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금융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장단기 채권금리와 예금은행 여수신 금리 등이 변동**

- 국고채(3년물) 금리는 2019년 6월 1.496%에서 2020년 12월 0.970%로 0.526%p 하락하였고, 국고채(10년물) 금리는 동기간 1.618%에서 12월 1.675%로 0.057%p 상승
- 회사채(3년물, AA-) 금리는 동 기간 2.004%에서 2.211%로 0.207%p 상승
-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 저축)는 2019년 6월 1.79%에서 2020년 11월 0.80%로 0.99%p, 여신금리(대출 평균)은 3.49%에서 2.71%로 0.78%p 하락

[그림 1]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금리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리변동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금리경로) 기준금리의 인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는 반면 예금의 수신이자율을 낮춰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 유동성을 늘려 주식·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게 됨**

■ **(환율경로)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춰 외국인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수입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여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다만, 금리인하로 인해 금융자산인 국내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어 환율경로에 의한 영향은 기대와 다를 수 있음

■ **(신용경로) 신용경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출금리의 변동과 이로 인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경우로 은행대출경로와 기업대차대조표경로로 구분[1)]**

- 은행대출경로의 경우, 금리변동이 은행의 대출공급능력을 변화시켜 은행대출을 받는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미침
- 기업대차대조표경로의 경우, 기준금리 변동이 담보의 근원인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은행대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바꿔 대출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2)]

[표 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파급경로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	
통화정책	가격경로	금리경로		단기시장금리 → 장기시장금리, 은행여수신금리	소비, 투자	총수요, 생산, 물가, 경상수지
		자산가격경로	q 이론	주가 → q[1)]	투자	
			富의 효과	주가, 부동산 가격 → 개인의 富	소비	
		환율경로		금리 → 환율	수출입, 소비	
	수량경로	신용경로	은행대출경로	은행대출여력	소비, 투자	
			광의의 신용경로 (대차대조표경로)	대차대조표 → 리스크 프리미엄 (기업재무상황)	소비, 투자	

주: 1) 토빈q = 기업의 시장가치/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
자료: 한국은행,「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1.12.

1) 이항용·조동철·김장렬·조성훈,「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18~23쪽.
2) 예를 들면, 금리 변동으로 차입자의 현금흐름과 이윤, 순자산 등이 증감하면 외부자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변화하여 최초의 충격이 보다 확대되고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됨. 이러한 현상을 금융가속도현상(financail accelerator) 또는 신용승수효과(credit multiplier effect)라고 함

그러나 금리변동이 특정한 여건 하에서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총수요가 기대만큼 증대되지 못할 수 있음[3]**

- **부채가 많은 차입자의 경우 금리인하로 대출이자가 감소하더라도 소비보다 원금상환(디레버리징)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4]**

이에 본 분석에서는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거시적으로 파급 정도와 반응시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파급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가 다수**
  - 예를 들면, 이항용 외(2005)[5]는 VAR 모형을 통해 금리변동이 산업생산, 인플레이션,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정도와 반응시점을 분석하는데 초점
  - 하성근(2015)[6]은 미시데이터를 통해 기준금리 변동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자산과 소득분위별로 분석

- **상기 연구들은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급경로별로 비교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2.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분석방법 및 자료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 처분가능소득, 주택 및 주가 등 자산가격, 대출규모, 인구 고령화 정도 등임

3) 이승석,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한국경제연구원,「KERI Brief」, 2019.10, 7쪽.
4) 송상윤, "The Cash-Flow Channel of Monetary Policy: Evidence from Mortgage Borrowers,"「한국은행 경제연구」, 제2019-20호, 2019.7.
5) 이항용·조동철·김장렬·조성훈,「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23~32쪽.
6) 하성근,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부(Wealth)의 효과를 중심으로,"「경제학연구」 제64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16.

■ 처분가능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및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이 클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민간소비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7][8]

■ 이에 반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고령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민간소비 증대 효과가 작을 것으로 추정[9]

모형의 종속변수로 국민계정의 실질민간소비를, 설명변수로 실질처분가능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전기 콜금리, 계절더미변수(S2, S3, S4), 2008년 4분기 더미(D2008q4)로 설정

■ 분석 자료는 2000년 1/4분기부터 2019년 4/4분기 원자료를 사용

[표 2] 기초통계량

(단위: 십억원,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실질민간소비	177,374	27,838	124,556	228,507	80
실질처분가능소득	322,769	65,704	197,357	442,343	80
실질주택가격매매지수	0.89	0.06	0.72	0.96	80
주가	1,556	589	509	2,489	80
콜금리	3.07	1.30	1.23	5.38	80

■ 실질처분가능소득는 실질국민총소득에서 실질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값으로 설정

- 실질비소비지출은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에서 이전지출을 제외한 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 산출

■ 실질주택가격은 주택가격매매지수를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나눈 값으로 설정[10]

■ 환율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포함시키지 않음

■ 변수들은 콜금리를 제외하고 로그를 취하였으며 대체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이태리·송인호("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주택연구」제23권 3호, 한국주택학회, 2015)에 따르면, 금리가 낮을수록 기대주택가격을 높이고 현재의 순자산을 증가시켜 주택수요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가격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하여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봄

8) 송태정("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2007. 11.)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주택과 주식 등 가계의 보유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효과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9) 박기백("소비 성향 변화의 분해," 「경제학연구」제65권 1호, 한국경제학회, 2017)에 따르면, 2006~2014년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가 전체 소비성향 하락의 77.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10)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할 경우 실질주택가격의 t 통계량이 유의수준 이하로 감소

[표 3] 단위근 검정 결과

	ADF 검정			PP 검정		
	상수	상수 및 시간추세	미포함	상수	상수 및 시간추세	미포함
실질민간소비	-0.775 (0.820)	-4.083 (0.010)	3.110 (1.000)	-0.172 (0.937)	-5.053 (0.000)	7.829 (1.000)
실질처분가능소득	-2.146 (0.228)	-1.472 (0.830)	2.635 (0.998)	-0.779 (0.819)	-11.661 (0.000)	4.452 (1.000)
실질주택가격매매지수	-2.456 (0.130)	-2.571 (0.295)	1.723 (0.979)	-2.272 (0.184)	-2.378 (0.388)	1.227 (0.943)
주가	-0.948 (0.768)	-3.388 (0.060)	0.655 (0.856)	-1.038 (0.736)	-2.946 (0.154)	0.534 (0.829)
콜금리	-1.329 (0.612)	-3.923 (0.015)	-1.395 (0.151)	-1.356 (0.600)	-2.813 (0.197)	-1.400 (0.149)

주: ( )는 p-value임

■ **단위근이 있는 변수들 간 공적분 관계를 검정한 결과, Trace 통계량과 Max-Eigen 통계량에서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과 같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설정**

(장기 행태식)

$$\begin{aligned}\log(\text{실질민간소비}_t) = {} & \beta_0 + \beta_1 \log(\text{실질처분가능소득}_t) + \beta_2 \log(\text{실질주택가격}_t) \\ & + \beta_3 \log(\text{주가}_t) + \beta_4 \text{콜금리}_{t-1} \\ & + \beta_5 S2 + \beta_6 S3 + \beta_7 S4 + \epsilon_t\end{aligned}$$

(단기 행태식)

$$\begin{aligned}dlog(\text{실질민간소비}_t) = {} & \beta_0 + \beta_1 dlog(\text{실질처분가능소득}_t) + \beta_2 dlog(\text{실질주택가격}_t) \\ & + \beta_3 dlog(\text{주가}_t) + \beta_4 d(\text{콜금리}_{t-1}) + \beta_5 ECR_{t-1} \\ & + \beta_6 S2 + \beta_7 S3 + \beta_8 S4 + \epsilon_t\end{aligned}$$

나. 분석결과

민간소비에 대한 장기행태식을 분석한 결과, 전기간 동안 실질가처분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의 변동이 민간소비의 증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기 콜금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실질가처분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의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4] 민간소비에 대한 장기행태식 추정 결과

종속변수: log(실질민간소비)	모형 1 (2000Q2 ~ 2009Q2)		모형 2 (2009Q3 ~ 2019Q4)		모형 3 (2000Q2 ~ 2019Q4)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상수항	6.145***	0.779	3.883***	0.396	4.196***	0.434
log(실질처분가능소득)	0.441***	0.066	0.612***	0.037	0.604***	0.038
log(실질주택가격지수)	0.306***	0.085	0.364**	0.135	0.117*	0.061
log(주가)	0.040**	0.017	0.057**	0.023	0.028**	0.013
콜금리(-1)	0.007	0.005	-0.004	0.003	-0.004	0.003
No. of Obs.	38		42		80	
adj R^2	0.958		0.983		0.984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추정계수값이 유의함을 나타냄

단기행태식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전기 콜금리와 주택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전기 콜금리 1%p의 하락이 민간소비를 0.008% 증가시키는 반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주택가격지수 1%의 상승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민간소비를 0.3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0.065%로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주가 1%의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0.016%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0.044%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5] 민간소비에 대한 단기행태식 추정 결과

종속변수: dlog(실질민간소비)	모형 1 (2000Q2 ~ 2009Q2)		모형 2 (2009Q3 ~ 2019Q4)		모형 3 (2000Q2 ~ 2019Q4)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상수항	0.007**	0.003	-0.002	0.002	0.001	0.002
dlog(실질처분가능소득)	0.161**	0.067	0.123**	0.054	0.117**	0.049
dlog(실질주택가격지수)	0.320***	0.097	0.065	0.149	0.291***	0.084
dlog(주가)	0.016	0.014	0.044***	0.016	0.032**	0.012
d(콜금리(-1))	-0.008*	0.004	0.003	0.005	-0.007*	0.004
오차항(-1)	-0.139	0.107	-0.432***	0.116	-0.176**	0.067
더미(2008q4)	-0.035***	0.012				
No. of Obs.	37		41		79	
adj R^2	0.853		0.963		0.842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추정계수값이 유의함을 나타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리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은 시중 유동성의 증가와 자본유출입 등 해외경제변수의 영향에 따른 장단기금리의 연계성 감소 등에 기인[11)]

■ **금리경로 이론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명목금리와 장기명목금리를 단계적으로 하락시키고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실질금리를 하락시키면서 소비와 저축 간에 대체효과를 초래하게 됨**

- 2009년 3분기를 전후로 금리 간 인과관계를 검정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기준금리와 단기금리인 콜금리의 연계성은 증가한 반면 콜금리와 장기금리인 국고채(1년물) 금리와의 연계성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6] 금리 간 인과관계 검정

귀무가설	2000년 2월 ~ 2009년 6월	2009년 7월 ~ 2019년 12월
기준금리 ⇏ 콜금리	18.581***	20.229***
콜금리 ⇏ 국고채(1년물) 금리	7.682***	0.620
콜금리 ⇏ 국고채(3년물) 금리	0.886	0.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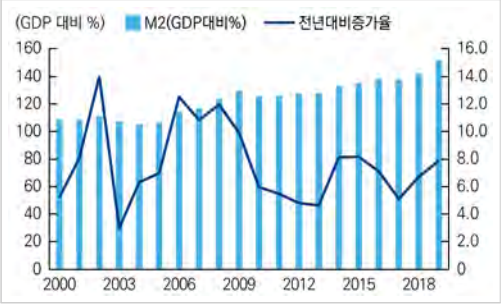
주: SC 기준으로 적정 lag 수준은 2 lag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장단기금리 간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동성 확대를 들 수 있음**

-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장기간 저금리 지속, 기업의 투자 부진,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유동성(M2, 평잔)은 2000년 108.7%에서 2019년 151.8%로 증가[12)]
- 과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시점을 살펴보면, 부동산가격 상승(2002년),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및 부동산가격 상승(2005~2006년)[13)],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한은의 자금공급과 재정지출 확대(2008년), 부동산 금융관련 규제 완화 및 경상수지 흑자(2014년),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공급 확대(2018~2019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장기금리에 지불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단기금리에서 장기금리로의 파급효과가 약화됨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장단기 금리차를 비교해 보면, 기준금리가 3.25%로 동일했던 2004년 11월 ~ 2005년 9월과 2011년 6월~2012년 6월의 평균 장단기 금리차가 각각 0.63%, 0.23%로 차이를 보임

11) 강명헌, "금리중시 통화정책이 유효성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2014. 6.
12) 참고로 M1(협의통화, 평잔)의 경우 2000년 GDP 대비 29.1%에서 2019년 48.3%로, Lf(금융기관 유동성, 평잔)은 145.3%에서 214.8%로 증가
13) 신용상, "최근 유동성 동향과 정책대응 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제16권 8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그림 3] M2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장단기 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 간 연계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추정됨14)15)**

- 금융당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해외 자본이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장기국채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16)
- 국고채 상장 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은 2006년 2.0%(4.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글로벌 유동성 증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 수준,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2019년에는 16.1%(98.3조원)로 증가17)
- 한국과 미국의 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단기금리의 경우 국가별 경제 및 정책 여건의 차이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비동조화가 나타나면서 상관계수가 0.48에서 -0.50으로 감소한 반면, 장기금리는 상관관계가 0.53에서 0.65로 증가

[그림 5] 장단기 금리차와 외국인 국채보유 비중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한국과 미국의 금리간 상관계수

주: 단기금리는 콜금리와 미연방 기준금리를, 장기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14) 한국은행, "최근 수익률곡선 변화의 특징 및 전망,"「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3. 10. 82쪽.
15) 김경훈 외,「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16)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한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이후 일부 신흥국 채권시장에 선진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장단기 금리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
17) 기획재정부,「국채 2019」, 2020, 18쪽.

금리변동은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을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해당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18)]

- **실증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실질주택가격지수가 1% 상승하면 민간소비는 0.32%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0.065%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리변동은 금융 및 실물자산의 수익 및 가격 변동을 통해 나타나는 경로와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통해 나타나는 경로로 구분되며, 어느 경로가 우세한지에 따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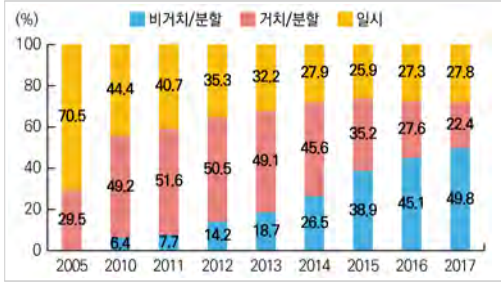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보유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층(중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19)]**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방식이 변경되면서 금리변동이 민간소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됨[20)]**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계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는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원금분할상환을 확대해 왔음
  - 가계대출은 2005년 GDP 대비 53.8%(515조원)에서 2011년까지 GDP 대비 62.0%(861조원)으로 연평균 9.0% 증가[21)]
  - 전체 가계대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거치분할 방식이 2011년 7.7%에서 2017년 49.8%로 증가[22)]

[그림 7] 가계신용 및 금리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8]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별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18) 금리하락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해 부(富)의 효과를 가져와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주택가격은 LTV, DTI 등 부동산정책, 주거별 비중, 주택수급, 기대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 국내외 정책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김남현·장한익,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주택금융연구」제2호, 주택금융연구원, 2018)

19) 하성근,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부(Wealth)의 효과를 중심으로,"「경제학연구」 제64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16.

20) 김도완·양시환·이상협("소비습관 변화와 시사점,"「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18)에 따르면, VAR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Q1~2016Q4)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부담 경로가 서비스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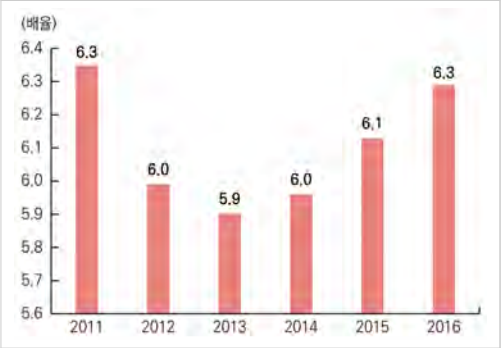
21) 가계대출은 2011년 GDP 대비 62.0%(861조원)에서 2019년 GDP 대비 78.4%(1,505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

22) 김진성, "가계 주거비용 현황 및 주요국 비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FOCUS ISSUE」, 2018.11, 19~23쪽.

- 이에 따라 가계의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14.1%에서 2015년 21.9%로 증가[23)]
- 이에 반해 자산가격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상소득 대비 순자산의 배율은 2011년 6.3배에서 2013년 5.9배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 6.3배로 다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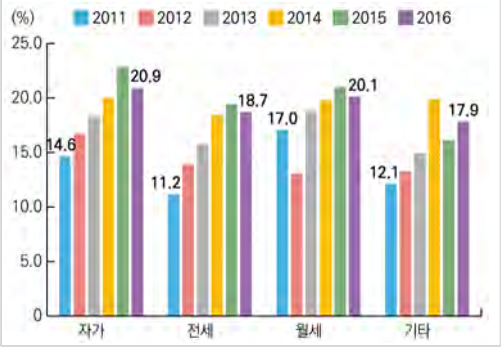
[그림 9] 가계의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그림 10] 가계의 경상소득 대비 순자산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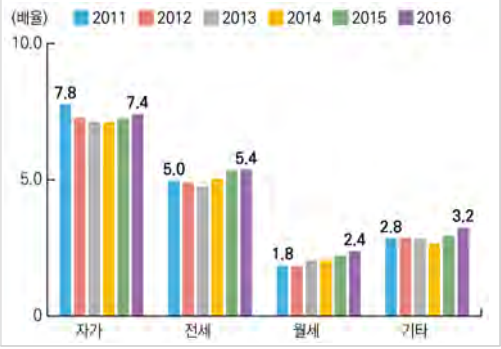
- 입주형태별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세가구의 경우 2011년 11.2%에서 2016년 18.7%로 7.5%p로 증가하여, 자가(6.3%p), 월세(3.1%p), 기타(5.8%p)에 비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24)]
- 입주형태별로 경상소득 대비 순자산 배율을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구의 순자산이 2011년 5.0배에서 2016년 5.4배, 월세가구가 1.8배에서 2.4배, 기타가구가 2.8배에서 3.2배로 증가한 반면, 자가가구의 경우 7.8배에서 7.4배로 감소

[그림 11] 가계의 입주형태별 경상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12] 가계의 입주형태별 경상소득 대비 순자산 배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2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 ~ 2019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7~2019년 자료의 경우 산정방식이 다소 변경됨에 따라 이전 시계열과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24) 김천구("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경제주평」14-30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 가계소비가 각각 0.13% 증가하는 반면,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이 1% 상승할 때 가계소비가 0.30%, 0.1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3. 요약 및 시사점

금리변동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금리경로와 주택가격을 매개로 자산가격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전기 콜금리 1%p 하락이 민간소비를 0.008%, 실질주택가격지수 1%의 상승이 민간소비를 0.32% 증가시킴**

- 이에 반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기 콜금리와 실질주택가격지수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것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장기간 저금리의 지속과 자본시장 개방도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성의 팽창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가를 매개로 한 자산가격 경로의 영향은 커짐**

- 주가 1%의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0.016%에서 0.044%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리변동이 금리경로, 주택가격을 매개로 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금리변동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반면 금리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및 주식 시장으로 집중되면서[25)26)]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우려[27)]가 커지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28)]

■ **금융당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대출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 **금리변동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 보임[29)]**

---

25)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평균이 2019년 6월 98.5에서 2020년 11월 134.9로 증가하였고, 2020년 10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102.2만건으로 전년동기(59.4만건) 대비 72.0%, 5년 평균(80.0만건) 대비 27.8% 증가

26) 코로나 확산 이후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은 2021년 말 기준 65.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9.2% 증가

27) 홍준표, "2021년 국내 경제 이슈,"「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8~9쪽.

28) 강명헌, "금리중시 통화정책이 유효성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2014. 6, 23~25쪽.

29)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 사전적 방향제시, 신용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현황과 과제"(장민,「KIF VIP 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2020) 등을 참고하기 바람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1월호 | 통권 제13호

발행일 2021년 1월 2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희망한 미래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